

어업인 복지실태조사 연구

A Study on the Welfare of Fishermen

윤영준 · 이상규 · 이채완 · 고지영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저자

윤영준, 이상규, 이채완, 고지영

내부연구진

연구책임자

윤영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촌연구부

전문연구원

공동연구원

이상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촌연구부

전문연구원

공동연구원

이채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촌연구부

전문연구원

공동연구원

고지영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촌연구부

연구원

연구기간

2022.5.24. ~ 2023.1.31.

보고서 집필내역

연구책임자

윤영준

연구총괄, 제1장, 제5장, 제6장

내부연구진

이상규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이채완

제3장, 제4장

고지영

제1장, 제2장

발간사

농어촌지역의 지속적인 쇠퇴와 인구 유출로 인한 지역소멸위험은 국가적인 이슈로 발전하여 최근 이를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계획 및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지역소멸위험이 가장 큰 어촌의 경우, 다양한 정책지원에서 제외되어 생활 및 복지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어촌의 지역소멸 가속화는 농촌 지역과 비교하여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어촌지역의 정책적 소외는 기존의 사업방식이 어촌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농촌 중심으로 정책설계 및 방향을 설정하는 데서 기인한다.

그 예로 농어촌지역의 삶의 질 여건을 향상시키고 도시와 격차를 줄이기 위해 2005부터 추진하고 있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은 현재 제4차(20~24년) 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어촌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체계와 정책을 발굴하고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사업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삶의 질 정책사업으로 추진되는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가 어촌의 실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국정감사의 지적도 같은 맥락에 있다.

따라서 어촌의 삶의 질 여건을 반영한 정책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주여건, 의료, 보건, 교육, 일자리 지원 등 어업인의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다양한 생활 및 복지서비스 현황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는 실태조사체계가 필요하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현장 맞춤형 정책지원사업을 발굴 및 추진함으로써 실질적인 어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다양한 정책자료, 어업인 복지실태조사, 사례분석, 현장 인터뷰 등을 통해 그동안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던 어촌의 삶의 질 실태를 세밀하게 파악 및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어업인의 삶의 질 실태 파악을 위한 복지실태조사를 처음으로 추진함으로써 향후 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방향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다. 어업인 복지실태조사는 기존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의 공통문항을 포함하고, 어촌특성을 반영한 문항을 재구성 및 추가함으로써 기존 조사체계와 차별성을 확보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요 부문별 정책과제 방향성 제시 및 대응과제를 발굴하고, 정책과제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한 사업 추진 기반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거버넌스 구축, 법률 개정, 민간 참여 확대, 스마트 기술을 통한 혁신 방안을 통해 다양한 관점과 새로운 방식의 접근법을 제시하여 미래 지향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방안을 통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어촌의 정책적 한계를 극복하고, 어촌 현장과 미래 세대의 수요를 반영한 정책 추진이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어촌의 삶의 질 개선으로 다양한 세대가 어촌에 돌아와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해 윤영준 전문연구원이 연구책임을 맡았으며 이상규 전문연구원, 이채완 전문연구원, 고지영 연구원이 연구진으로 참여하였다.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악한 여건의 어촌을 직접 방문하고, 수많은 자료를 검토하여 연구를 수행한 연구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하며, 연구의 마무리를 위해 지속적인 자문과 조언을 해주신 모든 자문위원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3년 3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 김 종 덕

목차

정책제안 _i

요약 _iii

Executive Summary _xi

01

서론 _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1
2. 연구목적	3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5
1. 연구내용	5
2. 연구방법	6
제3절 선행연구 검토	8
1. 국내 선행연구	8
2. 해외 선행연구	13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5

02

정부 및 민간 부문의 복지서비스 정책 현황 _17

제1절 부처별 복지 정책 현황	17
1. 주요 부처별 복지서비스 정책 현황	18
2. 농림축산식품부 복지지원 정책	22
3. 해양수산부 복지지원 정책	25
4. 부처별 삶의 질 관련 예산 비교	29
제2절 민간조직의 복지서비스 현황	33
1. 사회적기업	33
2. 사회적협동조합	35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37

03

어업인 복지실태조사 _39

제1절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 현황 및 한계	39
1.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39
2.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의 한계	43
제2절 어업인 복지실태 설문조사	46
1. 조사개요	46
2. 조사결과	50
제3절 섬어촌 현장실태조사	73
1. 조사개요	73
2. 조사결과	74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81

04

국내외 복지서비스 사례 _85

제1절 국내 사례	85
1. 전북 완주, 이랑 아동발달통합지원센터	85
2. 경기 부천시, 스마트 경로당	88
3. 경남 거창, 하성 단노을 생활문화센터	90
4. 충남 태안, 만수동 어촌계	92
제2절 국외 사례	95
1. 유럽, 스마트 빌리지	95
2. 영국, 금융서비스 지원사업	97
3. 일본, 지역포괄케어	100
4. 일본, 이바라키현 사카이마치 자율주행버스	102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104

05

어업인 복지서비스 개선 방안 _107

제1절 어업인 복지서비스 정책과제 발굴	107
1. 어업인 복지서비스 정책과제 도출 방향	107
2. 주요 부문별 대응과제 도출	110

제2절 어업인 복지서비스 추진기반 마련	116
1. 복지서비스 거버넌스 개편	116
2. (가칭) 어촌·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 제정	118
3. 복지서비스 공급조직 지원 확대	120
4.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124

06 결론 및 정책제언_127

제1절 결론	127
제2절 정책제언	132

참고문헌 _137

부록 _143

표 목차

〈표 1-1〉 복지서비스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	16
〈표 2-1〉 주요 부처별 삶의 질 관련 정책	20
〈표 2-2〉 농림축산식품부 삶의 질 관련 정책	24
〈표 2-3〉 해양수산부 삶의 질 관련 정책	28
〈표 2-4〉 부처별 삶의 질 정책 예산 비교	30
〈표 2-5〉 사회적기업 인증 현황(2021년 9월 기준)	33
〈표 2-6〉 사회적협동조합 현황(2021년 9월 기준)	35
〈표 3-1〉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 조사체계(제4차 기본계획)	40
〈표 3-2〉 조사설계 및 방법(2018년)	41
〈표 3-3〉 조사내용(2018년 기준)	41
〈표 3-4〉 지역별 유효표본 분포	48
〈표 3-5〉 설문조사 개요	48
〈표 3-6〉 어업인 복지실태 조사내용	49
〈표 3-7〉 어업인 복지실태 응답자 특성	51
〈표 3-8〉 섬어촌 현장조사	74
〈표 3-9〉 섬어촌 현장문제 도출	74
〈표 3-10〉 복지실태조사 요약 및 시사점	83
〈표 5-1〉 보건·복지 부문 정책과제 도출	111
〈표 5-2〉 교육·문화 부문 정책과제 도출	112
〈표 5-3〉 정주여건 부문 정책과제 도출	114
〈표 5-4〉 경제활동 부문 정책과제 도출	115
〈표 5-5〉 어촌·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 제정(안)	119
〈표 5-6〉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개선(안)	122
〈표 6-1〉 부문별 정책과제 발굴	130

그림 목차

〈그림 2-1〉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18
〈그림 3-1〉 어업인 복지실태조사 표본설계(안)	47
〈그림 3-2〉 어촌생활 만족도	52
〈그림 3-3〉 지역 발전 정도 인식	53
〈그림 3-4〉 의료기관 이용실태	54
〈그림 3-5〉 응급실 이용실태	55
〈그림 3-6〉 사회안전망 이용실태	55
〈그림 3-7〉 복지서비스 이용실태 및 만족도	56
〈그림 3-8〉 필요 복지서비스 현황	57
〈그림 3-9〉 어업인 사회안전망 제도 이용 현황	58
〈그림 3-10〉 어업인 소득·복지증진 제도 이용 현황	58
〈그림 3-11〉 평생교육 이용실태 및 만족도	59
〈그림 3-12〉 참여희망 평생교육 및 어려움	60
〈그림 3-13〉 자녀 교육 여건 및 개선사항	60
〈그림 3-14〉 주 여가활동 종류	61
〈그림 3-15〉 희망 여가활동	62
〈그림 3-16〉 거주환경	63
〈그림 3-17〉 주택 개보수 필요 사항	64
〈그림 3-18〉 어촌 쓰레기 처리	64
〈그림 3-19〉 환경문제 개선점 및 어촌의 가치	65
〈그림 3-20〉 기초생활 여건 및 안전 만족도	66
〈그림 3-21〉 개선해야 할 생활안전 문제	67
〈그림 3-22〉 마을사업 인식	67
〈그림 3-23〉 외지인 인식	68
〈그림 3-24〉 경제활동 경험 및 참여 의사, 만족도	69
〈그림 3-25〉 경제활동 참여 시 어려움 및 어촌투자 개선 부문	69
〈그림 3-26〉 가구소득 및 경영 관련 지출	70
〈그림 3-27〉 종사업종별 가구소득 및 경영 관련 지출	71
〈그림 3-28〉 어업 관련 경영상황	71
〈그림 3-29〉 어업 외 겸업 여부	72
〈그림 3-30〉 어업 외 직종형태 및 소득구조	72

〈그림 4-1〉 이랑협동조합	86
〈그림 4-2〉 스마트 경로당	88
〈그림 4-3〉 단노을 생활문화센터	90
〈그림 4-4〉 만수동 어촌계	92
〈그림 4-5〉 영국 스마트 복지서비스	96
〈그림 4-6〉 지역 스마트화 전달을 위한 세 가지 방향성의 연계	97
〈그림 4-7〉 농어촌 금융서비스 지원사업	99
〈그림 4-8〉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	100
〈그림 4-9〉 일본 이바라키현 자율주행버스	102
〈그림 4-10〉 이바라키현 자율주행버스 노선 확대	103
〈그림 5-1〉 중앙 중심의 하향식 복지서비스 추진체계	116
〈그림 5-2〉 지역 중심의 상향식 복지서비스 추진체계	117
〈그림 5-3〉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전달체계 혁신 사례	125
〈그림 5-4〉 정책대상 세분화에 따른 복지서비스 공급 방안	126
〈그림 6-1〉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개선과제(예시)	135
〈그림 6-2〉 단계별 개선과제 추진 방안	136

정책제안

■ 분석 내용 및 방법

1. **문헌조사:** 부처별 다양한 분야의 복지정책 및 민간 분야의 복지서비스 추진실태와 어촌 분야 복지정책의 한계점을 파악하였으며, 다양한 분야의 복지정책 및 서비스 사례조사·분석을 통해 어촌 복지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함
2. **어업인 복지실태조사:** 현재 추진되고 있는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 조사는 어촌의 실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어촌특성에 맞는 복지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 및 분석함으로써 농촌 등과 차별화된 개선 방안의 방향성을 제시함
3. **섬어촌 현장인터뷰:** 현장 중심의 과제 발굴을 위해 정책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섬어촌을 선정하여 삶의 질과 관련된 주요 부문에 대한 실태와 인식 수준, 정책 수요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개선 방안을 마련함
4. **전문가 회의:** 정책분석, 사례조사, 어업인 복지실태조사, 현장인터뷰 등의 결과를 바탕으로 발굴된 개선과제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 해양수산부 담당자 등과 논의를 통해 다양한 정책적 접근법을 제시함

■ 정책제안

1. **어업인·어촌 복지통계 구축:** 어업인의 복지실태 파악 및 분석을 위한 조사체계와 관련 통계 구축을 통해 어촌·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로드맵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어촌의 복지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함
2. **해양수산부의 주도적 정책계획 수립:** 정책대상의 다변화와 범위의 확장에 대응하고 정책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해양수산부 주도의 계획수립과 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이를 위해 관계 부처 간 협의 및 규제 제약 해소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의 다양한 접근 방안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3. **중앙과 지역의 소통 강화:** 다양한 어촌지역의 유형, 세대, 계층에 대한 현장밀착형 복지정책의 수요 확인, 관련 사업추진체계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중앙 부처와 지역 간 소통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정책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함
4. **생애주기별 복지체계 구축:**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은 일부 세대 또는 단편적인 대상의 정책 추진으로 해결될 수 없으므로 복지서비스 체계를 주요 연령대·성별로 세분화시켜 추진함으로써 전 생애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고 제도적 소외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함
5. **단계별 복지정책사업 추진:** 연구를 통해 발굴된 과제들은 사업목적, 정책대상, 내용 등의 다양한 정책 여건과 환경에 따라 사업의 추진 일정 및 계획에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단계적인 추진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다양한 사업을 단계별로 분류하고 장기적인 로드맵을 통해 추진함으로써 정책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요 약

어업인 복지실태조사 연구

윤영준 · 이상규 · 이채완 · 고지영

1. 연구목적

- 어촌은 국토 외곽지역에 위치하여 접근성 제약이 매우 크며 이로 인한 생활 및 복지서비스의 접근성 제약도 높아 주민들의 많은 불편을 야기하고 있음에도 일부 지역은 기본적인 생활서비스도 제공받지 못하여 사회적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 어촌의 복지 소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촌의 실태를 정밀하게 파악하고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정책 수립과 추진이 필요하나, 현재 이에 대한 실태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어촌·어업인을 위한 정책 추진에 한계를 보임
- 본 연구는 어촌의 생활 및 복지 여건과 이를 위한 정책 추진실태 파악 등을 바탕으로 복지서비스 개선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어촌의 복지실태 파악을 위한 새로운 조사, 자료, 분석을 통해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 및 복지지원 사업의

개선 방향과 어촌 현장 중심의 개선과제를 제시함으로써 어촌 주민에게 사각지대 없이 도달할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 본 연구는 어촌의 복지실태의 정밀한 진단과 분석을 통해 어촌·어업인을 위한 복지정책 방향성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개선과제와 추진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2장) 각 부처의 복지정책과 민간조직의 복지서비스 사업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해양수산부의 복지정책의 문제점과 한계를 분석함
- (3장) 어촌·어업인의 복지실태 파악을 위해 주요 부문별 세부적인 조사 문항을 바탕으로 설문조사를 추진함
 - 어촌 주민과 어업인이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복지 여건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고, 연령별, 성별, 입지유형별 특징에 따른 분석을 추진함
- (4장) 접근성의 제약이 많은 농어촌지역의 복지서비스 또는 정책사례를 분석함
 - 국내외 복지서비스 개선을 위한 주민, 지자체, 정부 등의 노력과 그 체계를 살펴보고, 어촌 복지서비스 개선을 위한 방향성과 거버넌스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함
- (5장) 앞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어촌의 복지서비스 개선을 위한 과제 발굴 및 사업 추진기반 구축 방안을 제시함

- 복지정책 개선을 위한 방향성을 바탕으로 정책 부문별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 기반을 위한 전략을 제시함
- (6장) 연구의 주요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도출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인 복지정책 개선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안함

2) 연구방법

- (문헌조사) 어촌 분야의 복지서비스 개선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복지정책, 서비스 등에 대한 실태 파악 및 방법론을 검토하기 위해 정책보고서, 관련 논문, 삶의 질 관련 보고서 및 연구 보고서를 활용함
- (설문조사) 현재 농촌진흥청에서 추진 중인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를 보완하고 어촌특성에 맞는 복지실태조사와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어업인 복지실태조사를 실시함
- 조사내용은 기존의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의 공통문항을 유지하되, 어촌 특화 문항을 추가하여 추진하였으며 1,009부의 유효표본을 확보함
- (섬어촌 현장조사) 어촌입지유형 중 가장 접근성의 제약이 큰 섬어촌의 현장조사를 통해 시급성과 심각성이 큰 현장의 문제를 진단함
- (전문가 자문) 어촌의 복지서비스 실태 파악을 통한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 및 해양수산부 담당자 등을 중심으로 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연구 결과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연구 결과

- (어업인 복지서비스 정책과제 발굴) 복지서비스 정책과제 발굴은 연구된 결과를 바탕으로 과제 발굴을 위한 방향성을 설정한 뒤, 주요 부문별 정책과제를 도출함
- (정책과제 도출 방향) 정책과제는 ① 현장의 수요 및 수용성 반영, ② 정책사업의 시급성, ③ 복지서비스 사각지대 발굴, ④ 정책대상의 세분화, ⑤ 부처별 정책연계 강화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과제를 도출함
- (정책과제 발굴) 주요 부문별 중점 분야와 그에 따른 세부 개선 분야를 선정 후 신규 또는 개선과제 도출

〈주요 부문별 정책과제 도출 및 내용〉

구분			문제점	정책과제 도출 및 내용
보건복지	의료	의료 서비스 질	• 의료진의 수준 • 필수 진료과목 부재 • 정기적인 건강검진 • 주민 예방접종의 어려움	• (개선) 어업안전보건센터 기능 확대 및 지원 - 어업안전보건센터 지정 확대(전국 시도) - 정기적인 방문검진(질병, 건강관리), 예방접종 추진 • (신규) 원격 의료서비스 제공 - 보건소, 지역병원과 연계한 원격의료서비스 제공
		응급 의료 서비스	• 응급상황 발생 시 처치 미흡 • 골든타임 미확보 • 해상응급수송수단 부재	• (신규) 응급선 건조 및 운영 추진 - 응급선을 섬에 배치하여 상황 발생 시 육지로 수송 - 소규모 어선(10톤 미만)을 활용하여 운영 추진
부문	보육·돌봄	영·유아 보육 지원	• 보육시설 부족(어린이집) • 보육용품·장비 지원 부족	• (신규) 마을공동체 보육시설 운영지원 - 마을 내 보육 시설지원 및 공동체 자체 운영을 통한 보육 여건 개선 • (신규) 찾아가는 놀이터 지원사업(책, 장난감 등) - 영·유아에게 필요한 책, 장난감 등을 직접 방문하여 임대
		고령인 돌봄 지원	• 고령인 생활관리 지원 미흡(사회복지사 방문 제약) • 사회성 회복지원(외로움 등)	• (개선) 사회복지사 양성 및 지원 확대 - 고령인 돌봄을 위한 사회복지사 양성 및 현장방문 지원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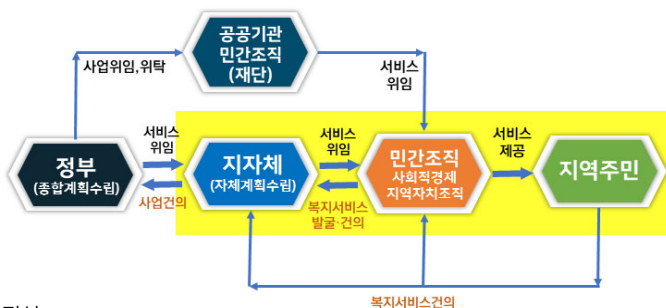
구분		문제점	정책과제 도출 및 내용	
민 화 부 민	어촌 자녀 교육	학교 교육	• (신규) 폐교활용 교육지원센터 설립 - 원격 교육시설 및 프로그램 제공 - 방과 후 활동을 위한 체육·교육 프로그램 지원	
		육지 진학 지원	• (신규) 기항지 섬 주민 안전센터 설립 - 기상악화 시 체류할 수 있는 편의·숙박시설 설립 - 학생지원을 위한 도서관, 영상교육실 등 제공 • (신규) 육지진학자녀 기숙사 설립 - 육지 학교(중·고등학교) 인근 기숙사 설립지원	
	문화 여가	청년 · 여성	• 청년세대 여가기회 부족 - 문화(영화, 공연 등) 및 레저 스포츠 참여기회 부족 • 가족 중심 문화·여가 공간 부족	• (신규) 어촌 작은 문화체험관 설립 - 유희부지 또는 건물을 활용하여 문화·여가활동이 가능한 시설 건축 - 프로그램은 운영·관리 기관에서 개발 및 적용
		다문화 가정	• 외국인주민의 한국문화 체험 기회 부족 • 같은 국가 출신 구성원끼리의 교류 부족	(세대별, 가족별 프로그램 개발) - 다문화가정을 위한 프로그램,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지역별 동포 네트워크 구축
		고령인	• 고령인 문화·여가시설 및 프로그램 부족 • 건강관리 프로그램 부족	• (신규) 어촌형 스마트 경로당 시스템 구축 - 온라인 시스템 구축을 통해 건강관리, 여가활동, 스포츠까지 다양한 문화·여가 체험기회 확보
	정 주 여 건 부 민	기초 생활 지원	생활 서비스	• 기초생활 서비스 부족 (생필품 구매, 행정·금융서비스 등)
정주 환경		주거 환경 개선	• 노후주택 증가로 인한 문제 발생(방풍·취약) • 난방 비용부담으로 보일러 가동 제약 발생	• (신규) 어촌 주민 주택 개선 및 거주지원사업 - 취약계층(저소득, 한부모가정 등)에 대한 주택 개선 비용 일부 지급 - 난방비에 대한 일부 비용지원
		해양 쓰레기 처리	• 쓰레기의 처리 미흡으로 소각, 폐기 등의 환경문제 발생 • 악취, 경관 등의 문제 발생 및 자녀교육에 악영향 발생	• (신규) 쓰레기 수거선 건조 및 지원(섬어촌) - 소규모 쓰레기 수거선(10톤 미만)을 건조하여 정기적으로 쓰레기 수거지원 - 분리수거가 가능한 수거선박 건조
교통 문제		해상 교통	• 선사의 수익성 문제로 인한 일일생활권 미확보 • 모도-자도 해상교통 연계 부족으로 어려움 발생	• (개선) 해상교통 완전공영제 추진 -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한 선사별 차등지원 방안 마련 • (신규) 모도-자도 해상버스 도입 - 소규모 어선을 활용하여 지역공동체에서 정기적으로 운영 가능하도록 지원

구분			문제점	정책과제 도출 및 내용
경제 활동	일자리 지원	마을 사업지원	- 마을사업 활성화 제약 발생 - 사업 추진 시 주민갈등 발생 - 주민 역량한계 등으로 지속 가능성 미흡	(개선) 여초신활력 사업의 리빙랩 추진 - 주민 간 갈등해소 및 합의를 통한 사업 추진 - 전문가 참여로 인한 사업의 전문성 확보 - 역량 강화를 통한 마을 중심의 지속가능성 확보
		연령별 일자리 지원	- 고령인 일자리 부족 - 청년·여성을 위한 일자리 부족	(개선) 청년어업인 지원 대상 및 범위 확대 - 만 45세까지 지원 대상 확대 - 어업 관련 산업으로 지원범위 확대 (개선) 어촌 공공일자리 확대 - 해안정비, 쓰레기 청소 등 공공일자리 확대
	부문	거주시설 지원	- 외국인 노동자 거주시설 부족 및 노후화 문제 발생 - 외국인 노동자의 어촌이탈 요인으로 발전	(개선) 유형별 외국인선원 기숙사 건립 - 지역별 외국인 노동자 규모에 따른 외국인 선원 기숙사 건축 지원(빈집, 유희시설 활용 등)
		어업 교육 확대	외국인선원의 언어장벽, 어업 교육 미흡으로 사고 발생 위험 증가	(신규) 외국인종사자 종사어업 교육지원 및 강사 육성 - 종사어업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주요 언어별 교육자료(영상, 책자 등) 및 주요 국가별 강사 육성

자료 : 저자 작성

- (어업인 복지서비스 추진기반 마련) 도출된 정책과제의 효율적·효과적 추진 및 운영과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추진기반 마련 방안을 제시
- (복지서비스 거버넌스 개편) 중앙 중심의 하향식 복지서비스 추진체계에서 지역 중심의 상향식 추진체계로의 개편을 통해 현장 중심의 사업기반 마련

〈지역 중심 상향식 복지서비스 추진체계〉



자료 : 저자작성

- (복지정책 추진을 위한 법 제정) 해양수산물 중심의 삶의 질 향상 추진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주도적인 정책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한 (가칭) 어촌·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을 제정 추진하고 관련 조항 포함

〈(가칭) 어촌·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 제정(안)〉

조항	세부내용
법률명	어촌·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특별법
대상지역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근거한 어촌
공간위계	읍·면 전 지역 및 동 지역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관련 조항(안)	• (어촌·어업인 복지실태조사) ① 정부는 어업인의 삶의 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어업인등의 복지실태 2. 어업인등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현황 3. 어업인의 소득 및 작업환경 현황 4. 어촌의 교육 여건 5. 어촌의 교통·통신·환경·기초생활 여건 6. 어촌의 문화·여가 여건 7. 그 밖에 어업인등의 복지증진과 어촌의 지역개발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어촌·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토대로 어촌·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 각 호를 포함하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자료 : 저자 작성

- (복지서비스 공급조직 지원 확대) 어촌지역의 생활·복지서비스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사회적 경제조직을 지역 중심으로 조직할 수 있도록 설립 및 운영지원을 확대하고, 지역공동체 조직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개선(안)〉

구분	일자리창출 지원	전문인력 지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주요 지원 내용	• 인건비 +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일부 • 지원한도 50명 • 근로자 지원 - 대상에 따라 40~70% - 지역 자율사업 추가지원, 최대 90%	• 월 200/250만 원 한도 (인증 2명, 예비 1명) * 자부담 연차별 10~50%	•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 지원한도 50명 * 인증기업만 해당	• 인증: 연 1억 원 • 예비: 연 5천만 원 * 자부담 10~30%
최대 지원 기간	• (예비)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 2년 지원 • (인증) 인증 후 해당 사업의 지원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 3년 지원	• (예비)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 2년 지원 • (인증) 인증 후 해당 사업의 지원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 3년 지원	• (인증) 인증 후 해당 사업의 지원 개시일로부터 최대 4년 지원	• (예비)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 2년 지원 • (인증) 인증 후 해당 사업의 지원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 3년 지원
개선 방안	• 어촌지역 근로자 지원을 담당 부처, 지자체 추가 지원을 통해 80%로 확대 • 최대지원기간을 예비3년, 인증 4년으로 확대	• 자부담 추가지원 (최대 30% 이내) - 부처, 지자체 연계 • 최대지원 기간을 예비 3년, 인증 4년으로 확대	-	• 자부담 추가지원 (최대 20% 이내) - 부처, 지자체 연계 • 최대지원기간을 예비3년, 인증 4년으로 확대

자료 : 저자 작성

-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어촌의 공간적·물리적 접근성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정책대상별 복지서비스 수용을 충족하기 위해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전달체계 개선 추진

〈정책대상 세분화에 따른 복지서비스 공급 방안〉



자료 : 저자 작성

EXECUTIVE SUMMARY

A Study on the Welfare of Fishermen

Yun Youngjun · Lee Sangkyu · Lee Chaewan · Ko Jiyeong

1. Purpose

- Located on the outskirts of the country, fishing communities are highly inaccessible, causing limited accessibility to living and welfare services. While this poses significant challenges for residents, some areas still lack basic amenities and fall short of guaranteeing fundamental social rights.
- To address disparities related to welfare in fishing communities, it is necessary to accurately identify the current conditions of fishing communities while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policies that reflect the needs of the field. Due to the lack of proper understanding of actual conditions, however, there have been limitations in promoting policies for fishing communities and fishermen.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directions for

improving welfare services for fishing communities based on understanding the living and welfare conditions as well as the status of policy implementation. To achieve this goal, this study conducted a new survey to identify the welfare status of fishing communities, through the collection and analysis of data. Through these efforts, this study ultimately aims to develop a welfare service delivery system that can reach fishermen without blind spots by suggesting improvement directions for living and welfare support project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fishermen as well as improvement tasks centered on actual sites of fishing communities.

2. Methodology and Features

1) Methodology

- Through precise diagnosis and analysis of the actual status of fishing communities, this study aims to establish the direction of welfare policies for fishing communities and fishermen while laying the foundation for improvement and implementation accordingly.
- (Chapter 2) After examining the current status of welfare policies of each government ministry and welfare service projects of private organizations, this study analyzed issues and limitations related to the welfare policies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 (Chapter 3) A survey was conducted based on specific survey questions for major sectors to understand the welfare status of fishing communities and fishermen.
 - The satisfaction level of the welfare conditions experienced by fishing residents and fishermen in the field was identified and then analyzed by age, gender, and location type.
- (Chapter 4) Welfare services in rural areas with limited accessibility or specific policy cases were analyzed.
 - This chapter examined the efforts and structures of residents, local governments, and the government to improve welfare services at home and abroad, and drew implications for the direction and governance of fishing community welfare services.
- (Chapter 5) Based on the discussion above, this study presented measures to establish a basis for identifying tasks and promoting projects to improve welfare services in fishing communities.
 - Based on the direction for improving welfare policies, this study presented specific tasks for each policy sector while suggesting strategies for systematic policy implementation.
- (Chapter 6) Based on the main outcomes of this study, conclusions have been drawn and policy directions for systematic improvement of welfare policies and project promotion are suggested from a mid-to-long-term viewpoint.

2) Features

- (Literature review) Specific materials utilized in this study include policy reports, related manuscripts, and academic reports related to the quality of life. The analysis of these reports identified actual conditions of welfare policies and services in various fields and reviewed methodologies, in order to improve welfare services in fishing communities.
- (Survey) This study makes up for the welfare status survey of farmers and fishermen currently promoted by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while conducting a welfare status survey of fishermen to prepare a welfare status survey and countermeasures befitting the characteristics of fishing communities.
 - The survey maintained the common questions of the existing welfare status survey of farmers and fishermen but added fishing community-specific questions and secured 1,009 valid samples.
- (On-site study of island fishing communities) On-site investigation to island fishing communities representing the greatest accessibility restrictions among the fishing community location types resulted in the diagnosis of problems with the highest urgency and seriousness.
- (Consultation with experts) This study intends to secure the expertise of the study results through consultations specifically with those in the field and representatives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in order to identify the actual situation of welfare services in fishing communities and prepare improvement measures.

3. Result

- (Finding policy tasks for welfare services for fishermen) After setting the direction for finding policy tasks for welfare services based on the result of the study, this study extracted specific policy tasks per major sector.
- (Directions for deriving policy tasks) Policy tasks were derived after setting the directions as follows; (1) Reflecting the demand and acceptability of the field, (2) Urgency of policy projects, (3) Discovering blind spots in welfare services, (4) Segmenting policy targets, and (5) Strengthening policy coordination by ministries.
- (Finding policy tasks) This study derived new or improvement tasks after selecting the focus areas for each major sector as well as the detailed areas for improvement accordingly.

〈Identification of policy tasks by major sector and its content〉

Classification			Problems	Identification of policy tasks and the content
Health & Welfare sector	Medical	Quality of medical service	• Level of medical staff • Absence of essential medical specialty • Regular medical check-up • Difficulties in vaccination of residents	• (Improvement) Expanding and supporting the Center for Fishermen's Safety and Health - Expanding the designation of the Center for Fishermen's Safety and Health (Nationwide cities and provinces) - Promoting regular check-ups (sickness, health care) and vaccinations • (New) Offering telemedicine service - Providing telemedicine service in partnership with public health centers and local hospitals
		Emergency medical service	• Poor treatment in case of emergency • Missing golden time • Absence of maritime emergency transportation	• (New) Building and operating emergency ships - Deploying emergency ships on islands to transport people to shore in case of an emergency - Utilizing small fishing vessels (less than 10 tons) for operation
	Childcare and caregiving	Infants & Children childcare support	• Lack of childcare facilities (daycare centers) • Lack of support for childcare supplies and equipment	• (New) Supporting the operation of community childcare centers - Supporting childcare facilities in communities and improving childcare conditions through community management

Classification			Problems	Identification of policy tasks and the content
Education & Culture Sector				• (New) Project to support pop-up playgrounds (books, toys etc.) – Visiting and renting books and toys necessary for infants and children
		The elderly caregiving support	• Lack of support for senior living • (Restrictions on social worker visits) • Support for socialization (loneliness etc.)	• (Improvement) Nurturing and expanding the support for social workers – Fostering social workers to care for the elderly and expanding support for on-site visits
	Children education in fishing communities	School education	• Continued school closures in fishing communities • Poor after-school activities and educational programs	• (New) Establishing education support centers utilizing closed schools – Providing remote education facilities and programs – Supporting physical education and education programs for after-school activities
		Support for students to go to school on land	• Difficulty in commuting to school and safety issues due to maritime traffic in island fishing communities	• (New) Establishing a safety center for island residents in port of call – Building convenience and accommodation facilities to stay in case of bad weather – Providing a library, video training rooms etc. to aid students • (New) Establishing a dormitory for students studying on land – Supporting the establishment of dormitories near land schools (middle and high schoo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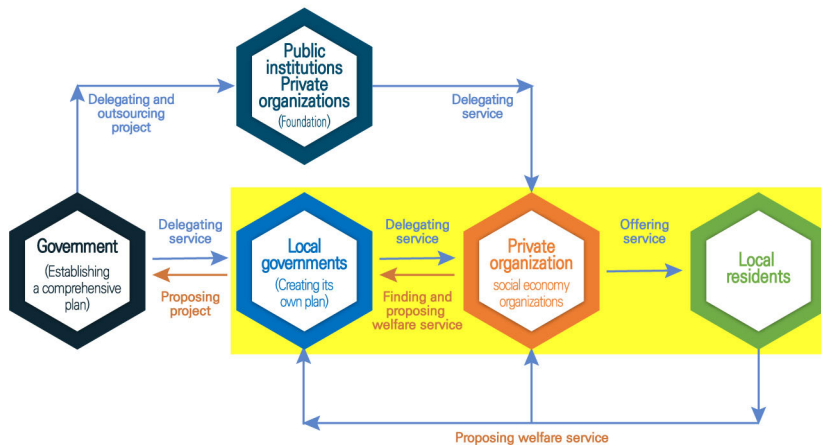
Classification			Problems	Identification of policy tasks and the content
	Culture And Leisure	Youth And Women	• Lack of recreational opportunities for youth - Lack of opportunities to participate in culture (movies, performances, etc.) and leisure sports • Lack of space for family-oriented culture and leisure	• (New) Establishing a small cultural experience center for fishing communities - Building facilities for cultural and leisure activities by utilizing idle land or buildings. - Programs are developed and applied by the governing body (Developing generational and family-specific programs) - Developing programs for multicultural families, Establishing compatriot networks by region through an online system
		Multicultural family	• Lack of opportunities for foreign residents to experience Korean culture • Lack of interaction between members from the same country	
		The elderly	• Lack of cultural and leisure facilities and programs for the elderly • Shortage of healthcare programs	• (New) Building smart systems for senior citizen centers customized to fishing communities - Secure a variety of cultural and leisure opportunities, including healthcare, leisure activities, and sports, by building an online system.
Residential conditions	Basic support for living	Living service	• Lack of basic support for living • (Purchase of daily necessities, administrative/financial services, etc.)	• (New) Setting up unmanned convenience stores - Installing unmanned facilities that can sell daily necessities - Addressing financial services by installing ATMs - Installing unmanned administrative service devices to support the issuance of key administrative documents

Classification			Problems	Identification of policy tasks and the content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ing residential environments	• Problems caused by the increase in older housing (poor heating and cooling) • Constraints on boiler operation due to increasing heating costs	• (New) Housing Improvement and Residential Support Program for Fishing community residents – Partially paying for home improvements for the most vulnerable (low-income, single-parent households, etc.) – Partial assistance with heating costs
		Marine debris disposal	• Environmental issues such as incineration and disposal due to inadequate waste management • Problems with odors, landscaping, etc. and impact on children's education	• (New) Building and offering the support for garbage trucks (island fishing communities) – Building small garbage collection vessels (less than 10 tons) to support regular garbage collection – Building a collection vessel capable of recycling
Transportation issues		Maritime transportation	• Unsecured daily life zone due to profitability problems of shipping companies • Difficulty due to the lack of maritime transportation connection between main island – annexed island	• (Improvement) Promoting a fully public maritime transportation system – Preparing differentiated support plans for each shipping company based accurate status surveys • (New) Introducing sea bus connecting between main island – annexed island – Utilizing small-scale fishing boats to allow regular operations in local communities

Classification			Problems	Identification of policy tasks and the content
Economic activities	Job support	Support for community projects	• Constraints on invigoration of community projects - Conflict with residents in case of project implementation - Lack of sustainability due to limitations of residential capacity	(Improvement) Promoting a living lab for Fishing Community New Vitalization projects - Resolving conflicts between residents and promoting projects through consensus - Securing expertise through experts' participation - Obtaining community-centered sustainability through capacity building
		Job support by age	• Lack of jobs for the elderly • Lack of jobs for youth and women	• (Improvement) Expanding the target and scope of young fishermen under the support - Expanding support target to the age of 45 - Expanding the scope of support to fisheries-related industries • (Improvement) Expanding public jobs in fishing communities - Expanding public jobs such as coastal maintenance and trash cleanup

Classification			Problems	Identification of policy tasks and the content
	Support for foreign workers	Support for residential facilities	• Lack of and deteriorating housing problems for foreign workers – Developing as a factor for foreign workers leaving fishing communities	• (Improvement) Establishing dormitories for foreign seafarers by type – Supporting the construction of foreign seafarer dormitories based on the size of the foreign workforce by region (utilizing vacant and idle facilities, etc.)
		Expansion of fisheries education	• Increased risk of accidents resulting from language barriers and the lack of fishing education among foreign seafarers	• (New) Supporting fisheries education that foreign workers engage and nurturing relevant instructors – Developing and supporting educational programs that foreign workers engage – Developing education materials (videos, booklets etc.) in key languages and training instructors by major country

〈Implementation process of regionally-driven, bottom-up welfare service system〉



- (Legislation to promote welfare policies) This study proposed the establishment of a quality-of-life improvement promotion system centered on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which will drive the establishment and promotion of proactive policy tasks. Therefore, it suggested legislation surrounding the (tentatively named) Special Act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Lives of Fishermen and Fishing Communities with relevant articles included.

〈 (Tentatively named) Special Act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Lives of Fishermen and Fishing Communities〉

Article	Detailed content
Name	Special Act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Lives of Fishermen and Fishing Communities
Target area	'Fishing community' based on Article 3 of the Framework Act on Fisheries and Fishing Communities Development

Article	Detailed content
Spatial hierarchy	Entire area of Eup/Myeon and Dong area
Articles related to a fact-finding survey and basic plan (Draft)	• (Status survey on welfare conditions of fishing communities and fishermen) ① The government shall conduct a fact-finding survey to determine the actual conditions of fishermen' quality of life, which shall include the following items 1. Welfare Status of Fishermen 2. Status of social safety nets for fishermen and others 3. Income and working conditions of fishermen 4. Educational conditions in fishing communities 5. Transportation, communication, environment, and basic living conditions in fishing communities 6. Cultural and leisure conditions in fishing communities 7. Other matters necessary to improve the welfare of fishermen and regional development of fishing communities ② The survey carried out under paragraph (1) may be conducted in combination with the survey under Article 8 (1) of the 'Special Act on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Life of Farmers and Fishermen and the Promotion of Development of Rural Areas'. • (Establishment of a basic plan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fishing communities and fishermen) ①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shall establish a basic plan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fishing communities and fisherme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asic plan") every five years based on a survey. ② The basic plan includes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5 of the 'Special Act on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Life of Farmers and Fishermen and the Promotion of Development of Rural Areas', and can be established in connection with the Basic Plan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Farmers and Fishermen and Development of Rural Are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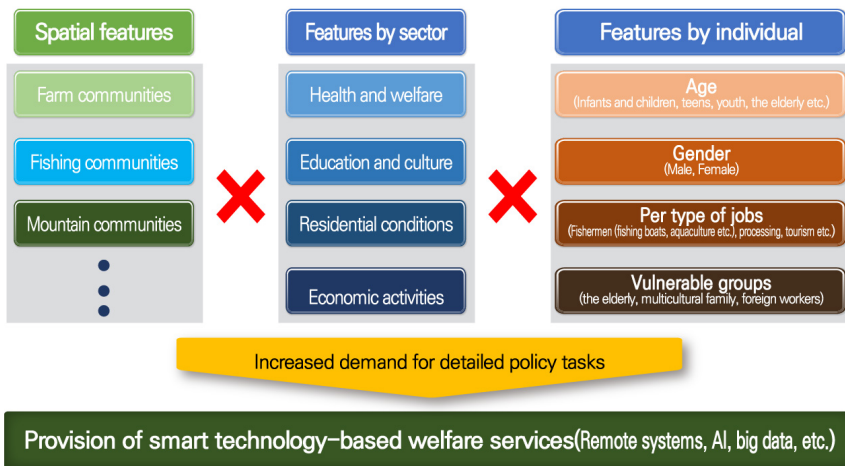
- (Expanding the support for organizations that provide welfare services) For the stable supply of living and welfare services in fishing communities, this study proposed increased support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structured in a region-centered way, while devising measures to utilize local community organizations.

〈Improvement of financial support for social enterprises (Draft)〉

Classification	Support for job creation	Support for professional manpower	Support for social insurance premium	Support for project development costs
Main content of support	• Labor cost + Partial contribution of employer's social insurance premium • Limit of 50 people for support • Worker support - 40~70% depending on target - Additional support for local autonomous projects, up to 90%	• Limit of 2/2.5 million won per month (2 for certified ones, 1 for preliminary ones) * 10~50% out-of-pocket per year	• Social insurance premium paid by the employer • Limit of 50 people for support * For certified companies only	• Certified companies: 100 million won per year • Preliminary companies: 50 million won per year * 10~30% out-of-pocket
Maximum period for support	• (Preliminary) Support for up to 2 years within 3 years from the designated date • (Certified) Support for up to 3 years within 5 years from the start of support for the project after certification	• (Preliminary) Support for up to 2 years within 3 years from the designated date • (Certified) Support for up to 3 years within 5 years from the start of support for the project after certification	• (Certified) Support for up to 4 years from the start date of support for the project after certification	• (Preliminary) Support for up to 2 years within 3 years from the designated date • (Certified) Support for up to 3 years within 5 years from the start of support for the project after certification
Improvement measures	• Expanding the support for workers in fishing communities to 80% through additional support from ministries and local governments • Extending the maximum support period to 3 years for preliminary companies and 4 years for certified ones	• Out-of-pocket additional assistance • (Up to 30%) - Cooperation with ministries and local governments • Expanding the maximum support period to 3 years for preliminary companies and 4 years for certified ones	-	• Out-of-pocket additional assistance • (Up to 20%) - Cooperation with ministries and local governments • Expanding the maximum support period to 3 years for preliminary companies and 4 years for certified ones

- (Improving welfare service delivery system based on smart technology) This study includes the improvement of the delivery system using smart technology in order to overcome the spatial and physical accessibility limitations of fishing communities and meet the acceptance of welfare services by various policy targets.

〈Provision of welfare services according to policy target segmentation〉



01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국토의 외곽지역에 있는 어촌은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4.4배에 달하는 해양 면적을 바탕으로 하는 어업의 주요 활동공간으로 국내 산업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하지만 1차 생산 중심의 산업구조, 인구 고령화로 인한 생산성 하락, 지속적인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한 지역침체와 산업 기반시설 노후화, 정주환경 악화 등은 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하락시키는 중요한 원인으로 자리 잡았다. 결국 어촌은 국내에서도 지역소멸위험이 매우 큰 지역으로 분류되었으며, 향후 어촌지역 대부분이 지역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되고 그 비중은 96.62%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¹⁾

정부는 이러한 지역 간의 격차와 어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4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농어업인 삶의 질 법)을 제정하고, 그 근거를 바탕으로 범정부적인 조직 구성인

1) 조정희 외(2021), p. 48.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를 출범²⁾하여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있으나, 정책을 관리하는 차원 수준에 머물러 형식적인 운영이란 지적이 많다.³⁾ 더욱이 위원회가 농촌·농업 중심으로 운영되어 어촌의 실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어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태 파악 및 정책 발굴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그 예로, 농어업인의 삶의 질 실태조사를 위해 농어업인 삶의 질 법 제8조에 근거하여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나 전체 조사표본 가구 중 어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5% 미만이며, 문항의 보기가 농촌 중심으로 구성되어 어업실태를 파악할 수 없는 등, 어업의 특성을 반영한 복지실태 조사체계를 갖추지 못하였고, 조사분석 역시 농어업인을 통합하여 분석함으로써 작은 표본의 어촌 실태가 희석되어 어가의 복지, 안전 등의 실태를 대변하기 어려워 최근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문제가 지적되기도 하였다.⁴⁾

어촌은 국토 외곽에 위치한 특성으로 인해 접근성 제약이 매우 크며 이로 인한 생활 및 복지서비스의 접근성 제약도 높아 주민들의 많은 불편을 야기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일부 섬 지역의 경우 기본적인 생활서비스도 제공받지 못하여 사회적 기본권⁵⁾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어촌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촌의 실태를 정밀하게 파악하고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정책 수립과 추진이 필요하나, 현재 이에 대한 실태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어촌·어업인을 위한 정책 추진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결국 어촌 주민과 어업인의 삶의 질 하락으로 인한 인구

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2004) 근거 2004년 12월 8일 출범

3) 농민신문(2020.2.22.)(검색일: 2023.1.16.)

4)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의 어촌·어가실태 반영 미흡에 대해 지적(2021년 국정감사, 위성곤 의원)

5) 사회적 기본권은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국가적 급부와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를 의미

유출, 청년 인구 감소 등 어촌의 지역소멸위험의 중요 원인이 될 수 있다. 최근 국가적으로 지역소멸위험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어촌은 그 논의의 중심에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어촌의 열악한 삶의 질 여건 개선을 위해 어촌의 현장의 실태를 세밀하게 파악·분석하여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어촌의 위기를 극복하고 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어촌의 생활 및 복지 여건과 이를 위한 정책 추진실태 파악 등을 바탕으로 복지서비스 개선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어촌특성을 고려한 정책 개선, 발굴 및 전달체계 개선 방안을 통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어촌 복지서비스 정책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으며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촌의 복지서비스 실태 파악을 위한 새로운 조사, 자료, 분석을 통해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 및 복지지원 사업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생애주기별·입지유형별·정책 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어촌 현장 중심의 정책 개선 방향과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기존 정책으로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였던 서비스 제공을 통해 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둘째, 어촌 현장 중심의 정책 방향을 바탕으로 한 개선과제가 어촌 주민에게 사각지대 없이 도달할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현재 어촌의 복지정책은 각 부처가 관련 서비스를 분절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어촌의 현장의 수요를 모두 반영하지 못하며, 부처 간 연계 부족 및 업무 중복 우려로 인해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주요 분야별 복지정책에 대한 로드맵을 바탕으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정비·추진함으로써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고 사업성과도 제고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복지서비스의 안정적인 공급·지원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운영 주체를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 중심의 복지서비스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본 연구는 어촌의 복지실태에 대한 정밀한 진단과 분석을 통해 향후 어촌 및 어업인을 위한 복지사업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개선 방안과 추진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어촌·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2장에서는 각 부처의 복지정책과 민간조직의 복지서비스 사업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해양수산부의 복지정책의 문제점과 한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3장에서는 어촌·어업인의 복지실태 파악을 위해 주요 부문별 세부적인 조사 문항을 바탕으로 설문조사를 추진하여 어촌 주민과 어업인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복지실태와 삶의 질 여건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였고, 이를 분석하여 연령별, 성별, 입지유형별 특징을 파악하였다.

4장에서는 접근성의 제약이 많은 농어촌지역의 복지서비스 또는 지원사례를 분석하였다. 국내외 복지서비스 개선을 위한 주민, 지자체, 정부 등의 노력과 그 체계를 살펴보고 성과를 확인함으로써, 어촌 복지서비스 개선을 위한 방향성과 사업 추진 거버넌스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5장에서는 앞서 논의한 다양한 결론과 시사점을 바탕으로 어촌의 복지서비스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복지정책 개선을 위한 방향성을 바탕으로 정책 부문별 추진 방안을 제시하여 체계적인 정책 추진기반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연구의 주요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도출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인 복지정책 개선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언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정책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분석하여 복지서비스 개선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1) 문헌조사

어촌 분야의 복지서비스 개선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복지정책, 서비스 등에 대한 실태 파악 및 방법론을 검토하고 방향성을 설정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정책보고서, 분야별·부문별 관련 논문, 삶의 질 관련 보고서 및 연구 보고서를 활용하였다. 주로 어촌 분야와 비슷한 복지환경에 놓여 있는 농촌·농업 분야의 연구자료, 삶의 질 향상 전문지원기관의 발간자료 및 보고서를 활용하였다. 또한, 국내외 복지서비스 사례를 검토하여 복지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하였다.

2) 어업인 복지실태 설문조사

현재 농촌진흥청에서 농어업인 삶의 질 법 제8조 및 농어촌 주민의 보건 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6조에 의거하여 농어촌의 복지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나, 어가의 표본 비중이 5% 이하로 매우 낮아 어촌의 복지실태조사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고 어촌특성에 맞

는 복지실태조사와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어업인 복지실태조사를 별도 실시하였다. 조사내용은 기존의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의 공통문항을 유지하되, 어촌특화 문항을 추가하여 추진하였다. 공통문항은 생활 만족도, 보건 복지, 교육문화, 정주환경, 지역공동체, 경제활동, 부문으로 나누어 구성하였으며, 어촌특화 항목은 어업작업환경, 자연재해, 섬어촌 특화 문항, 어업인 복지정책 인식 등을 포함했다. 어업인 복지실태조사를 통해 1,009부의 유효표본을 확보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연령별, 성별, 입지유형별 등의 세분화된 분석을 추진하고 정책 방향성을 도출하였다.

3) 섬어촌 현장실태조사

본 연구에서는 어촌 입지유형 중 가장 접근성의 제약이 큰 어촌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과제 발굴을 위해 섬어촌에 직접 방문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연안·도시어촌과 비교하여 시급성과 심각성이 큰 현장의 문제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는 농어업인 삶의 질 전문지원기관 사업으로 수행한 섬어촌 현장과제 발굴자료와 본 연구의 현장조사 자료를 종합하여 분석하였다.

4) 전문가 자문

본 연구는 어촌의 복지서비스 실태 파악을 통한 개선 방향 및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각 분야 전문가 및 해양수산부 담당자 등을 중심으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연구 결과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분야 전문가들에게 현장의 문제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정책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제3절 선행연구 검토

1. 국내 선행연구

이태수·이미진(2012)은 농촌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관한 기초연구에서 농촌지역의 저출산, 인구 감소 및 초고령화 단계의 빠른 진입과 다문화가정의 증가 등, 농촌지역 사회경제적 여건 악화가 매우 심각한 단계로 접어들어 농촌 구성원들에게 복지 측면에서 획기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를 위해 농촌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민간과 공공 부문 사회복지사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견해와 실태를 파악해 농촌지역의 정보 부족, 접근성 문제, 자원 부족, 민간과 공공기관 간 협력 부재 등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개선 방안으로 접근성 증진, 마을 내 자생적 인력 활용, 농촌 맞춤형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마련, 예산 증액을 제시하였다.

이병오 외(2013)는 농촌지역 사회복지서비스의 수요와 전달체계 연구에서 농촌지역이 가진 지리적·지역적 조건 때문에 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사각지대에 있을 수밖에 없으며, 초고령화와 인구 감소는 농촌의 인력 부족 문제를 발생시켜 농촌의 생산구조 및 기반 축소로 인해 불안정한 생활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하였다.

특히, 농촌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정책에 대한 연구자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농촌 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강원도 횡성군 고령자 주민 대상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실태를 조사하고, 농촌 마을공동체사업(CB: Community Business)의 복지체계와 일자리

창출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이에 고령자의 농촌 복지서비스로 교통 접근성 개선과 농가의 소득 보장을 위한 영농활동 지원, 건강·의료 지원을 제시하였다. 또한, 농촌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서는 민간 및 공공 부문의 협력관계의 한계를 지적하며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수평적이고 긴밀한 협력관계의 중요성을 시사하였다.

조미형·권인혜(2015)는 농촌지역 사회복지서비스 기관의 다기능 복합화 추진 방안 연구에서 최소한의 인프라를 지원하고 지역 자원의 최대한 활용 및 비용 최소화를 통해 농촌 주민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필요한 서비스를 쉽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문헌연구, 읍·면·소재 복지관 대상 설문조사, 홍성군, 해남군, 기장군 등 세 개 지역의 사회복지기관 면접조사를 수행하여 결과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농촌지역 복지관 종사자의 다기능 복합화에 대한 인식이 낮고, 사회복지관 협력은 비영리단체와의 협력 비중이 높아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회복지사들에게 특별 수당을 지원하여 이해를 높이고 현행 제도의 개선을 통해 단기적으로 다기능 복합화 추진에 장애가 되는 부분을 제거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농촌형 통합복지관 모델을 제시하여 농촌지역 사회복지관 다기능 복합화 추진 방안을 모색하였다.

강현주 외(2015)의 경기도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확대 방안 연구에서 도시와 농촌의 사회서비스 공급에서의 지역 격차 발생은 농촌지역 고령화, 빈곤화, 인프라 부족 및 다문화가정 증가로 인해 가속화되고 있음을 밝히고, 이는 사회복지서비스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의 문제와도 연결하였다. 특히 지리적으로 광범위한 경기도 대도시에 해당하는 수원, 부천, 성남 등과, 농촌지역에 해당하는 가평, 연천, 동두천 등 지역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고 이 지역을 사례연구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여 다양한 연구 방

법을 진행하여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수요의 질적, 양적 변화의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농촌의 특성과 사회서비스 공급의 방해 원인을 파악하여 농촌지역의 복지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사회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차량지원, 유희시설 및 공간 활용, 기준정보 차별 적용 등 접근성을 개선하고, 이용자 중심의 원스톱 서비스 실현과 물리적 접근성 최대화를 위해 복합서비스 센터화, 농촌형 서비스 개발과 복지예산 통합사용 등 공공 부문의 노력,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정책 수립 및 자문 기능을 하는 광역 단위의 '전문가 자문단 운영' 등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이승우·박상우(2010)의 어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서비스 개선에 관한 연구에서는 2009년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어촌지역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방향과 이를 평가하기 위한 농어촌서비스 기준이 어촌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한 부분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농촌과 어촌에서 주민의 작업 여건과 생활환경의 특성에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농어촌서비스 기준에 어촌의 특성을 반영한 농어촌서비스 기준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특히, 어촌지역은 도시 근교, 연안 지역, 섬 지역 등 어촌의 지리적 위치 유형에 따라 공공서비스 공급 격차가 있어 어촌특성을 반영한 공공서비스 개선이 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어촌 공공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 수산정책과 어촌 공공서비스 개선 및 연계를 통한 어촌 주민의 사업 만족도 제고, 어촌 공공서비스 인적자원의 통합적인 관리를 통한 비용 절감, 바다 환경과 공공서비스 연계를 통한 어촌 생활환경 개선, 어촌 공공서비스에 대한 지자체의 통합적 계획수립 등을 제시하여 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김정태(2012)는 어촌지역의 농어촌서비스 기준 실태와 이행실적 점검방식의 개선 방안 연구에서 제2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2010~

2014)을 수립하고 농어촌서비스 기준을 설정하여 시군 단위로 이행실적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읍·면 인구의 약 11.9%를 차지하는 어업인에 대한 파악을 명확히 할 수 없어 어촌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에 제약이 있다는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이에 어촌지역의 서비스 기준 이행실태 점검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농어촌서비스 기준을 바탕으로 조사항목을 설정하여 어촌지역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농어촌 공공서비스 수준을 비교·분석하였다. 연구에서는 어촌이 농촌보다 생활환경 여건이 우수하지만 문화·사회복지 서비스 지원이 농촌보다 낮은 것을 확인하였고, 문화·여가 부문은 기존 결과와 차이가 있어 향후 정책 방향 수립에 있어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농어촌서비스 평가방식에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항목에서 공급자 중심이 아닌 접근성 측면을 고려하고, 세부항목 기준을 주민평가에 기초하여 재설계가 필요하며 시군 내 읍·면이 속한 생활권역 단위로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어촌을 대상으로 농어촌서비스 기준 실태와 조사항목 중 어촌 주민 생활과 관련 있는 조사항목을 도출하고 어촌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이호림 외(2021)는 어촌형 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연구에서 어촌지역 인구 유출로 인해 기본적인 생활서비스 접근성에 대한 격차도 동시에 심화되고 있는데도 국토 외곽에 위치한 어촌지역 생활서비스 실태연구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따라서 해당 연구를 통해 어촌지역 생활서비스 개념을 재정리하고 어촌에 맞는 생활서비스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어촌뉴딜300 사업 대상지 중 70개를 대상으로 GIS를 활용한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사례분석과 생활서비스 실태조사를 통해 기초생활 서비스, 복합생활 서비스, 응급생활 서비스로 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활

용모델 세 가지 유형을 제시하여 어촌유형별로 섬 지역, 연안 지역, 도시지역 등으로 나누어 생활서비스 도달 시간을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 국토 외곽지역에 해당하는 섬 지역이 모든 기준에서 평균 서비스 도달 시간이 가장 길었고, 문화·여가 등 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서비스 이용보다는 주로 생활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이동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이에 기초생활 서비스를 하루 만에 이용할 수 있는 교통편 개선 방안과 복지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어촌 생활서비스 데이터 구축, 거버넌스 구축, 사회적기업 육성 등 섬 지역 어촌 주민의 생활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김기현 외(2013)는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안 연구에서 현행 사회 복지행정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수혜자 중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인식하였다. 우리나라에 맞는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발을 위해 국외 사례 모델 분석을 통해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긴밀한 연계성과 기존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새로운 모델 구축 방안과,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모델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선 방안으로는 인구 30만 명 기준으로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통합 사무소를 설치하여 복지업무의 전달체계 개편 방향을 제시하였고, 복지업무를 전담하는 별도 조직을 구성하여 전문성을 길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복지행정기관의 통합을 위해 주민센터를 개편하여 복지서비스 통합 모델을 구축하는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2. 국외 선행연구

Shucksmith et al(1994)은 유럽지역 농촌의 사회복지 연구에서 농촌지역이 유럽 전 지역의 80%에 해당하고 전체 인구의 50%를 차지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농촌지역에 대해 잘 모르고 관심이 부족하다고 하였다. 또한, 농촌과 관련된 주민 주거·생활환경 여건 및 농촌 주민 사회적 배제에 관한 연구도 농촌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도시 특성을 반영한 자료에서 파생되어 농촌지역 사회적 배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보가 부족하여 정책 수립 시 잘못된 방향으로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더욱이 농촌지역의 빈곤과 사회적 배제 경험은 도시지역과 달리 가난에서 나온 것이 아니며, 농촌지역 빈곤의 발생률에 대한 데이터도 정확하지 않아서 빈곤의 원인이 유럽 농촌지역 사회적 배제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농촌지역의 빈곤율을 완화하기 위해 고용, 주택, 빈곤 및 주민 삶의 질에 중점을 두고 가계 전수조사와 상향식 농촌 경제 개발을 할 수 있는 국가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였다.

EU Commission(2008)의 농촌지역의 빈곤과 사회적 배제 보고서에서 개별 국가마다 ‘농촌지역’에 대한 정의가 다르고, 그 범위는 도시 중심으로 부터 한정되고 국제적 차원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OECD 유형 접근법 또한 모든 국가에 적합하지 않으며 특히 작은 국가의 경우 농촌을 과대평가하는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고, 농촌지역을 특징짓는 중요 요소가 도시 지향적이어서 다양한 종류의 농촌지역을 구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농촌지역이 도시지역보다 1인당 GDP가 낮아 빈곤과 사회적 배제위험이 도시지역보다 크다고 할 수도 있지만, 도시와 비교하였을 때 농촌지역 주민들에 대한 빈곤과 사회적 배제위험은 인구특성, 접근성, 교육, 노동시장 등 일부 특수한 기능이 도시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유럽의 농촌과 도시지역의 소득 빈곤에 관한 패턴이 체계적이지 않고 그 격차는 주로 도시지역에서 빈곤이 발생하는 서구 국가보다 농업의 어려움에서 발생하고 있는 동부 국가의 소득 빈곤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지역 발전 전략에 농촌빈곤 해결방안을 포함하는 사회적 통합 전략을 수립하였다. 빈곤에 대한 정책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농촌개발정책과 화합 정책을 제시하고, 이러한 사회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지역별 거버넌스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농촌지역 사회적 배제위험을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성과 지표를 개발하여 모범 사례를 공유하는 등 프로세스 구축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Shucksmith et al(2021)은 농촌지역의 재정적 어려움과 취약성 이해에 관한 연구에서 농촌 경제는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저소득, 계절적 아이টে므로 인해 농업 기업에 대한 잠재적인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의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고령화로 인한 인력 부족으로 재정적으로 취약한 구조이고, 이는 가계 예산을 어렵게 하고 나아가 농촌지역의 부채와 빈곤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농촌지역일수록 접근성의 제한으로 물류비용이 높아 도시지역보다 주민생활비가 높고, 생활비 대부분이 생활서비스로 소비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농촌지역 취약성을 측정하는 지표에는 주택 비용만 고려되고 있는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농촌지역의 취약성은 도시지역 문제에 가려져 주목받지 못하고 있으며, 농촌 복지시스템의 디지털화 인프라와 교육이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점과 농촌기업의 시장 진입에 장벽이 존재하는 등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사례를 통해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Rodríguez-García, Navarro-Yáñez, & Zapata-Moya(2022)는 지역 복지 시스템과 건강 불평등: 제도적 중복과 지역적 변화의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는 스페인 건강조사(ENSE) 통합 데이터를 사용하여 성인 인구의 사회 역학 정보를 분석하고, 지자체에 거주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지자체의 복지서비스 재분배 지출이 증가할수록 지역주민의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이러한 정책 방향이 사회경제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사이의 건강 불평등의 격차를 감소시킨다는 것을 시사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 바탕으로 국가 차원의 복지정책과 건강 불평등의 관계는 지자체의 지출 행동으로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 주었으며, 지자체의 지출이 증가할수록 자기인식건강, 건강 문제로 인한 활동 제한의 불평등 크기가 작아져 지자체의 지역복지제도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제도적 중복 지원에 대한 하위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본 연구는 어촌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복지서비스의 실태 및 진단을 통해 어촌의 복지서비스 개선 방향을 바탕으로 어촌특성에 맞는 현장 중심의 정책과제를 제시함으로써 어촌주민 삶의 질 향상과 복지서비스 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이다. 기존 연구에서 수행된 설문조사가 대부분 농업과 어업이 구분되지 않고 시행되어 조사항목이 어업인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어촌·어업인 특성을 반영한 조사항목들을 구성하여 어업인 복지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기존에 구축된 다양한 삶의 질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현장의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어촌의 복지서비스 실태 및 진단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통해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논의를 추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 연구에서 심층적으로 연구되지 않았던 어촌특성을 반영한 복지서비스의 방향성 제시, 신규과제 발굴,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등의 폭넓은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표 1-1〉 복지서비스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

구분	주요 선행연구		본 연구
	요약	문헌	
목표	• 농촌지역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개선 • 농촌지역 특성을 반영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분석 • 어촌지역 생활서비스 실태 파악을 통한 어촌 공공서비스 기준 제시 • 사례분석을 통한 지자체 정책이 주민 건강 불평등 크기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이태수·이미진 (2012) • 이병오 외(2013) • 이승우·박상우 (2010) • Rodríguez-García, Navarro-Yáñez, & Zapata-Moya(2022)	• 현장 중심 신규과제 발굴을 통해 어촌특성을 반영한 복지서비스 정책기반 마련 • 사각지대 없이 효과적인 복지서비스 전달을 위한 전달체계 구축 방안 마련 • 단계별 복지서비스 로드맵 추진을 통한 안정적인 정책 추진체계 마련
연구 대상 및 내용	• 농촌지역 사회복지서비스 기관 다기능 복합화 추진 방안 검토 • 농촌 사례지역 복지서비스 검토를 통한 지역 격차 해결 방안 탐색 • 유럽 농촌지역 사회적 배제 주요 특징과 농촌 취약지역 EU의 정책 방향 검토	• 조미형·권인혜 (2015) • 강현주 외(2015) • Shucksmith et al (1994) • EU Commission (2008)	• 부처별 어업인·어촌 복지서비스 정책 및 민간 복지서비스 추진 현황 검토를 통한 문제점 진단 및 분석 • 국내외 농어촌지역 사례 분석을 통한 어촌지역 복지서비스 과제 발굴 방향 제시 • 어업인 복지서비스 기본 방향 및 부문별·목적별 사업의 정책적 방향 제언
연구 방법	• 어촌지역 기초자료 바탕으로 농어촌 서비스 기준 이행실태 점검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방안 도출 • 어촌지역 특징을 고려한 생활서비스 전달체계 실증 분석 • 취약한 농촌지역의 사회적 배제 경험 특징 검토	• 김정태(2012) • 이호림 외(2021) • 김기현 외(2013) • Shucksmith et al (2021)	• 국내외 사례분석과 삶의 질 관련 문헌 검토를 통해 어촌 복지서비스 방향성 도출 • 어촌특화항목을 반영한 어업인 복지실태조사 수행을 통한 시사점 도출 • 전문가 자문을 통한 정책의 전문성 확보 및 복지서비스 방안 마련

자료: 저자 작성

02

정부 및 민간 부문의 복지서비스 정책 현황

제1절 부처별 복지 정책 현황

어촌의 특성을 반영한 복지서비스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부처별 삶의 질 정책 현황을 네 개의 부문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서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관련 사업을 ① 보건복지, ② 교육문화, ③ 정주여건, ④ 경제활동으로 분류하여, 부문별 사업 추진 실적 및 성과를 평가 및 분석하고 있다. 또한, 제4차 기본계획의 부문별 추진전략을 살펴보면 보건복지 부문은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제공과 포용적 공동체 육성, 교육문화 부문은 교육문화 기회의 형평성 보장, 정주여건은 농어촌다움이 살아있는 정주기반 구축, 마지막으로 경제활동 부문은 경제활동 다각화와 지역순환경제 구축이 목표이다. 이에 따른 주요 과제도 부문별 네 개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으며, 각 부처는 이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그림 2-1〉 참고).⁶⁾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현재 추진 중인 부처별 농어촌지역의 지원사업의 실태, 한계 등을 검토하였다.

6) 2022년도 사업예산은 2021년 대비 7,388억 원이 증액되었고, 보건복지 부문과 정주여건 부문에서 총 5,622억 원이 증액되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그림 2-1〉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비전	전국 어디서나 삶의 질이 보장되는, 사람이 돌아오는 농어촌	
목표	① 주민을 포용하는 자립적 지역사회 ② 어디서나 서비스 접근성이 보장되는 3·6·5 생활권 ③ 농어촌다움이 살아있는 생명의 터전	
전략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제공과 포용적 공동체 육성	① 농어촌 의료서비스 여건 개선 ② 농어촌 통합 돌봄시스템 구축 ③ 보육·육아 친화적 농어촌 지역사회 조성 ④ 농어촌 사회 안전망 내실화
	교육·문화 기획의 형평성 보장	①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교육 서비스 확충 ② 농어촌 평생교육 강화 ③ 농어촌 지역문화·여가 향유 여건 향상 ④ 주민 주도형 문화·여가 향유 지원
	농어촌다움이 살아있는 정주기반 구축	① 농어촌 지역 교통 여건 확충 ② 농어촌 주거 여건 및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 ③ 인구유입 촉진을 위한 정주기반 마련 ④ 주민을 포용하는 자립적 지역사회
	경제활동 다각화와 지역순환경제 구축	① 농어촌 지역자원을 활용한 소득기반 다각화 ② 농어촌 관광 활성화 ③ 농어촌 취업·창업 촉진 ④ 농어촌 여성 취업 지원 및 일손 부족 해소

자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2020), p. 25.

1. 주요 부처별 복지서비스 정책 현황

1) 보건복지 분야

주요 부처별 농어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살펴보면 보건복지와 관련된 사업은 대부분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주로 농어촌의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의료 인프라 사업과 지역 영·유아 돌봄 및 보육을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또한, 세부적인 정책대상을 위한 사업(임산부, 영·유아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전국 농어촌지역의 수와 범위를 고려하면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어촌특화형 복지정책사업은 전무하여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예로, 소아청소년과 의료 취약지 지원사업의 낮은 예산(26억 원)으로 인한 사각지대 발생, 농촌형

통합 돌봄 시스템 구축 사업에서의 어촌지역 배제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대부분 정책사업이 농어촌 통합으로 추진되고 있어 규모가 작고 접근성이 낮은 어촌지역의 지원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교육문화 부문

교육문화 부문은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분야별로 나누어 사업을 추진 중이며 교육사업은 현재의 농어촌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 문화지원사업은 농어촌지역의 다양한 문화·여가활동의 접근성과 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시설 확대, 인프라 조성 관련 사업인 농어촌 체육공간 조성, 생활 문화센터 조성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 사업의 예산이 매우 낮게 책정되어 있고, 특히 어촌의 접근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찾아가는 도서관과 박물관의 예산은 각 6억 원과 1억 원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 외에도 교육·문화 관련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지원사업 역시 충분한 예산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산 부족으로 인한 농어촌지역의 복지 사각지대 발생 원인이 될 수 있다.

3) 정주여건 부문

정주여건 부문에서는 농어촌지역의 접근성 및 생활환경 개선·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다양한 부처가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섬어촌의 해상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은 별도로 추진하고 있지 않으며, 어촌에서 현안문제로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노후주택 개선, 쓰레기 처리, 주택공급 등의 사업은 예산 규모가 매우 작거나 정책대상이 제한적인 문제가 있다. 특히, 어촌의 경우 해양 쓰레기 및 섬 지역 생활 쓰레기는 처리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예산 확보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에도 2022년에 농어촌 전체에 반영된 예산이 79억 원인 점은 사업의 한계라 할 수 있다.

4) 경제활동 부문

경제활동 부문은 여성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지원 및 처우 개선에 한정되어 있어 관련 사업이 매우 제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 농어촌 경제활동과 관련된 지원사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어촌지역에 인력확보를 위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배정 및 처우 개선사업 예산은 48억 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고용노동부의 예산으로는 어촌지역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환경 개선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경제활동 부문의 경우 사업유형에 따라 농어촌지역의 경제활동에 대한 다양한 신규사업과 관련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와의 연계를 통한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2-1〉 주요 부처별 삶의 질 관련 정책

분야	과제명	소관 부처	예산(억 원)
보건복지 (11개)	지역거점 공공병원 시설 및 장비현대화	보건복지부	2,683
	농어촌 공공보건 기관시설 및 장비현대화	보건복지부	735
	농어촌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보건복지부	250
	농어촌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소방청	30
	분만 의료 도농 간 격차 해소 (분만 취약지 해소)	보건복지부	215
	소아청소년과 의료 취약지 지원	보건복지부	26
	정신건강복지센터 확충을 통한 농어촌 정신건강 관리 지원	보건복지부	782
	농촌형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시스템 구축	보건복지부	307
	농어촌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보건복지부	238
	농어촌지역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 지원	보건복지부	197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보건복지부	499
교육문화 (22개)	농어촌 통학 여건 개선	교육부	1,188
	농어촌 다문화 학생 교육 지원	교육부	29
	학교시설 안전 강화	교육부	50
	농어촌 여건에 적합한 다양한 학교 운영지원	교육부	7
	혁신 교육지구 활성화	교육부	33
	농어촌 방과 후 학교 내실화	교육부	815
	농어촌 학교 진로 교육 강화	교육부	23

분야	과제명	소관 부처	예산(억 원)
	농어촌 학교의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	교육부	110
	농어촌 성인 문해교육 활성화	교육부	57
	농어촌지역 평생교육 기반 확충	교육부	20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 운영	문화체육관광부	25
	농어촌 공공도서관 및 작은 도서관 조성	문화체육관광부	200
	농어촌 체육 공간 조성	문화체육관광부	1,155
	생활 문화센터 조성	문화체육관광부	1,787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8
	문화누리카드로 소외계층 문화 향유 기회 제공	문화체육관광부	2,670
	찾아가는 도서관 운영	문화체육관광부	6
	찾아가는 박물관 운영	문화체육관광부	1
	문화가 있는 날 활성화	문화체육관광부	44
	생활문화 공동체 만들기	문화체육관광부	14
	생활문화 동호회 활성화 지원사업	문화체육관광부	15
	지방문화원 원천 콘텐츠 발굴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38
정주여건 (14개)	농어촌지역 교통 여건 확충(공공형 택시)	국도교통부	96
	주민참여형 교통 모델 확산	국도교통부	384
	위험도로 구조 개선	행정안전부	735
	고령자 교통안전 교육 및 안전용품 보급	국도교통부	3
	농어촌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처리 지원	환경부	1,524
	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	국도교통부	26,419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국도교통부	34
	농어촌지역 하수도 설치	환경부	4,655
	농어촌지역 도시가스 보급	산업통상자원부	270
	농어촌지역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산업통상자원부	119
	다양한 형태의 공공임대 주택공급(고령자복지주택)	국도교통부	435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0
	농어촌 폐기물 수거·처리 개선	환경부	79
	축산분뇨 자원화·에너지화(1)	환경부	709
경제활동 (2개)	농어촌 거주 여성 경제활동 지원	여성가족부	892
	외국인 노동자 적정 배정 및 처우 개선	고용노동부	48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21년 추진실적 및 '22년 시행계획 24~27p 재정리

2. 농림축산식품부 복지지원 정책

1) 보건복지 부문

농촌의 보건복지 부문 정책은 정책대상인 농업인을 더욱 세분화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농촌지역의 영·유아, 여성농업인, 고령인, 취약세대 등을 위해 기존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모두 지원하지 못하거나 농촌특성에 맞추어 할 수 없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원사업보다 더 많은 1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개념을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발굴하여 추진함으로써 지역 내 여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은 지역의 실태와 여건을 반영한 농촌특화 복지지원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농림축산식품부는 보건복지부에서 보장하지 못하는 농촌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부처 자체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직접 추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농업인 건강검진, 취약농가 인력지원, 찾아가는 보육 서비스 등의 사업 추진을 통해 농촌 현장밀착형 사업 추진을 통한 농촌 복지서비스 사업의 효율과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2) 교육문화 부문

교육문화 부문은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다양한 지원을 통해 추진하고 있어 농식품부는 농촌인력의 양성과 평생교육, 관련 사업을 위한 교육에 집중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사업의 다양화와 예산의 한계가 있어, 다양한 교육과 지역주민이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3) 정주여건 부문

농림축산식품부는 열악한 농촌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도농 격차 축소 및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다양한 사업의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및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과,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농촌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 보건복지부의 관련 사업 등을 사업분야에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농촌 주민의 정주환경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주거 개선을 위한 사업도 농식품부 주도로 추진하고 있다. 더욱이 취약계층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5,500억 원 예산을 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은 어촌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의 방향성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4) 경제활동 부문

농촌의 경제활동을 위한 지원사업은 농업의 생산, 가공·유통, 부가가치 창출 및 다각화, 이와 관련된 인력육성과 청년농업인 지원 등을 중점으로 하고 있으며, 네 개 부문 중에서 가장 많은 21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농업이 다양한 산업 분야로 나누어져 있는 원인도 있으나, 부처의 다양한 정책 대상 발굴과 세분화된 농업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전략적인 사업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이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체계적인 푸드플랜을 통한 지역 단위 선순환 체계 구축, 농촌관광에서의 음식관광의 차별화된 전략 마련은 어촌 수산물의 푸드플랜으로 확장하여 고민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시사점이 될 수 있다.

〈표 2-2〉 농림축산식품부 삶의 질 관련 정책

분야	과제명	소관 부처	예산(억 원)
보건복지 (16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농업 안전 보건센터 운영)	농식품부	6
	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20
	취약 농가 인력지원		149
	사회적 농업 활성화		84
	농어촌 영·유아 돌봄 시설 확대 (공동 아이 돌봄센터)		23
	농어촌 영·유아 돌봄 시설 확대 (농번기 아이 돌봄 방)		19
	찾아가는 보육 서비스 제공		20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1,853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농진청	1,725
	농업인 안전 재해보험		1,801
	농업인 업무상 재해보상 및 예방관리 기반 조성		16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 실천 현장 지원		40
	농업인 노후 안정 농지 연금 지원		2,106
	농업 재해보험 사업 내실화	농식품부	6,857
	경영 이양 고려 농업인 소득 지원	농진청	267
	여성농업인 생애주기별 복지환경 기반 조성		6
교육문화 (6개)	농업인 자녀 및 농업 후계인력 장학금 지원	농식품부	160
	농촌 유학 지원		15
	농어촌 노인 문해교육 활성화(문해교육 공동체 지원)		17
	농촌지역 양성평등 교육 확대	농진청	1
	농경 문화자원 활용 농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25
	농촌축제 지원		8
정주여건 (20개)	농촌형 교통 모델 다변화	농식품부	419
	취약계층 주거 여건 개선(농어촌 주택개량사업)		5,500
	취약계층 집 고쳐주기 추진		43
	농어촌지역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선)		1,220
	농촌 빈집정비 및 활용		152
	거점과 배후마을 간 상호기능 연계 강화 (농촌중심지 활성화 및 기초생활 거점 조성)		5,744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1,750
	정주환경 및 농촌 생활서비스 모니터링 기술개발	농진청	1
	수리시설 안전관리(1)	농식품부	6,822
	수리시설 안전관리(2)		40
	농경지 침수 피해 예방 대책		3,756
	청년 보금자리 조성		16
	축산 경종 분야 암모니아 관리 강화		720
	지역 단위 농업농촌 환경 보전 프로그램 도입 확산		63
	축산분뇨 자원화·에너지화(2)	농식품부	280

분야	과제명	소관 부처	예산(억 원)
	농업 기반 시설활용 에너지 개발		200
	농촌 공간 계획을 활용한 난개발 방지		630
	경관 보전 직불제		190
	농어업유산지정 및 관리(1)		36
	농업, 농촌 공인자원 관리 및 활용 기술개발	농진청	3
경제활동 (21개)	농촌 융복합산업 활성화(융복합산업 창원지원 강화)	농식품부	249
	푸드플랜 내실화(1) (지역 단위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118
	푸드플랜 내실화(2)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305
	푸드플랜 연계 가공 기초 기반 조성지원	농진청	115
	농촌관광 활성화	농식품부	361
	농촌관광 수요 확대를 위한 포용적 디자인 기술 확산	농진청	1
	음식관광 활성화 (음식관광 상품개발보급)	농식품부	2
	음식관광 활성화 (찾아가는 양조장)		11
	농업법인 전문인력 채용지원		13
	청년 창업농 실습농장 설치 및 운영		64
	아이디어와 기술 융합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지원	농진청	80
	영농승계 다변화를 통한 청년농업인 양성	농식품부	559
	유희시설 활용 창업지원		36
	귀농귀촌인 창업 주거지원		377
	스마트 팜 보급확산 및 전문기양성		2,129
	스마트 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	농진청	48
	농식품 벤처 지원 (인턴제 개편 및 엑셀러레이터 발굴)	농식품부	243
	농식품 펀드 민간투자 활성화		400
	말산업 육성		220
	다문화 여성 역량 강화		10
	농촌고용 인력지원		214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21년 추진실적 및 '22년 시행계획 24~27p 재정리

3. 해양수산부 복지지원 정책

1) 보건복지 부문

어촌의 보건복지 부문의 정책을 살펴보면 어업인 안전, 자연재해 보상을 위한 보험예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어업인 안전을 위한 시스템 구

축, 안전교육 및 장비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어업인 산업안전 및 복지사업에 예산을 주로 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업활동 지원, 어촌생활돌봄지원 등 여성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어촌 주민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와 어업인 특수 건강검진의 예산이 각 4억 원밖에 되지 않아 어업인이 현장에서 체감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다양한 연령, 세대 등 정책대상별 사업 추진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의료, 보육, 돌봄 등 보건복지 전반에 대한 어촌 실태 검토와 사업 추진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보건복지 부문은 생애주기별 정책 추진을 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에 맞춘 어촌형 복지정책 발굴과 추진이 필요한 실정이다.

2) 교육문화 부문

교육문화 부문은 어업 관련 교육과 청년 대상 교육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어촌지역의 쇠퇴, 지역소멸위기의 증가로 인해 귀농·귀촌을 위한 전략에 기반을 두어 사람을 유입시키기 위한 교육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교육문화 부문의 아홉 개의 사업 중 일곱 개가 신규 어업인과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며, 나머지 두 개 사업이 기존 어촌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규 어업인 유입을 위한 교육이 강화됨에 따라 기존 어업인에 대한 교육이 취약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대응도 필요해 보인다. 또한, 정주여건 부문에서 어촌뉴딜300 사업의 예산이 7,441억 원으로 책정되어 정주기반 개선뿐만 아니라 소득향상을 위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어촌 공동체 중심의 신규 소득사업 운영·관리를 위한 교육사업이 정책화 및 연계되고 있지 못한 점은 개선해야 할 점으로 판단되었다. 더욱이 교육·문화 사업의 대부분이 교육 부문에 집중되어 있고, 문화 영역의 정책사업은 해양수산부 차원에서 추진하지 않고 있다. 청년 유입을

위한 교육과 더불어 이들이 정착하였을 때 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필요하며 이는 청년의 어촌지역 정착유도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3) 정주여건 부문

정주여건과 관련된 사업에서 가장 큰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은 어촌 뉴딜300 사업이며 이는 정주여건 부문 전체의 71.3%를 차지할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어촌의 어항시설 개선, 정주환경, 소득사업 등을 위한 사업으로 어촌의 종합적인 지역개발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어촌 주민의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사업의 예산은 매우 적게 반영되고 있다. 최근 어촌 주민들이 지속해서 주민들의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일일생활권 확보를 위한 해상교통 환경 개선(316억 원), 해양·생활 쓰레기 처리(295억 원) 등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문제는 예산의 규모가 전체 어촌을 지원할 만큼 충분하지 못한 데 있다. 특히 섬 지역 생활 쓰레기 문제는 섬어촌의 가장 큰 문제이지만 현재 이에 대한 사업이 없으며, 이로 인해 주민들이 쓰레기를 해양에 투기하거나 소각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어촌지역은 주택이 노후화되어 고령인의 어업인들이 냉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관련 사업은 추진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농촌의 주택 개선사업과 빈집활용 등의 사업에 대규모 예산을 투자하는 것과 비교하면 어촌이 정책적으로 소외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경제활동 부문

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경제활동 부문은 청년 유입 지원과 어촌 관광, 수산식품 가공·유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하지만 어촌 관광, 청년 유입을 위한 지원사업은 농촌의 경제활동사업처럼 보다 세부적인 경제활동 산업

발굴을 바탕으로 한 지원이 필요하다. 최근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어업 및 관련 산업 전반에 기존의 체계를 변화시키는 노력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다양한 방향성과 어업·어촌 관련 사업 발굴을 기반으로 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표 2-3〉 해양수산부 삶의 질 관련 정책

분야	과제명	소관 부처	예산
보건복지 (13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어업 안전 보건센터 운영)	해양수산부	4
	어업인 특수 건강검진		4
	어업인 건강 연금보험료 지원		141
	어업인 안전 보험 가입자 확대		17
	어선원 및 어선재해 보상 보험 개선		1,163
	어업작업 안전교육 및 예방 장비 개발 보급지원		3
	어선 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40
	양식어업재해보험 가입률 제고 및 수지 개선		253
	어업활동 지원(대체인력 인건비)		2
	어촌생활돌봄 지원(도우미 활용비용 지원)		0.7
	연안해역 안전 지수 개발	해양경찰청	16
	민관협업 수난구호를 통한 선진바다 안전망 구축		19
	소형어선 안전 검사 단속제도 활성화		1
교육문화 (9개)	연구교습어장(운영비 지원)	해양수산부	10
	수산업 경영인 교육(운영비 지원)		2.26
	수산계 고교특성화(운영비 지원)		13.08
	귀어귀촌교육(귀어귀촌종합센터 귀어학교 지원)		25.25
	창업어가 멘토링		1.8
	어업인단체 역량 강화		3.9
	어촌지도자교육		3.4
	수산경영 대학과정(운영비 지원)		3.4
	농수산업 후계인력 장학금 지원		1
정주 여건 (18개)	도서 지역 해상교통 환경 개선	해양수산부	316
	연안여객선 현대화		235
	연안여객선 교통약자 편의시설 확충		11
	스마트 해상교통망 구축·운영		37
	도서 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		36
	어촌뉴딜300		7,441

분야	과제명	소관 부처	예산
	어항시설 안전관리(어항시설 보강)		949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개선(1) (해양폐기물 정화)		294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개선(2) (연안 어장 환경 개선)		155
	친환경 양식어업육성(첨단친환경 양식 시스템)		83
	갯벌생태계 복원 사업		174
	친환경 양식 에너지 보급		343
	조건 불리 지역 수산 직불제		155
	농어업유산지정 및 관리(2)		38
	외국인어업근로자 복지회관 건립		4
	해양 자율 방제대 운영 내실화(국민 방제대 운영 확대)	해양경찰청	2
	해양 쓰레기 줄이기 실천 운동		1
	해상교통 관제구역 확대		159
경제 활동 (10개)	수산 식품산업 거점 단지 조성	해양수산부	57
	수산물 유통체계 개선(1)		29
	수산물 유통체계 개선(2)		37
	어촌 관광 활성화		38
	해양 관광 활성화		1,091
	청년 어업인 후계영여자금		108
	귀어귀촌 활성화(민관 거버넌스 구축, 청년 어업인 양성)		100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		426
	수산 산업 창업 투자지원 추진		178
	어업인 일자리 지원센터		6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21년 추진실적 및 '22년 시행계획 24~27p 재정리 해양수산부(2022), 수산, 어업·어촌분야 복지관련 세부사업 재정리

4. 부처별 삶의 질 관련 예산 비교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의 네 개 부문별 전략과 주요 과제에 따른 부처별 전체예산과 농촌, 어촌 분야의 예산 비교를 통해 해양수산부와 기타 부처의 복지사업의 추진 현황을 비교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4>와 같다.

〈표 2-4〉 부처별 삶의 질 정책 예산 비교

부문	추진전략	주요 과제	전체 과제 (수/예산)	농림축산 식품부 (수/예산)	해양수산부 (수/예산)
보건 복지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제공과 포용적 공동체 형성	농어촌 의료서비스 여건 개선	11개/4,753억	2개/26억	2개/8억
		농어촌 통합 돌봄 시스템 구축	3개/539억	2개/233억	-
		보육·육아 친화적 농어촌 지역사회 육성	6개/997억	3개/62억	-
		농어촌 사회안전망 내실화	19개/1조 6,324억	7개/1조 4,609억	6개/1,617억
교육 문화	교육·문화 기획의 형평성 보장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교육서비스 확충	13개/2,431억	3개/175억	9개/64.1억
		농어촌 평생교육 강화	5개/121억	2개/18억	-
		농어촌지역 문화·여가 향유 여건 향상	8개/5,869억	-	-
		주민 주도형 문화·여가 향유 지원	5개/100억	1개/8억	-
정주 여건	농어촌다움이 살아있는 정주기반 구축	농어촌지역 교통 여건 확충	13개/2,394억	1개/419억	4개/599억
		농어촌 주거 여건 및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	117개/3조 9,972억	47개/6,915억	27개/40억
		인구 유입 촉진을 위한 정주기반 마련	167개/2조 9,022억	67개/1조 8,128억	27개/8,390억
		농어촌다움을 유지하는 환경·경관 보전	24개/4,225억	9개/2,119억	7개/1,242억
경제 활동	경제활동 다각화와 지역순환경제 구축	농어촌 지역자원을 활용한 소득기반 다각화	8개/930억	3개/672억	3개/123억
		농어촌 관광 활성화	6개/1,504억	3개/374억	2개/1,129억
		농어촌 취업·창업 촉진	18개/6,609억	9개/4,041억	47개/812억
		농어촌 여성 취업 지원 및 일손 부족 해소	5개/1,170억	2개/224억	1개/6억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21년 추진실적 및 '22년 시행계획 24~27p 재정리

1) 보건복지 부문

우선 보건복지 부문에서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여건 개선사업은 삶의 질 법에 근거한 어업안전보건센터 예산(4억 원)과 어업인 특수 건강검진(4억 원)이 전부이며, 총예산도 8억 원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료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어촌의 현실이 제대로 정책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어촌지역의 보육·

육아 관련 사업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돌봄, 보육·육아 관련 사업으로 총 295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사업의 부재로 인한 삶의 질 하락은 청년세대가 어촌을 떠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될 수밖에 없어 실태 파악을 통한 사업 추진이 절실하다. 농어촌 사회안전망 내실화의 경우 대부분 건강, 연금 및 재해보험과 관련된 지원예산으로 어촌 지역의 예산(1,617억 원)이 농촌지역(1조 4,609억 원)에 비해 큰 격차를 보이고 있어 어업·어촌특성을 반영한 보험 보장 및 예산 확대도 필요해 보인다.

2) 교육문화 부문

교육문화 부문에서 어촌을 위한 정책사업은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교육서비스 확충사업이 전부이며, 평생교육, 문화여가 지원사업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농어촌 교육서비스 확충사업은 농촌보다 예산은 작으나 다양한 교육서비스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어촌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과 문화·여가활동을 위한 사업이 전혀 없는 점은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농촌 분야 역시 관련 사업수나 예산(세 개 사업/26억 원)이 크지 않아 개선해야 할 점이 있으나 다양한 사업(문해교육, 양성평등교육, 축제지원 등)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문화교육 부문의 어촌정책 방향성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3) 정주여건 부문

네 개 부문 중에 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분야는 정주여건 부문이라고 할 수 있다. 어촌 교통 여건 확충(599

억 원), 인구 유입을 위한 정주기반 마련(8,390억 원), 어촌다움을 유지하는 환경·경관 보전사업(1,242억 원)은 농촌과 비교하여도 다른 부문보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고 있으며, 특히 인구 유입을 위한 정주기반 마련 사업 중 하나인 어촌뉴딜300 사업을 통한 대규모 정책사업 추진으로 어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섬어촌의 해상교통 여건을 고려할 경우 교통 여건 확충을 위해 지금보다 예산을 확대해 일일생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어촌 주거환경 및 인프라 개선사업은 농촌지역의 예산이 6,915억 원인 것에 반해 어촌지역은 40억 원밖에 되지 않아 이와 관련된 어촌의 주택 개선, 기초인프라 확충 등의 사업 추진이 필요해 보인다.

4) 경제활동 부문

경제활동 부문에서는 농촌, 어촌지역 모두 소득 다각화, 농어촌 관광 활성화, 농어촌 취업·창업을 위한 사업과 예산을 주로 투입하는 것으로 보이며, 어촌의 경우 어촌 관광을 위한 예산이 농촌 분야의 예산보다 높게 나타나 이를 통한 소득증대 및 지역 활성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에서 농촌의 경우 다양한 소득창출 아이디어(푸드플랜, 음식관광 등)를 활용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어촌의 사업은 생산(스마트 양식장) 또는 유통시설(수산물식품거점단지조성) 지원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어 다양한 소득 창출 아이템 발굴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지원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어촌의 경우 여성(다문화여성)일자리 지원을 위한 사업예산이 6억 원임에 반해 농촌은 224억 원으로, 어촌의 사업이 비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여성 인력을 어촌산업에 적극 유입시키고 지원할 수 있는 세밀한 정책설계와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2절 민간조직의 복지서비스 현황

1. 사회적기업

(1) 사회적기업의 정의와 유형

민간 부문의 복지서비스 현황 파악을 위해 사회적기업의 인증 현황을 살펴보았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⁷⁾을 의미하며, 목적에 따라 ① 사회서비스 제공형, ② 일자리 제공형, ③ 혼합형, ④ 지역 사회공헌형, ⑤ 기타(창의·혁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⁸⁾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증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⁹⁾

(2) 사회적기업 현황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는 사회적기업 인증 리스트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목적에 따라 사회적기업을 네 개 주요 부문별로 나누어 분류한 결과는 <표 2-5>와 같다.

<표 2-5> 사회적기업 인증 현황(2021년 9월 기준)

단위: 개

지역	보건복지	교육문화	정주여건	경제활동	비율
서울	58	152	59	296	17.6
경기	62	87	123	289	17.4

7)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항

8)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검색일: 2023.2.9.)

9)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 제1항

지역	보건복지	교육문화	정주여건	경제활동	비율
인천	14	43	29	116	6.3
부산	14	49	16	73	4.7
강원	16	45	25	96	5.7
경남	21	32	25	80	4.9
경북	14	39	16	148	6.7
광주	5	33	16	82	4.2
대구	5	35	10	68	3.7
대전	8	24	8	52	2.9
세종	2	6	5	10	0.7
울산	13	21	19	57	3.4
전남	11	21	13	127	5.3
전북	13	49	27	94	5.7
제주	4	17	8	54	2.6
충남	9	28	21	68	3.9
충북	11	20	28	76	4.2
총합계	280	701	448	1,786	100.0

자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검색일: 2023.2.9.) 사회적기업 리스트를 분야별로 저자 재분류

사회적기업의 인증 현황을 살펴보면 경제활동 관련 기업이 1,786개로 전체의 55.6%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문화, 정주여건, 보건복지 부문 순으로 기업이 설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건복지 부문의 기업은 가장 작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적기업을 통한 보건복지 분야 서비스가 취약한 것을 의미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지역이 사회적기업 전체의 41.3%를 차지하고 있어 복지서비스의 수도권 쏠림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특성이 반영되어 수익성 및 수요자가 분포한 지역 중심으로 기업 설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사회적협동조합

(1) 사회적협동조합의 정의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주민의 권익 및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의미한다.¹⁰⁾ 사회적협동조합은 공익적인 가치와 목적을 중시하며 전체 사업 중에 공익적 사업을 40% 이상 운영해야 한다는 점과, 비영리법인의 성격으로 인해 배당이 금지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협동조합과 차이를 두고 있다.

(2) 사회적협동조합 현황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사회적협동조합 현황은 <표 2-6>과 같다.

<표 2-6> 사회적협동조합 현황(2021년 9월 기준)

단위: 개

지역	보건복지	교육문화	정주여건	경제활동	비율
서울	249	200	30	116	24.5
경기	231	215	47	107	24.7
인천	29	24	12	15	3.3
부산	24	19	5	14	2.6
강원	49	52	4	40	6.0
경남	54	53	3	28	5.7
경북	50	35	7	25	4.8
광주	38	21	3	7	2.8
대구	21	20	3	11	2.3
대전	32	37	5	13	3.6
세종	2	7	-	10	0.8

10)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3항

지역	보건복지	교육문화	정주여건	경제활동	비율
울산	19	18	-	12	2.0
전남	70	27	1	25	5.1
전북	65	28	3	16	4.6
제주	14	16	3	6	1.6
충남	28	31	4	15	3.2
충북	21	30	6	5	2.6
총합계	996	833	136	465	100.0

자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검색일: 2023.2.9.) 사회적협동조합 리스트를 분야별로 저자 재분류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기업과 다르게 보건복지 부문이 41.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교육문화, 경제활동, 정주여건 순으로 설립되었다. 공익의 목적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적협동조합의 특성으로 인해 교육, 의료, 복지 분야 지원을 위한 설립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회적협동조합 역시 수도권지역에 52.5%로 집중되어 있어 농어촌지역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한 복지서비스 공급에 한계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회적기업과 마찬가지로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위한 조합의 설립 비중이 낮아 정주환경 관련 서비스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주요 부처별 농어촌 삶의 질 여건 개선을 위한 복지정책과 민간 부문의 복지서비스 공급 현황을 검토함으로써 농어촌지역 복지정책의 방향성과 한계점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어촌·어업인의 복지 여건 개선을 위한 방향성을 도출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촌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 제공 및 개선을 위해서는 지자체 또는 해양수산부의 어촌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현장에 맞는 과제 발굴과 추진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의 부처는 부처 특성에 맞춰 일부 농어촌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자체 또는 관련 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원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는 설계보다는 전체 농어촌지역의 지역 차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농촌과 어촌을 함께 묶어서 추진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반면 농어촌 전 지역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예산이 크지 않아 소외되는 지역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사각지대는 결국 농촌 또는 어촌을 담당하고 있는 부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농촌의 경우 다양한 정책대상을 고려하여 다른 부처에서 제공되지 못하는 정책을 지원하거나 농촌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어촌의 경우는 충분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농촌의 경우 전체 사업의 수가 63개인 반면 어촌의 경우 50개로 작으며 예산도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점이 그 방증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어촌의 복지정책도 생애주기형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에서 중요한 전략으로써 추진하고 있는 생애주기 복지서비스의 장점은 생애주기별 다음 주기를 위한 사전적 대응 및 예방을 통해 지역 내 생활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표가 있다. 농촌 분야에서도 여성

농업인이라는 특정 정책대상을 생애주기별 복지환경 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여성농업인의 농촌 생활 안전성과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어 어촌도 이를 고려한 정책 방향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청년 또는 여성의 어촌정착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 되기 때문이다.

셋째, 정책대상의 세분화·다양화를 통해 맞춤형 복지서비스 정책 추진 및 확대가 필요하다. 최근 정책은 대부분 여성어업인, 청년세대, 귀어·귀촌인 등 특정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정책대상을 세분화하여 그들에게 맞는 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는 네 개 모든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정책들이 분야별 연계를 통한 종합적인 지원 형태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를 바탕으로 일자리부터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어촌 분야 복지정책은 정책 방향을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확장함으로써 다양한 정책대상이 만족할 수 있는 정책 방향성 설정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부처별 복지서비스 연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이다. 농촌과 어촌은 공간적으로 공유되는 지역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일정 규모의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는 상황에 따라 두 부처 협력사업 추진도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섬 지역의 경우에도 어촌과 농촌이 같은 행정구역 안에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 교통시설, 주택정비, 환경 개선 등은 연계를 통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또한 기능과 세부 정책대상에 따라서도 부처별 연계가 가능하며, 의료서비스, 원격교육·돌봄 등이 그 사례에 해당한다. 따라서 복지정책의 효율성 및 효과 제고 측면에서 농어촌지역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부처별 협력체계 마련 및 사업 추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03

어업인 복지실태조사

제1절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 현황 및 한계

1.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1) 조사목적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¹¹⁾는 농어업인 등의 복지증진과 농어촌 지역개발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어촌과 도시지역 간 생활 격차를 해소하여 농어촌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보다 높은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이다. 2004년부터 '농림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 등 조사'가 의무화됨에 따라 5년 주기로 실태조사를 추진하였으며, 2013년부터는 조사 주기를 변경¹²⁾하여 매년 관련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11) 법적 근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 실태 등 조사),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6조(실태조사의 실시), 국가승인통계 제114037호('16.8.28)

12) 2013년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로 조사 명칭, 조사 주기, 조사내용을 변경하였으며 2019년에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로 명칭 변경함

2) 조사체계 및 내용

(1) 조사체계

실태조사는 매년 시행하되, 종합조사(1년 차)와 부문별 조사(2~5년 차)가 1주기를 구성하는 체계를 이루고 있다. 종합조사는 농어촌 주민 및 삶의 질 비교를 위해 도시 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부문별 조사는 농어촌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표 3-1〉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 조사체계(제4차 기본계획)

구분	주요 조사내용	조사대상
1년 차(2018년)	종합조사	농어촌 2,800가구 도시 1,200가구
2년 차(2019년)	경제활동, 문화·여가 등	농어촌 4,000가구
3년 차(2020년)	교육, 가족, 지역사회 및 공동체 등	
4년 차(2021년)	보건의료, 사회안전망 및 복지서비스 등	
5년 차(2022년)	기초생활 여건, 환경·경관, 안전 등	

자료: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2018), p. 8.

(2) 조사설계 및 방법

실태조사에서 종합조사는 전국 동·읍·면 지역의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조사규모는 전국 농어촌지역 2,800가구, 도시지역 1,200가구를 표본 규모로 설정하였다. 표본추출은 다단계화집락추출 방식을 활용하였으며, 표본 읍·면 추출(1차) → 읍·면 내 조사구 추출(2차) → 가구 추출(3차)을 바탕으로 표본을 추출하였다. 설문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직접 대면조사로 수행하였다.

〈표 3-2〉 조사설계 및 방법(2018년)

구분		세부내용
표본설계	모집단	• 전국 동·읍·면 지역의 모든 가구
	표본추출틀	• 2015년 등록센서스에서 파악한 조사구들로 MDIS에 탑재된 명부
	표본규모	• 농어촌 2,800가구, 도시지역 1,200가구
	표본추출	• 다단계확화집락추출 - 1차 추출: 표본 동·읍·면 추출 - 2차 추출: 동·읍·면 내 조사구 추출 - 3차 추출: 가구 추출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직접면접조사 • 조사대상: 표본가구의 가구주 또는 가구주 배우자(만 19세 이상) • 조사기간: 약 1.5개월

자료: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2018), p. 8.

(3) 조사내용

2018년 종합조사는 생활 전반, 보건의료, 복지, 교육, 문화·여가, 기초생활 여건, 환경·경관, 지역공동체, 경제활동 등 아홉 개 부문 78개 항목을 조사하였다.

〈표 3-3〉 조사내용(2018년 기준)

구분	세부내용
일반사항	가족 수, 가구주와의 관계, 성, 연령, 혼인상태, 학력, 직업, 동거 여부, 농어가 여부, 65세 이상 가구원 유무, 장애 가구원 현황, 결혼이민자 현황,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 등
생활 전반	이주실태, 이주 의사, 농어촌생활 부문별 중요도 및 만족도, 농촌 주민의 사회안전망 구축제도 인지 여부 및 이용 경험·만족도, 전반적인 농어촌생활 여건에 대한 만족도, 정신건강, 주관적 건강 상태,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 5년 전 대비 삶의 질 변화 등
보건의료	의료기관 이용실태, 공공의료시설 이용 경험, 응급실 이용 경험, 질병치료 시 어려움 등

구분	세부내용
복지	보험가입 현황, 위기에 대한 경제적 대비 정도, 복지서비스 이용 경험 및 만족도, 필요 복지서비스, 필요한 노인복지서비스, 영·유아 보육 및 교육 방법, 영·유아 보육 및 교육비용, 영·유아 보육 및 교육의 어려움, 필요한 장애인복지서비스 등
교육	자녀 통학 시 교통수단 및 소요시간, 자녀의 방과 후 시간 활용,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평생교육 경험 및 수요, 평생교육 참여의 어려움
문화·여가 여건	주된 문화·여가활동, 문화·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 하고 싶은 문화·여가활동, 문화·여가활동 시 어려움, 전통문화 활용 문화·여가 참여 경험 및 수요
기초생활 여건	주택 건축·신축년도, 주택 점유형태, 주택 종류, 주택의 방 개수·면적, 주택의 시설현황, 난방비 부담, 주택에 대한 만족도, 주택 개보수 필요성, 상수도 및 하수도 종류, 쓰레기 처리 방법, 기초생활 여건 영역별 만족도, 마을안전 체감도, 생활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환경·경관	개선해야 할 환경문제, 마을 경관에 대한 인식, 농어업·농어촌 가치 인식 등
지역공동체	가족·이웃과의 교류, 공동체 활동참여, 외부인 유입 여부, 외부인에 대한 수용성, 마을공동사업 경험 및 참여 의사, 마을공동사업에 대한 인식, 지역발전 정도에 대한 인식
경제활동	도농 교류 및 6차 산업 경험 유무 및 만족도, 도농 교류 및 6차 산업 추진 시 어려움, 월평균 생활비,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우선 투자 영역

자료: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2018), p. 9.

2.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의 한계

1) 표본설계의 문제점

(1) 낮은 농어업인의 비중

종합조사의 경우 농어촌 조사표본은 2,780부이며, 이 중 농어가는 조사 대상 중 30.7%(853가구)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체 표본에서 비중은 21.7%로 낮게 나타난다. 도시와의 비교, 농어촌 내에서의 비 농어가와 비교를 위해 대상을 분류하여 조사하고 있으나, 전체 표본 대비 농어가의 비중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어, 농어촌의 조사표본과 농어가의 비중을 더 높일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의 목적은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이므로 표본 수는 다른 비교집단 대비 특성을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파악할 수 있도록 표본 비중이 높아야 한다. 즉, 농어촌은 농촌, 어촌, 산촌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각 분류에 따라 지역 특성 및 입지유형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어 이를 고려한 표본설계가 필요하지만, 해당 조사는 제한적인 농어업인 표본 수로 인하여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2) 어업인의 표본 미분류

해당 조사에서 농어가 중 어가의 비중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로 조사가 수행되었고, 이로 인해 어촌 및 어가는 따로 분류되지 못하고 실태 조사가 추진되었다. 농촌의 정책과 어촌의 정책은 담당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나누어 각각의 특성에 맞도록 정책을 설계·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음에도 실태조사는 농어가로 묶어서 표본이 설계되고 이에 따른 분석도 분야별로 분류되어 해석되지 못하는 치명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는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를 어촌정책 설계를 위한 기초자료로써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실제로 전체 표본대상 중 어가의 비중이 5% 이내인 것¹³⁾을 볼 때 관련 문제 해결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13)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의 어촌·어가실태 반영 미흡에 대해 지적(2021년 국정감사, 위성곤 의원)

2) 조사설계의 한계

(1) 농업 중심의 문항으로 인한 어촌특성 문항 반영 한계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는 2004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부터 시행되었으며 농어업을 구분하지 않고 실태조사를 추진하였다. 하지만 2015년 제3차 기본계획부터 어촌·어업인에 대한 사업이 별도 추진되기 시작하였음에도 해당 실태조사는 지금까지 어촌·어업인의 특성을 고려한 문항을 포함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관련 조사 문항은 농업 중심의 문항과 보기 항목으로 구성되어 어촌 주민 또는 어업인이 대답할 수 없는 문항이 다수 존재한다. 예를 들어, 조사대상의 직업은 농업과 어업이 분류되지 못하고 농어업으로 통합되어 제시되고 있으며, 응급실 및 통학을 위한 교통수단은 해상선박, 또는 복합이용(선박과 차량) 등 어촌특성을 반영한 보기 항목은 빠져 있다. 또한, 복지서비스 및 평생교육 관련 질문에는 농촌 중심용어로 질문이 구성되어 있어 어촌 관련 문항은 고려되지 못하고 있고, 보험가입 현황도 농업 관련 보험만 제시되는 등 어촌실태를 반영한 질문과 보기가 적절하게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결국 공통문항 외에 어촌특성에 맞는 조사설계가 필요함에도 이를 개선하지 않아 조사결과를 어촌실태를 반영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2) 응답자의 특성 분류 및 분석 한계

농어업인을 구분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조사설계의 한계와 더불어 응답자 특성에 따른 분석이 부족하여 최근 대두되고 있는 청년, 여성, 외국인, 고령인 등의 세부분류에 따른 분석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10년대 이후 다문화가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이는 농어촌지역에서 나타나는 주요 현상임에도 이들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이 충분하지 못하다. 또한, 최근 농어촌지역의 인구소멸에 따른 청년과 여성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이에 대한 별도의 분석이 필요함에도 연령별·성별 분류에 따른 결과만 제시하고, 세부적인 분석은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제5차 기본 계획 수립에 앞서 관련 조사에 세부적 유형에 따른 분석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사설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

3) 관계기관 간 협조 한계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는 각 부처의 담당자 또는 전문지원기관이 협조하여 조사체계를 구축하고 조사설계를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하지만 기존의 사업추진체계에서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각 분야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현장을 반영한 실태조사 추진에 한계를 보였다. 이로 인해 2021년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관련 조사가 어촌·어업인의 실태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되었다.

2022년부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 부처 및 기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사업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수행하고 있으나 아직 현실적인 협력 및 대응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실태조사의 문제는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어촌·어업인의 복지실태 파악을 위한 별도의 조사가 필요한 실정이며, 이를 통해 향후 삶의 질 계획수립에 어촌·어업인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제2절 어업인 복지실태 설문조사

1. 조사개요

1) 조사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어업인 복지서비스 개선을 위해 기존의 자료보다 세밀한 실태 파악 및 분석이 가능하도록 어촌의 특성을 반영한 어업인 복지실태조사를 추진하였다. 1절에서 기술하였듯이 농진청에서 추진 중인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는 전체 표본 중 어업인의 비중이 매우 낮고, 어촌 분야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어촌 부문 복지실태에 대한 진단과 분석이 불가능하였다. 어촌은 농업과 산업·지역적 특성의 차이로 인해 기존 공통항목의 조사로는 정확한 실태 파악이 불가능하여 본 연구에서 기존의 설문조사에 어촌특성을 반영하여 조사항목을 개선하고 어업인을 대상으로 복지실태조사를 추진하였다.

어업인 복지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업인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촌의 복지실태와 정부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복지서비스의 만족도 및 문제점을 진단·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현장 중심의 어업인 복지서비스 정책 방향 및 과제 발굴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조사설계 및 내용

(1) 조사설계

어업인 복지실태조사는 전국 어선어업, 양식어업, 맨손어업, 나잠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내수면 어업인은 조사에서

제외하였다. 표본은 어촌계분류평정 어촌계 명부를 활용하여 ① 광역별 층화 → ② 기초지자체별(1차)/종사유형별(2차) 할당을 통해 집락(어촌계) 추출¹⁴⁾하였고, 특화 설문은 어업유형별 할당 및 집락 추출하여 확보하였다.

〈그림 3-1〉 어업인 복지실태조사 표본설계(안)

표본 설계과정					Step03 표본할당 방법 검토				
Step01 조사방법 및 할당					다양한 방법이 표본 설계안 검토를 통한 최적의 설계안 검토 : 제급근비례할당으로 결정 (비례 할당, 제급근비례할당, 네이만배분 등 검토)				
1차할당 (9개 지역): ① 경기-인천, ② 강원, ③ 충청, ④ 전북, ⑤ 전남, ⑥ 경북, ⑦ 경남, ⑧ 부산, ⑨ 제주 2차할당 (종사유형): ① 어선어업, ② 양식어업, ③ 복합형					Step04 표본추출				
Step02 표본크기 결정					- 집락추출방법을 사용하여 표본 추출 - 대표성 확보를 위해 일부 심 지역 별도 할당				
• 표본 : 1,000개									
전국 어촌계 분포 수					표본 설계				
(단위: 개)					(단위: 명)				
지역	종사유형			합계	지역	종사유형			합계
	어선어업	양식어업	복합형			어선어업	양식어업	복합형	
합계	546	645	832	2,023	합계	320	270	410	1,000
경기	32	21	46	99	경기	30	20	30	80
강원	61	-	13	74	강원	60	-	10	70
충청	22	69	78	169	충청	20	40	50	110
전북	22	13	29	64	전북	20	20	30	70
전남	118	441	295	854	전남	30	130	80	240
경북	110	9	33	152	경북	70	10	20	110
경남	167	73	231	471	경남	60	30	90	180
부산	11	7	21	39	부산	20	10	30	60
제주	3	12	86	101	제주	10	10	70	90

자료: 저자 작성

설문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에 근거하여 개별 면접조사로 추진하였으며, 2022년 10~11월 약 2개월간 설문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1,009부의 유효표본을 확보하였다.

14) 표본할당은 제급근비례할당, 도서지역은 별도할당 실시

〈표 3-4〉 지역별 유효표본 분포

단위: 명, %

지역	사례수	비중
부산	50	5.0
인천	21	2.1
울산	12	1.2
경기	68	6.7
강원	104	10.3
충남	114	11.3
전북	76	7.5
전남	260	25.8
경북	136	13.5
경남	135	13.4
제주	33	3.3
합계	1,009	100.0

자료: 저자 작성

이를 바탕으로 어업인 복지실태조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3-5〉 설문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목적	어업인 복지실태조사를 통한 정부정책의 기초자료 제공
모집단	전국 어촌지역 어업인(어선, 양식, 맨손, 나잠어업)
표본크기	1,000명
표본추출방법	제공근비례할당(도서지역은 별도할당)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일대일 면접조사
조사지역	경기, 인천, 충남, 전북, 전남, 경남, 부산, 울산, 경북, 강원, 제주
조사기간	2022년 10월~11월(2개월)
조사기관	리서치 앤 리서치

자료: 저자 작성

(2) 조사내용

어업인 복지실태조사는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의 분야별 공통항목과 어촌특화항목으로 구분하여 구성되었다. 공통항목에서의 복지실태 조사 내용은 생활만족, 보건의료, 복지 여건, 교육 및 문화여가, 환경 및 경관, 기초생활 여건, 지역공동체, 경제활동 분야의 세부사항을 조사하였고, 어촌 특화 항목은 어업작업재해(어선)¹⁵⁾, 자연재해(어선, 양식)¹⁶⁾, 도서지역 특화문항¹⁷⁾, 어업인 복지지원정책 인식 내용을 포함하여 실태조사를 추진 하였다. 세부 조사항목 및 내용은 <표 3-6>과 같다.

〈표 3-6〉 어업인 복지실태 조사내용

조사부문	세부 분야	세부 조사항목
보건의료 부문	보건의료서비스 만족도	민간 및 공공의료기관 만족도(교통수단, 소요시간, 서비스 등)
	응급의료서비스 이용실태	응급실 이용 만족도(교통수단, 소요시간)
	보건의료 여건 전반	보건의료 전반 만족도
복지 부문	사회안전망(보험)	보험가입 현황, 위기에 대한 대비 수준
	복지서비스 이용경험 및 수요	복지서비스 이용 만족도, 필요 복지서비스
	노인복지	필요 노인복지서비스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영·유아 보육·교육 방법 및 비용, 영·유아 보육 및 교육의 어려움
	장애인 복지	필요 장애인복지서비스
교육 부문	학생교육	통학 교통수단 소요시간, 방과 후 활동, 교육 여건 개선사항
	평생교육	평생교육 종류 경험 및 어려움
문화여가 부문	문화·여가활동 경험 및 수요	주 여가활동, 여가활동 수요, 여가활동의 어려움
	전통문화·여가활동 경험 및 수요	전통문화·여가활동 경험 및 수요
기초생활	주택 여건	건축노후도, 주택의 종류 및 점유 형태, 주택 내 시설, 주택의 규모,

15) 재해 발생 상황/원인, 부상 정도, 조업 피해, 산재보험 적용, 재해 지원/장비 등

16) 태풍·적조 피해실태 및 규모, 재해보험 적용, 재해 지원 등

17) 위판장 이용 현황, 위판 불가 시 판매방식, 판매지원, 폐기물처리, 급유/급수

조사부문	세부 분야	세부 조사항목
여건 부문		난방비, 주택에 대한 만족도, 주택 개보수 필요 부분
	생활 여건	상하수도 종류, 쓰레기 처리, 기초생활 여건 분야별 만족도
	안전	범죄, 교통, 재난, 환경오염으로부터 안전 수준 생활안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지역 환경 및 공동체 부문	환경	개선 필요 환경문제(대기·수질·토양오염, 소음, 쓰레기 등)
	경관	마을경관에 대한 인식, 활동참여 여부 및 의사
	공익적 가치	어업·어촌의 공익적 가치
	가족·이웃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공동행사 및 작업의 참여 정도, 외부인에 대한 인식 및 수용성
	마을공동사업 참여	마을공동사업의 인식 및 참여 의사, 거주지역의 발전 가능성
경제 활동 부문	어촌산업	어촌산업 경험 및 만족도, 어촌산업 추진 시 어려움
	경제활동 여건	전업 여부 및 소득비중,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 분야

자료: 저자 작성

2. 조사결과

1) 응답자 특성

어업인 복지실태조사의 응답자 특성은 다음 <표 3-7>과 같다. 설문조사의 응답자는 어선어업 종사자가 가장 많았으며 양식어업, 맨손어업, 나잠어업 순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육지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비중이 92%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섬 지역 응답자는 8%로 나타나 다소 낮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어업인 소득은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여 구간별로 고르게 분포하였으며, 양식어업 또는 어선어업인의 소득이 높고 나잠어업과 맨손어업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어업인은 대부분 전업의 형태로 소득 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약 28% 정도의 어업인만 겸업을

통한 경제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업인 나이는 60대 이상이 가장 많은 60.2%를 차지하여 어업인의 고령화 문제가 조사에도 반영되었고, 청년 비중은 13.6%밖에 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응답 어업인의 성별은 남성이 약 77%를 차지하였다.

〈표 3-7〉 어업인 복지실태 응답자 특성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비중
계		1,009	100.0
종사업종	어선어업	535	53.0
	양식어업	374	37.1
	나잡어업	20	2.0
	맨손어업	80	7.9
도서지역 거주 여부	섬 지역	81	8.0
	육지 지역	928	92.0
연간 가구소득	2천만 원 미만	93	9.2
	2천~4천만 원 미만	181	17.9
	4천~6천만 원 미만	134	13.3
	6천~8천만 원 미만	115	11.4
	8천~1억 원 미만	141	14.0
	1억~2억 원 미만	239	23.7
	2억 원 이상	106	10.5
어업 전업 여부	전업	720	71.4
	겸업	289	28.6
연령대	40대 이하	137	13.6
	50대	265	26.3
	60대 이상	607	60.2
성별	남성	776	76.9
	여성	233	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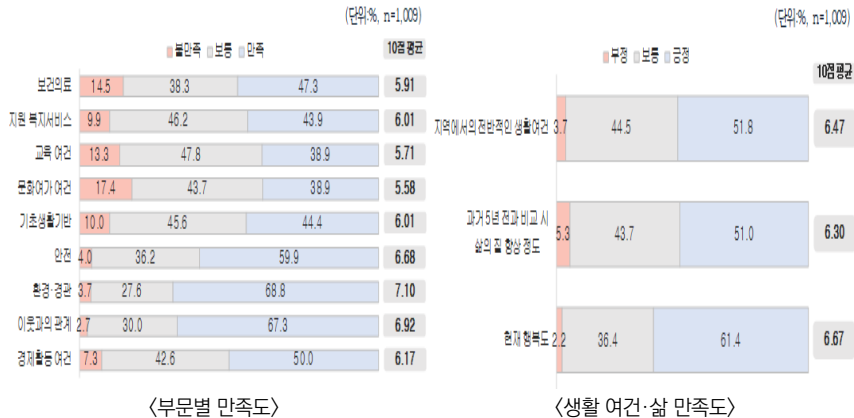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2) 어촌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

(1) 부문별 만족도

어업인 복지실태조사를 통해 어촌생활의 만족도(10점 만점 기준)를 부문별로 세분화한 결과 환경·경관(7.1점)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이웃과의 관계(6.92점), 안전(6.68점) 순으로 평가하였다. 반면, 교육 여건(5.71점), 문화여가 여건(5.58점), 보건의료(5.91점)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서 도시와 어촌 간 지역 격차를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한편, 전반적인 생활 여건에 대한 평가에서 현재 행복도(6.67점)가 높았고, 전반적인 생활 여건(6.47점), 과거와 비교한 삶의 질 향상 정도(6.30점)도 평균 이상으로 나타났다(<그림 3-2> 참고).

〈그림 3-2〉 어촌생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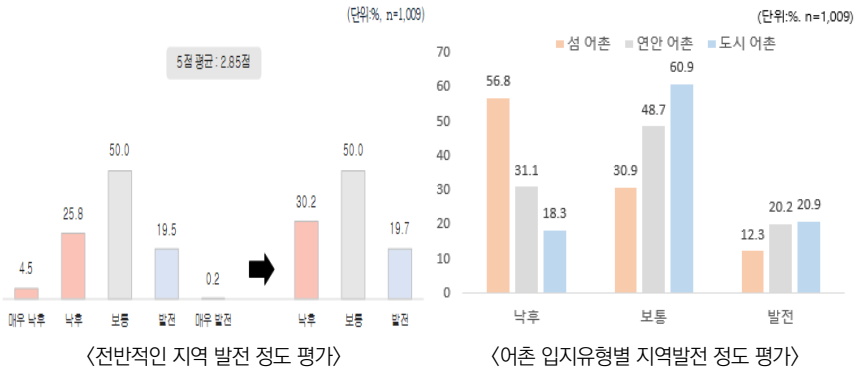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2) 지역의 발전 정도

전반적인 지역의 발전 정도는 보통(50.0%), 낙후(30.2%), 발전(19.7%) 순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평균 2.85점(5점 만점 기준, 이하 동일)으로 나타

났다. 반면, 다수의 어업인은 섬어촌의 발전 정도를 낙후(56.8%)된 것으로 평가하여 연안어촌과 도시어촌 간 발전 격차를 유추할 수 있다(〈그림 3-3〉참고).

〈그림 3-3〉 지역 발전 정도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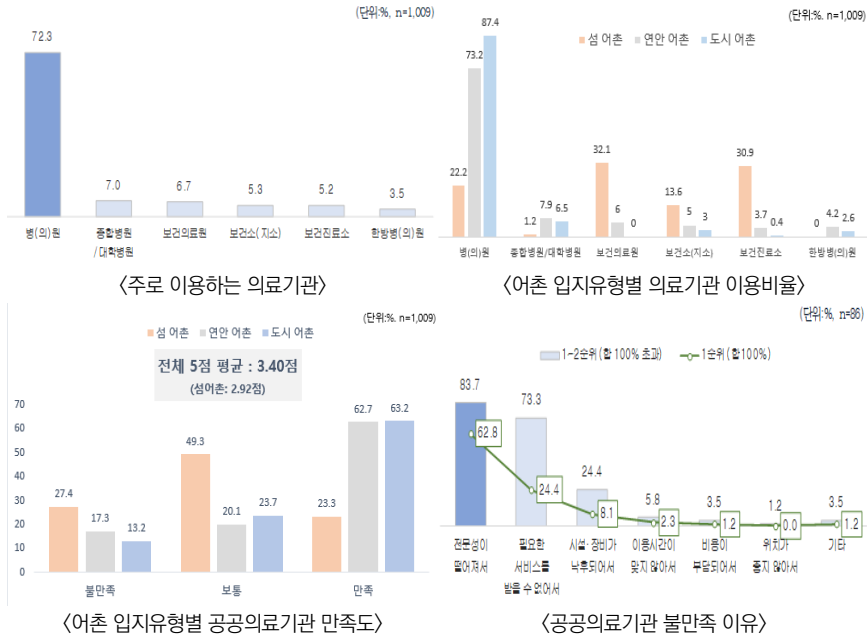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3) 보건복지

(1) 의료기관 이용실태

의료기관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어업인들은 주로 병(의)원을 이용하고 있으며(72.3%), 공공의료기관인 보건의료원, 보건소(지소), 보건진료소에 대한 이용률(17.2%)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반면, 섬어촌의 공공의료기관 이용 비중(76.6%)은 연안어촌과 도시어촌에 비해서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이는 어촌의 입지유형별 의료서비스 격차를 반영하는 결과인데, 섬어촌의 공공의료기관 보건의료서비스 만족도(2.92점)가 전체 평균(3.4점)을 하회한 점에서도 유추할 수 있다(〈그림 3-4〉참고).

〈그림 3-4〉 의료기관 이용실태



자료: 저자 작성

세부적으로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불만족 사유(1순위 기준, 이하 동일)는 전문성 미확보(62.8%), 적정 서비스 부재(24.4%), 낙후된 시설·장비(8.1%) 순으로 나타나며, 어업인들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의료환경의 개선을 요구하는 것으로 드러난다(〈그림 3-4〉 참고).

(2) 응급실 이용실태

응급실 의료서비스 이용을 위한 주된 교통수단은 개인차량(50.8%), 구급차(37.3%) 순이었으며, 응급실과 어촌 간 평균 이동시간은 약 25.95분으로 나타났다. 어촌의 입자유형에 따라 이동시간의 차등은 발생하는데, 섬어촌의 이동시간(45분)은 연안어촌 및 도시어촌(25.3분)에 비해 약 2배가 소요된다. 배를 이용하여 중증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섬어촌의 특성상 의료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의료 이송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3-5〉 참고).

〈그림 3-5〉 응급실 이용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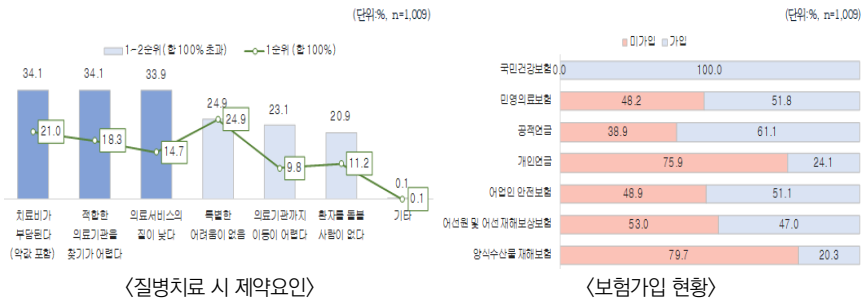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3) 사회안전망 이용실태

질병치료 시 제약요인에 대해서 어업인들은 치료비 부담(21.0%)을 가장 큰 한계로 느끼고 있으며, 적정 의료기관 부재(18.3%), 낮은 의료서비스 질(14.7%) 순이었다. 이는 지역의료 격차가 심화된 결과 지표로 보이며, 어업인은 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보험제도 중 국민건강보험(100%), 공적연금(61.1%), 민영의료보험(51.8%) 등에 가입하고 있다 (〈그림 3-6〉 참고).

〈그림 3-6〉 사회안전망 이용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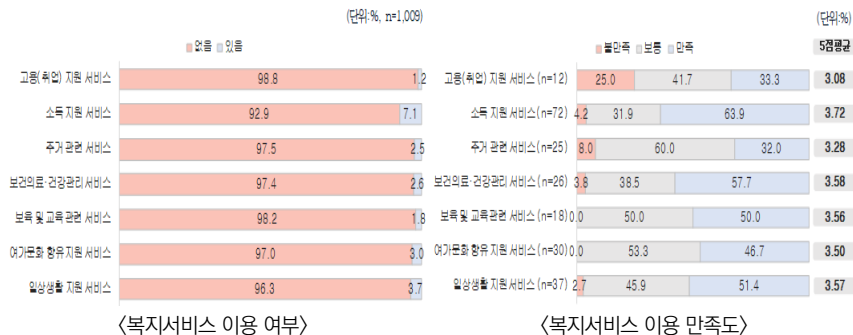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4) 복지서비스 이용실태

복지서비스 중 소득지원 서비스(7.1%)의 경험률이 가장 높았으며, 일상생활지원 서비스(3.7%), 여가문화 향유지원 서비스(3.0%) 순으로 도출되어 어업인의 복지서비스 이용경험은 전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가운데 고용지원 서비스, 주거 관련 서비스, 여가문화 향유지원 서비스는 이용만족 수준이 50% 미만으로 나타나며, 복지서비스의 맞춤형 지원과 전달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함의한다. 특히, 물리적 한계 극복 방안뿐만 아니라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 다방면의 정책 개선을 통한 복지서비스 사각지대의 해소가 시급한 문제이다. 한편,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인 복지서비스는 소득지원 서비스(63.9%)로, 정책대상자인 어업인은 직접적인 재정지원 형태를 선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3-7〉 참고).

〈그림 3-7〉 복지서비스 이용실태 및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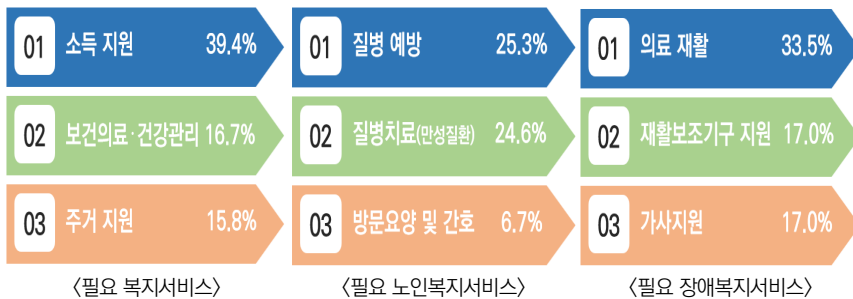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어업인에게 가장 필요한 복지서비스는 소득지원 서비스(39.4%), 보건의료·건강관리 서비스(16.7%), 주거지원 서비스(15.8%)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재정, 건강, 주거 등 안전의 욕구를 선제적으로 충족하려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노인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는 질병예방 서비스(25.3%), 질병치료 서비스(24.6%) 등 보건의료·건강관리 수요가 높게 도출되어 고령화된 어촌의 중점 추진 사업을 확인할 수 있다. 유사하게 장애인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는 의료 재활 서비스(33.5%) 등 보건의료 관련 서비스의 비중이 높으므로 취약계층의 복지안전망 및 의료보장 확대를 위한 정책 마련에 주력해야 한다(〈그림 3-8〉 참고).

〈그림 3-8〉 필요 복지서비스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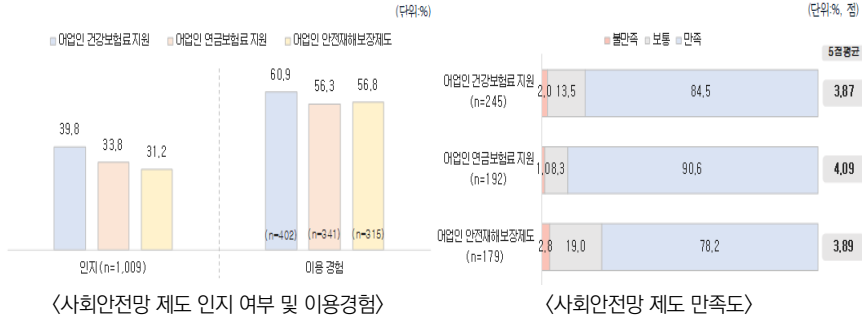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5) 어업인 복지서비스 이용실태

1차 사회안전망에 속하는 사회보험 중 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39.8%)의 인지도가 가장 높았으며, 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33.8%), 어업인 안전재해보장제도(31.2%) 순이었다. 제도별 이용경험률도 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60.9%), 어업인 안전재해보장제도(56.8%), 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56.3%)으로 나타나 절반 이상이 선별적 복지를 통해 위험 유형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어업인은 사회안전망 제도 가운데 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4.09점)에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어서 직접적인 재정적 지원을 형태를 선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그림 3-9〉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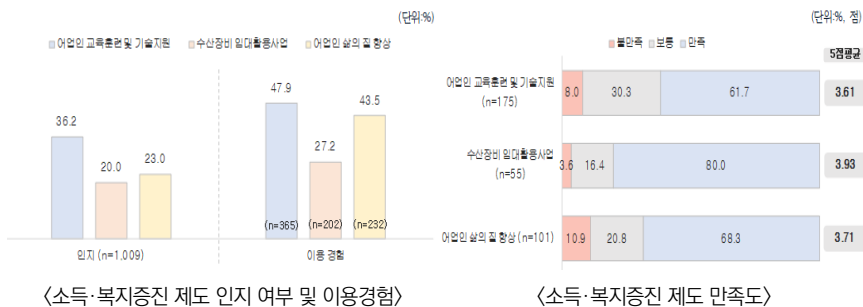
〈그림 3-9〉 어업인 사회안전망 제도 이용 현황



자료: 저자 작성

사회안전망 제도 이외에 소득 및 복지증진 제도와 관련하여 어업인 교육 훈련 및 기술지원(36.2%)의 인지도가 높았고, 어업인 삶의 질 향상(23.0%), 수산장비 임대활용 사업(20.0%) 순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각 제도의 이용 경험도 어업인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47.9%)의 수요가 높은 등 동일한 순이었다. 해당 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어업인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3.61점)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교육체계의 질적 관리 및 진단과정이 필요함을 내포한다. 직접적인 복지제도와 간접적인 제도(교육 등) 간 만족도의 간극이 발생하여 교육훈련 내용의 내실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그림 3-10〉참고).

〈그림 3-10〉 어업인 소득·복지증진 제도 이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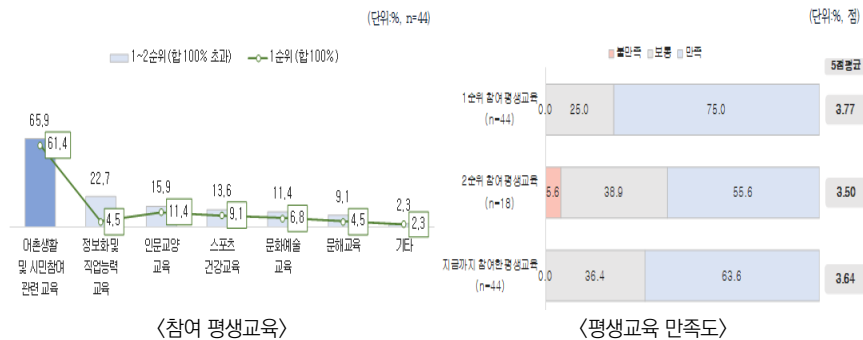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4) 교육문화

(1) 평생교육

평생교육 중 어촌생활 및 시민참여 관련 교육(61.4%)의 경험률이 높았으며, 인문교양교육(11.4%), 스포츠 건강교육 등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교육의 공급과 수요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각 교육에 참여한 어업인들은 전반적으로 평균 이상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어서 평생교육의 필요성을 유추할 수 있다(〈그림 3-11〉 참고).

〈그림 3-11〉 평생교육 이용실태 및 만족도



〈참여 평생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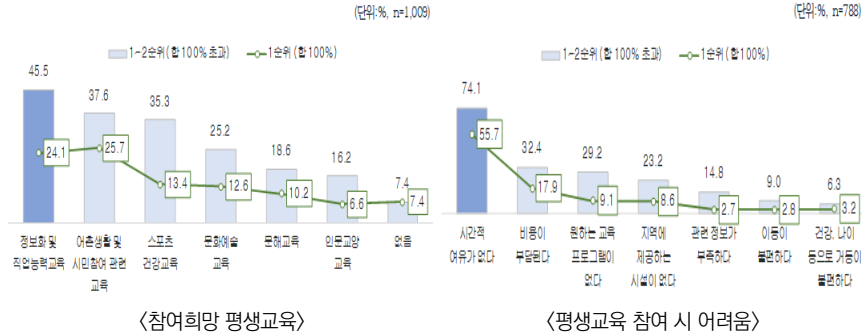
〈평생교육 만족도〉

자료: 저자 작성

향후 참여를 희망하는 평생교육은 어촌생활 및 시민참여 관련 교육(25.7%), 정보화 및 직업능력교육(24.1%), 스포츠 건강교육(13.4%) 순으로 나타나 실제로 참여한 평생교육의 주제 및 우선순위와도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보화 및 직업능력교육의 이용실태에 비해 수요가 높은 것은 기술 격차 해소에 대한 어업인의 요구가 높아진 결과로 볼 수 있다.

반면, 평생교육 참여 제약요인은 시간적 여유 부족(55.7%), 비용 부담(17.9%), 희망 프로그램 부족(9.1%), 시설 부족(8.6%) 등으로 개인적 제약을 해소할 수 있는 비대면 평생교육 활용 및 관련 인프라 구축, 다변화된 교육 주제 개발 등의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그림 3-12〉 참고).

〈그림 3-12〉 참여희망 평생교육 및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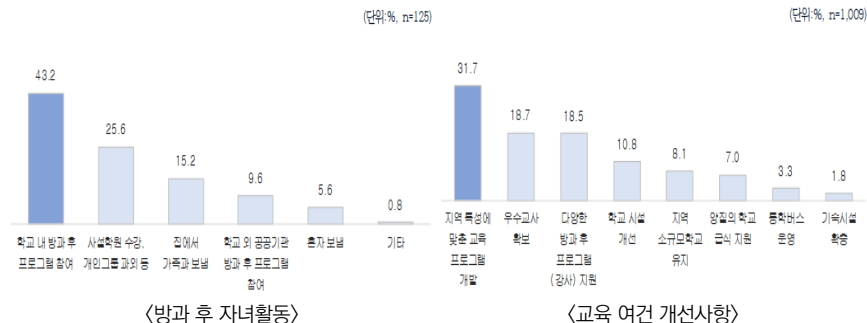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2) 자녀 교육 여건

어업인들의 자녀 및 손자녀들은 학교 정규수업이 끝난 후 교내 방과 후 프로그램(43.2%)에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으며, 사설학원 및 과외 수강(25.6%) 등 추가적인 학업 참여로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교육 여건 개선사항으로 지역특성을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31.7%), 우수교사 확보(18.7%), 방과 후 프로그램의 다양성 확보(18.5%) 등 공교육의 질적 향상을 지적함으로써 자녀의 학습 여건 개선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그림 3-13〉 참고).

〈그림 3-13〉 자녀 교육 여건 및 개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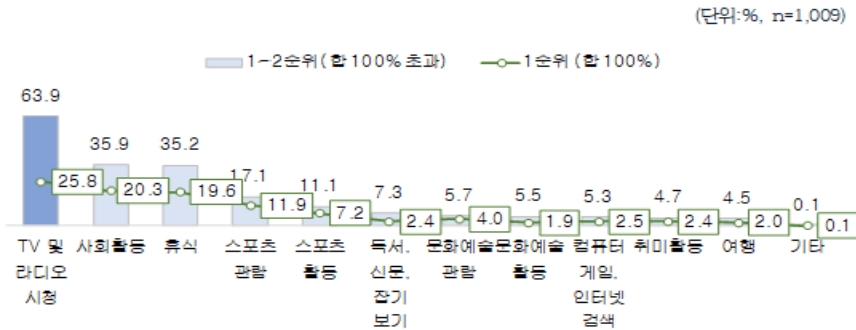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3) 여가활동

여가활동 향유실태를 살펴보면 TV 및 라디오 시청(25.8), 사회활동(20.3%), 휴식(19.6), 스포츠 관람(11.9%) 순으로 나타나 어업인들은 주로 소극적인 휴식 활동에 주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포츠, 문화예술, 취미 활동 등 적극적 여가활동의 비중은 크지 않아서 일과 여가의 조화를 유도하는 여가정책의 마련이 필요하다(〈그림 3-14〉 참고).

〈그림 3-14〉 주 여가활동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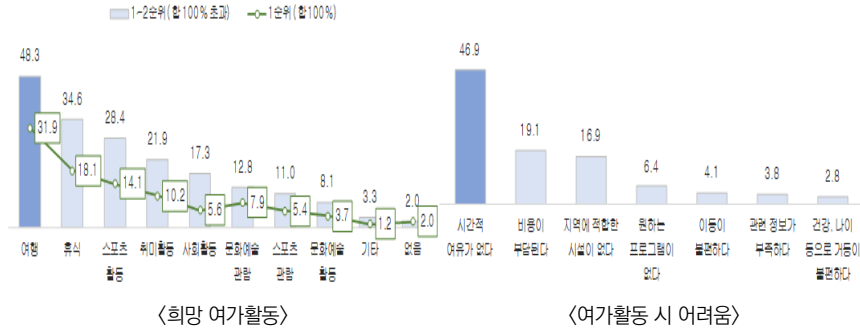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실제로 어업인은 여행(31.9%), 휴식(18.1%), 스포츠 활동(14.1%), 취미 활동(10.2%) 등 적극적인 여가활동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돼 실제 여가활동과 괴리가 존재한다. 이는 시간적 여유 부족(46.9%), 비용 부담(19.1%), 시설 부족(16.9%), 희망 프로그램 부족(6.4%) 등 개인적인 제약 및 여가 자원의 축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어업인들이 평생교육 및 여가활동에서 동일한 제약을 겪는 것이며, 여가의 부담을 완충할 수 있는 간편하고 새로운 형태의 여가활동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 준다(〈그림 3-15〉 참고).

〈그림 3-15〉 희망 여가활동

(단위: %, n=1,009)

(단위: %, n=785)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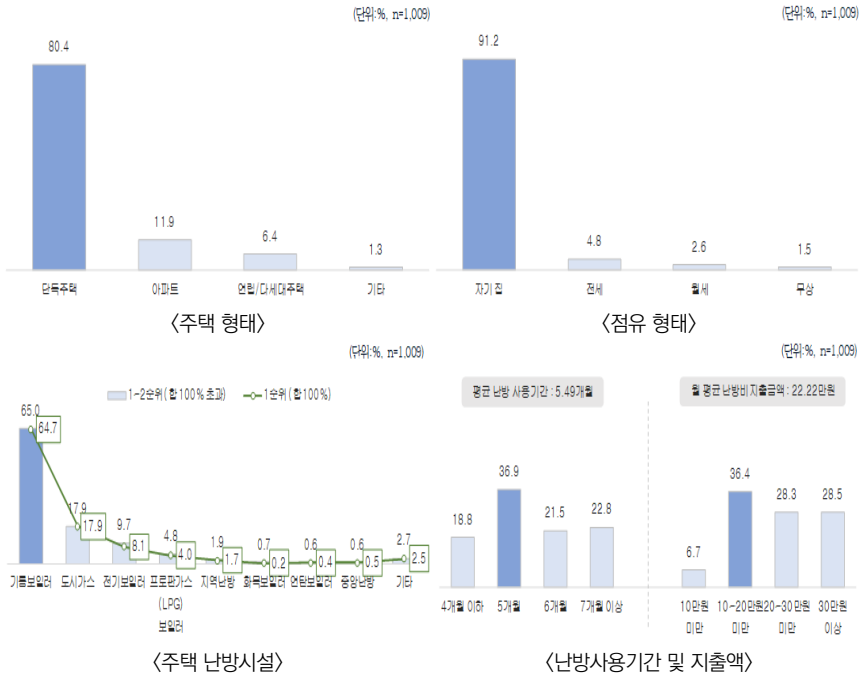
5) 정주여건

(1) 거주환경

정주여건을 살펴보면,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비중(80.4%)이 가장 높았으며, 아파트(11.9%), 다세대주택(6.4%)도 일부 비율을 차지했다. 주택 점유 형태는 자가(91.2%)의 비율이 월등히 높았으며, 전세(4.8%), 월세(2.6%)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의 난방시설은 기름보일러(64.7%)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도시지역과 비교하여 안정적인 난방시스템의 구축이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를 볼 수 있다. 특히, 기초적인 난방시설 이용에도 주기적으로 기름을 공급받아야 하므로 정주여건의 불편함과 직결된다. 어가의 평균 난방 사용 기간은 5개월(36.9%), 7개월 이상(22.8%)이며, 월평균 난방비 지출비용은 20만 원 이상이 다수(56.8%)이므로 가계의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그림 3-16〉 참고).

〈그림 3-16〉 거주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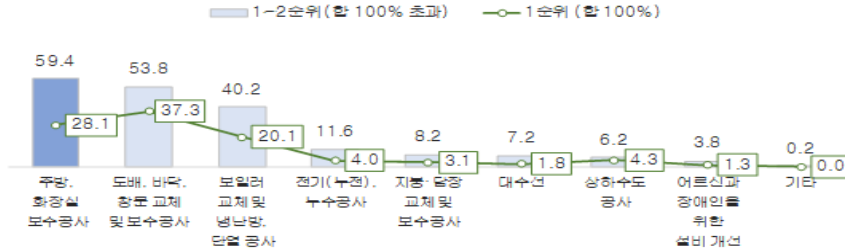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의 개선사항에 대해서 도배·바닥·창문교체 및 보수 공사(37.3%), 주방·화장실 보수공사(28.1%), 보일러 교체 및 냉난방·단열 공사(20.1%) 등 노후주택에 대한 개보수 공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열 공사에 대한 수요는 주택 노후로 인한 난방비 상승과 연관되며 에너지 절약형 주택의 필요성을 유추할 수 있다. 향후 에너지 성능 개선 정책과 연계하여 중·장기적인 거주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그림 3-17〉참고).

〈그림 3-17〉 주택 개보수 필요 사항

(단위: %, n=552)



자료: 저자 작성

(2) 쓰레기 처리 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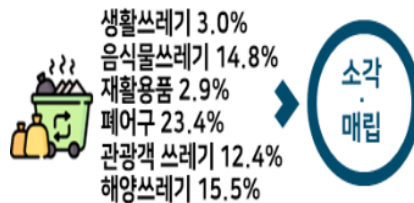
쓰레기 처리방법은 대부분의 쓰레기인 생활 쓰레기(97.0%), 음식물 쓰레기(85.2%), 재활용품(96.0%)이 종량제봉투를 통해 분리배출로 처리되고 있으나, 일부는 소각 혹은 매립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 폐어구(23.4%), 관광객 쓰레기(12.4%), 해양 쓰레기(15.5%)는 소각 및 매립의 방식으로 처리되므로 어촌이 해결해야 할 환경 과제로 볼 수 있다 (〈그림 3-18〉 참고).

〈그림 3-18〉 어촌 쓰레기 처리

(단위: %, n=1,009)



〈어촌 쓰레기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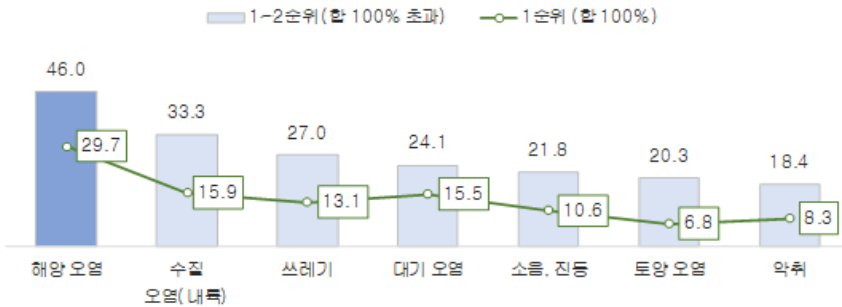
〈쓰레기 소각 현황〉

자료: 저자 작성

어업인은 마을 환경문제로 해양오염(29.7%), 수질오염(15.9%), 대기오염(15.5%), 쓰레기(13.1%) 등의 개선이 필요함을 인지하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어업과 어촌의 가치를 자연환경·경관의 보전(31.0%)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즉, 지속가능한 정주여건을 위해 어촌환경을 관리하는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그림 3-19〉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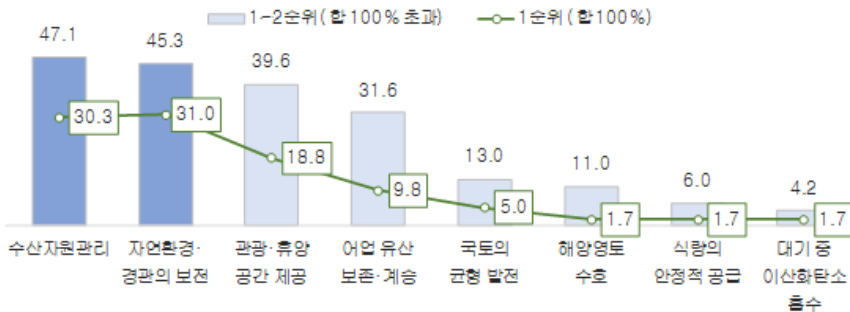
〈그림 3-19〉 환경문제 개선점 및 어촌의 가치

(단위: %, n=696)



〈개선해야 할 마을 환경문제〉

(단위: %, n=1,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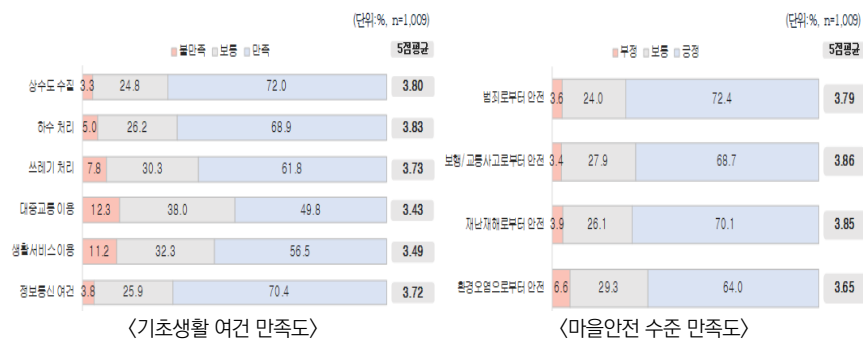
〈어업·어촌 가치〉

자료: 저자 작성

(3) 기초 정주생활 여건

어업인들은 기초생활 여건에 대해 평균 이상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었는데, 전체 여건 중 대중교통 이용(3.43점), 생활서비스 이용(3.49점)에 대한 불만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서 어촌의 낙후된 인프라 개선 등의 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마을안전 수준은 보행·교통사고 안전성(3.86점)이 가장 높았고, 재난재해의 안전성(3.85점), 범죄 안전성(3.79점) 등 평균 이상의 안전에 대한 인식이 나타났다. 그중에서 환경오염 안정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6.6%)이 다른 항목에 비해 다소 높은 점은 앞선 환경문제의 연장선상에서 고려할 수 있으므로 지속가능한 어촌환경 구축이 중요할 것이다(〈그림 3-20〉 참고).

〈그림 3-20〉 기초생활 여건 및 안전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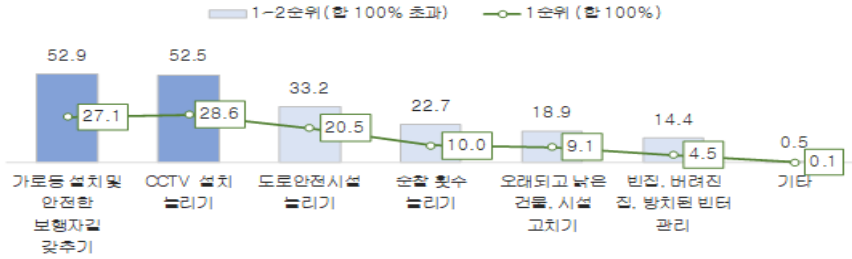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한편, 어촌의 생활안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CCTV 설치(28.6%), 가로등 설치 및 안전한 보행자길 조성(27.1%), 도로안전시설 확충(20.5%) 등 치안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어촌의 고령화와 마을 공동화, 관광객 등 외부인의 유입으로 야기되는 치안에 대한 불안감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그림 3-21〉 참고).

〈그림 3-21〉 개선해야 할 생활안전 문제

(단위: %, n=779)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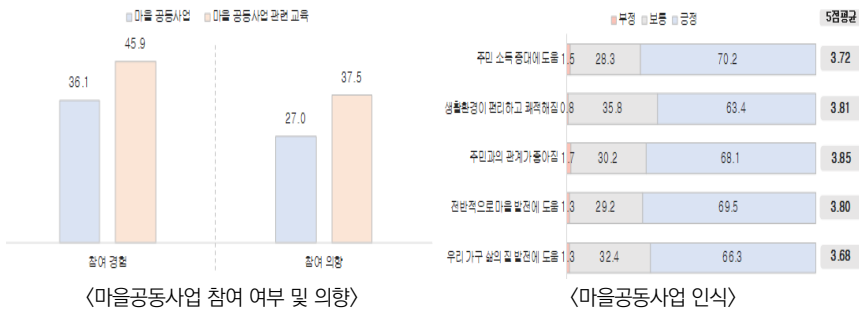
(4) 마을사업 및 외부인 인식

주민들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서 마을공동사업 관련 교육(45.9%), 마을공동사업(36.1%)의 참여경험이 절반 이하로 나타났으며, 향후 참여 의향은 마을공동사업 관련 교육(37.5%), 마을공동사업(27.0%)의 비중이 더 감소하였다. 마을공동사업을 통해 주민 관계 개선(3.85점), 생활환경 개선(3.81점), 마을발전 기여(3.80점)를 통한 중요성은 인지하지만 사업 참여의 향 및 실제 참여행동까지 적극적으로 연계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그림 3-22〉 참고).

〈그림 3-22〉 마을사업 인식

(단위: %, n=1,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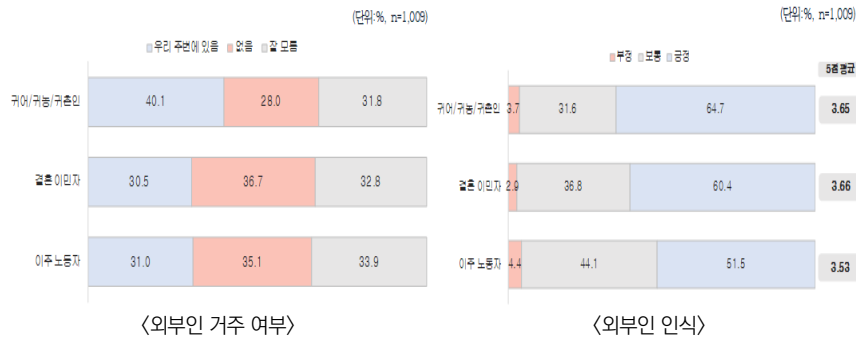
(단위: %, n=1,009)



자료: 저자 작성

한편, 외지인의 주변 거주 여부와 관련해서 어업인은 귀어·귀촌인(31.8%), 결혼 이민자(32.8%), 이주 노동자(33.9%)의 거주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외지인과 교류가 적은 것으로 보인다. 어업인 대부분이 연고가 없는 외지인에 대한 긍정적인 수용태세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이주 노동자(4.4%)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귀어·귀촌인(3.7%), 결혼 이민자(2.9%)에 비해 다소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외지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배타성을 완화할 수 있는 교육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그림 3-23〉 참고).

〈그림 3-23〉 외지인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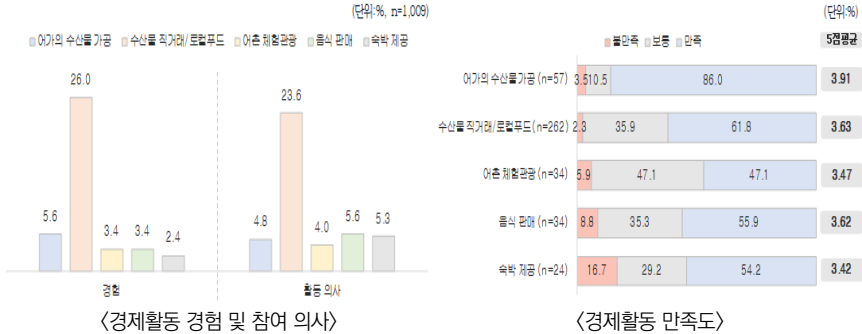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6) 경제활동

(1) 경제활동 경험 및 참여 의사

경제활동에 대한 경험은 수산물 직거래 및 로컬푸드(26.0%), 수산물 가공(5.6%) 순으로 가장 많았고, 향후 참여 의사는 수산물 직거래 및 로컬푸드(23.6%), 음식 판매(5.6%)의 수요가 높았다. 실제 만족도와 비교하면 수산물 가공의 만족도(3.91점)가 수산물 직거래 및 로컬푸드(3.63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어업인은 2차 산업인 수산물 가공형태에 능숙함 보이지만, 3차 산업인 유통판매 등 부가가치가 높은 형태의 경제활동에도 관심을 보이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그림 3-24〉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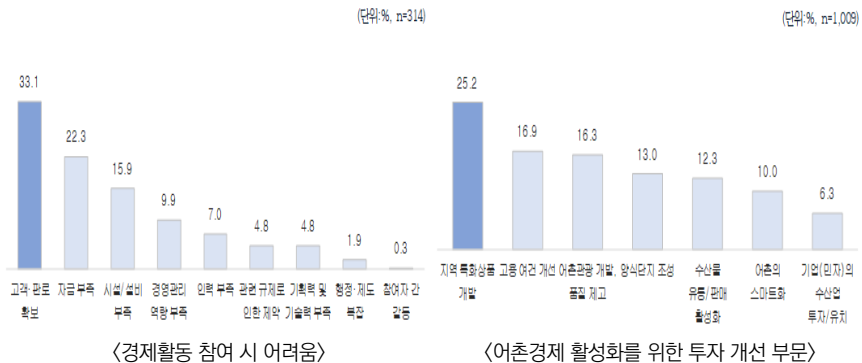
〈그림 3-24〉 경제활동 경험 및 참여 의사, 만족도



자료: 저자 작성

앞선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약요인은 고객·판로 확보 (33.1%), 자금 부족(22.3%), 시설·설비 부족(15.9%), 경영관리 역량 부족(9.9%), 인력 부족(7.0%) 순으로 도출되었다. 한편,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점투자 영역으로 지역 특화상품 개발(25.2%), 고용 여건 개선(16.9%), 어촌 관광 개발·품질 제고(16.3%)에 대한 응답이 높았다. 결과적으로 어촌의 접근성과 인력 문제로 도출되는 제약을 차별적인 상품개발, 어촌의 매력성 증진을 통해 개선하려는 어업인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판단할 수 있다(〈그림 3-25〉 참고).

〈그림 3-25〉 경제활동 참여 시 어려움 및 어촌투자 개선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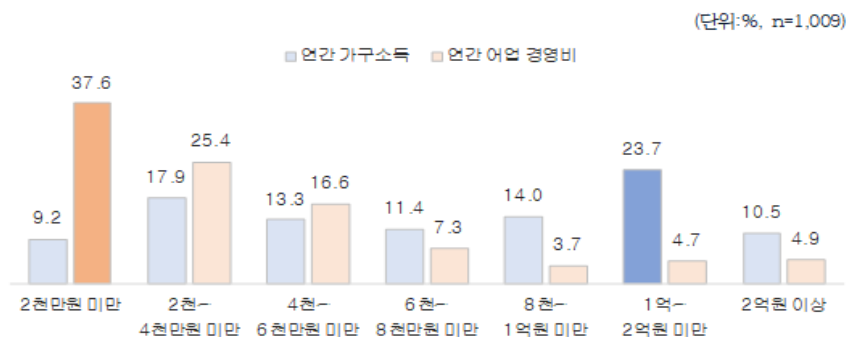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2) 경영상황

연간 가구소득은 1억 원~2억 원 미만(23.7%)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그다음이 2천만 원~4천만 원 미만(17.9%)으로 나타났다. 연간 어업 경영비는 2천만 원 미만(37.6%)이 가장 높았고, 이어서 2천만 원~4천만 원 미만(25.4%)으로 나타났다. 보다 세부적인 실태조사를 위해서 어업종사자별로 가구소득과 경영지출을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그림 3-26〉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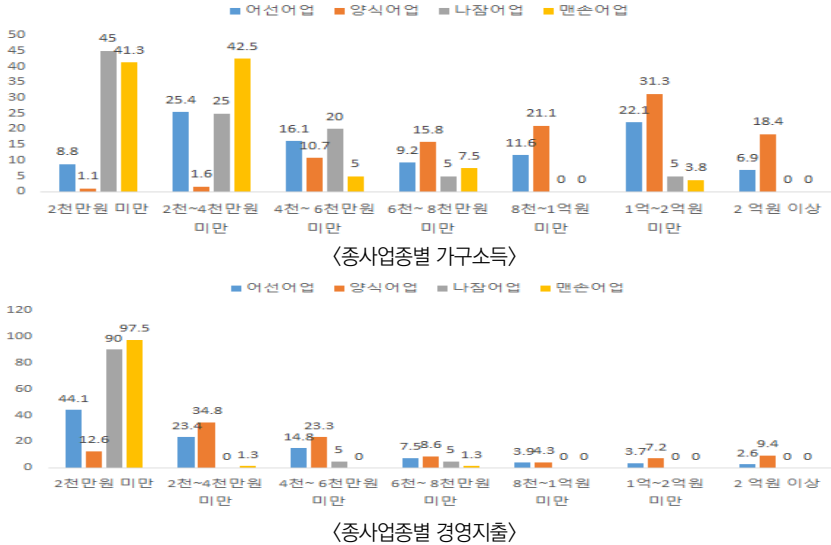
〈그림 3-26〉 가구소득 및 경영 관련 지출



자료: 저자 작성

세부적으로는 어업종사자별로 연간 가구소득의 차등은 크지 않으나 일부 소득이 높은 양식어업인(31.3%), 어선어업인(22.1%)이 1억 원~2억 원 미만의 가구소득 구간에 속해 있었다. 또한, 2억 원 이상의 소득구간에 양식어업인(18.4%)과 어선어업인(6.9%)의 비중이 높은 반면 2천만 원 미만 구간에는 나잡어업(45%), 맨손어업(41.3%)의 종사자가 분포되고 있다. 이는 종사업종별 소득구조의 비대칭이 발생하는 결과이다. 이는 종사업종별 경영 관련 지출 대비 수익의 편차가 크며, 저소득층에 대한 일정기간 소득 보전 등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을 함의한다(〈그림 3-27〉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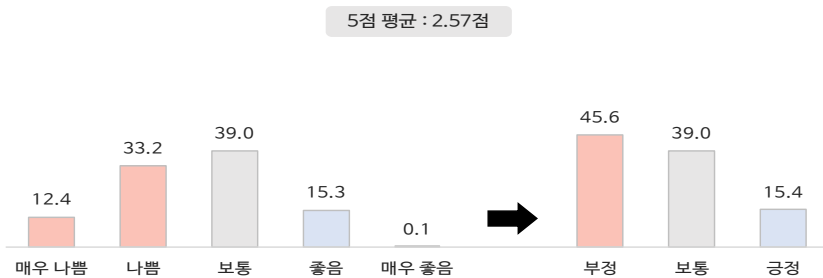
〈그림 3-27〉 종사업종별 가구소득 및 경영 관련 지출



자료: 저자 작성

현재 어업과 관련한 경영상황을 부정적(45.6%)으로 인지하는 어업인의 비율이 높았고, 보통(39.0%), 긍정(15.4%)의 비중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당수의 어업업종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음을 보여 주는 결과이다 (〈그림 3-28〉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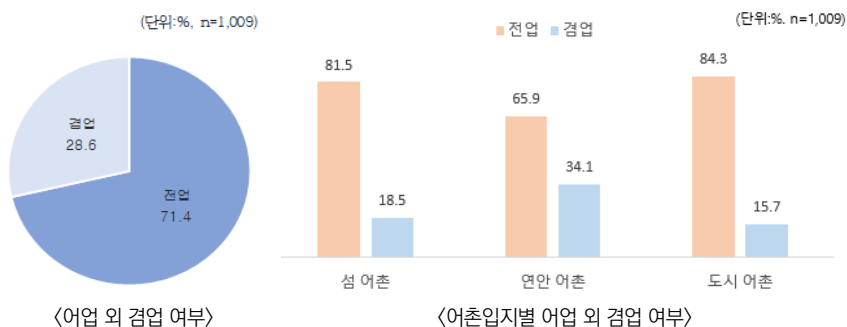
〈그림 3-28〉 어업 관련 경영상황



자료: 저자 작성

상당수는 전업(71.4%)의 형태를 띠었으나 일부 어업인은 겸업(28.6%)을 통해 경제활동을 유지하고 있었다. 특히, 연안어촌 내 어업인의 겸업 비중(34.1%)은 섬어촌(18.5%)과 도시어촌(15.7%)에 비해 비교적 높은 점을 알 수 있다(〈그림 3-29〉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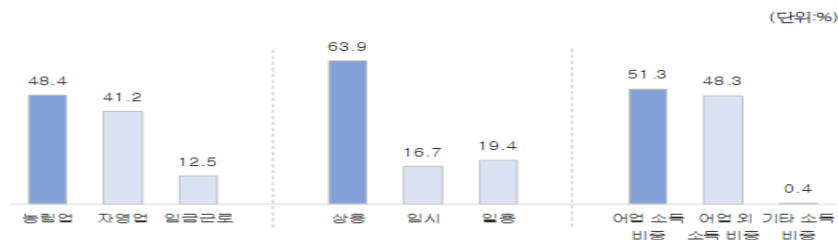
〈그림 3-29〉 어업 외 겸업 여부



자료: 저자 작성

어업 외 직종형태는 농림업(48.4%), 자영업(41.2%), 임금근로(12.5%)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임금근로 겸업 어업인의 근로계약 여건은 상용(63.9%)의 형태가 가장 많았다. 겸업을 통해서 어업 소득(51.3%)과 어업 외 소득(48.3%)의 소득 구조의 비중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1차 산업인 어업으로 생산한 수확물을 가공하여 2차 산업(자영업, 41.2%)과 연계하여 소득을 창출하는 형태가 다수임을 유추할 수 있다(〈그림 3-30〉 참고).

〈그림 3-30〉 어업 외 직종형태 및 소득구조



자료: 저자 작성

제3절 섬어촌 현장실태조사

1. 조사개요

1) 조사배경

어촌의 복지실태 설문조사를 통한 분석은 전국 어촌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과 진단, 그중에서 일부 입지유형별 분석을 통해 주요 부문별 대응방향을 도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설문조사 특성상 제한된 수의 질문과 어촌의 입지유형 중에서 섬어촌이 갖는 특수성으로 인한 문제에 대한 세밀한 실태 파악을 위해 일부 지역을 선정하여 직접 방문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섬어촌이 직면한 현장 중심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대응방향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섬어촌에 대한 현장조사는 「농어업인 삶의 질 전문지원기관」의 추진사업인 ‘섬어촌 현장체감과제 발굴조사’와 함께 수행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과를 본 연구에서도 활용하였다. 또한, 그동안 수행하였던 현장체감과제 발굴조사(2018~2022년)의 결과를 종합하여 섬어촌의 복지실태를 진단하였다.

2) 조사지역 및 대상

2018년부터 추진된 현장체감과제 발굴조사는 지역·권역별로 나누어 추진하였으며 조사기간 총 5년간 여섯 개 지역, 62개 섬(중복 포함), 285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면담조사는 지역주민 1~3인을 대상으로 심층면담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총 1,248건의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표 3-8〉 섬어촌 현장조사

연도	지역	방문도서(개)	면담주민(명)	현장의견(건)
2018년	제주, 전남, 전북	22	81	101
2019년	인천, 충남, 경남	16	63	453
2020년	전남	14	82	488
2021년	제주	5	12	133
2022년	충남, 전북	5	47	73

자료: 저자 작성

2. 조사결과

현장조사의 결과는 다양한 주제와 이슈에 대해 질문하고 이에 대해 주민이 체감하고 인식하는 현황, 문제, 대응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였으며, 주민 의견의 결과는 제4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네 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재정리하였다. 또한, 네 개 부문별 전국 공통적인 문제와 지역특화문제를 분류·정리함으로써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과 지역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나누어 제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 3-9〉와 같다.

〈표 3-9〉 섬어촌 현장문제 도출

부문	공통문제	지역	지역특화문제
보건 복지	• 섬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 부족 (기상악화 시 구급선, 헬기 이용 한계) •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질 저하 (예방접종(영·유아), 고령인 건강관리 취약) • 어업의 영세성으로 어업 안전성 취약 (안전시설, 장비 열악, 보험지원 미흡) • 사회복지사(읍면) 방문서비스 부재 • 어린이집이 없어 보육에 어려움 발생	제주	• 아동 돌봄 시설 부족
		전남	• 자연재해에 대한 정부지원 미흡 (양식어업재해보험 수지 개선) • 섬 의료서비스 연계 미흡(모도-자도) • 노인 대상 복지서비스 취약 (독거노인 지원, 알림서비스 등) • 젊은 세대 보육 및 가사 지원 부재
교육 문화	• 육지 진학자녀가정 지원 미흡 (거주지가 불안정하여 육지 이주)	제주	• 다문화 주민 교육 프로그램 절실 (어업, 한국문화, 한글, 컴퓨터 등)

부문	공통문제	지역	지역특화문제
	• 지속적인 마을학교 폐교 문제 • 문화·여가 체험공간 전무 - 노인, 여성을 위한 문화·여가 시설 및 프로그램 전무 • 학교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부족	전남	• 어린이 놀이터, 키즈카페 등 지원 필요 • 쇼핑, 영화, 연극 등의 문화시설과 레저·체육 등의 프로그램 부족
정주 여건	• 생활서비스(마트, 미용실, 행정사무, 금융 서비스, AS 등) 시설 부재 • 잦은 결항 및 선사 수익성 한계에 따른 일일 생활권 미확보 • 생필품 구입 부담(물품, 택배비) • 섬 내 대중교통 부재(섬 내 이동 한계) • 빈집, 노후주택이 많아 경관 및 거주에 어려움 발생 • 쓰레기 수거가 되지 않아 민원 발생 - 쓰레기 방치, 소각 등의 문제 발생 • 어선 고장 시 육지로 가야 수리가 가능 • 자연재해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됨	제주	• 하수처리시설이 없어 문제 발생 • 해녀에 대한 지원 부재(소득, 건강 등) • 해양 쓰레기 침출수 바다 유입 문제
		전북	• 자연재해대응체계(만조 시 마을 침수)
		전남	• 관광객 중심 차도선 운영으로 주민불만 • 관광객·취객에 의한 치안 불안 가중 • 식수 부족 문제 발생 • '모도-자도' 교통체계 개편
		경남	• 통신시설(인터넷, 핸드폰 수신) 열악
경제 활동	• 외국인노동자 주거문제(노후화)에 따른 문제 발생 • 어촌 관광 활성화가 잘되지 않아 어려움 발생 • 마을사업 추진 시 주민갈등 발생 • 섬 내 소득 증대 일자리 매우 부족 - 특히 고령인에 대한 일자리 부족	인천	• 수산식품 위생설비 노후화 심각 • 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 인한 피해 심각
		충남	• 불법해무질 및 판매로 인한 어민피해 증가 • 관광지 공사로 인한 주택균열 및 바다오염 발생
		전남	• 외국인노동자 거주시설 부족

자료: 저자 작성

1) 보건·복지 부문

보건·복지 부문에서 공통사항으로 섬 주민들이 가장 많은 문제를 제기한 분야가 의료 부문이며, 의료의 질 저하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관리 문제점을 가장 많이 제기하였다. 영·유아뿐만 아니라 고령인까지 지속적인 건강 관리와 예방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서비스(보건진료소 등)는 그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육지로 이동해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또한, 응급상황 발생 시 섬 내에서 응급조치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¹⁸⁾이 대부분이어서 이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과 불만이 많았으며, 육지까지 이동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많은 우려를 나타냈다. 그다음으로는 어업활동 여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노동력 중심의 어업구조가 변화하지 않고 고령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새로운 어업 장비 개발·보급, 관련 보험 및 금융지원 확대 등으로 생산성 및 어업인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었으며, 그 예로 관련 보험(건강보험, 어업인안전보험,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금 등)에 대한 지원 확대 의견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고령화되고 있는 어촌 주민과 어업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는데,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방문이 섬 지역에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다양한 요청 및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지역별 특화사항으로는 제주지역의 아동 돌봄 시설이 부족한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제주도의 경우 관광지 특성상 젊은 세대가 다양한 사업을 위해 귀촌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청년세대의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한 문제가 가장 우려하는 사항이라고 응답하였다. 전남지역에서는 다양한 양식어업(전복, 홍합, 미역 등)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이라 자연재해 피해지원에서 시설지원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문제점, 국내에서 가장 많은 섬이 있는 지역임에도 섬 의료서비스, 노인복지서비스, 청년세대 자녀의 보육지원이 매우 열악하여 인구 유출이 심해 산업적인 위기가 심화되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18) 작은 섬의 경우 주말에 보건진료소 직원이 육지로 나가 있거나, 섬 간 순환근무로 인해 섬 내 상시 거주하는 경우가 없는 경우도 많음

2) 교육·문화 부문

교육·문화 부문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녀 교육을 위한 지원이 거의 없으며, 문화·여가활동을 위한 지원은 전무하다는 점이다. 교육의 경우 섬 내 학교가 대부분 폐교되어 학교 통학을 위해 육지로 나가야 하는 상황이며, 특히, 중·고등학생 자녀는 육지통학이 어려워 육지에 거주지를 새로 마련하여 생활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가정을 지원해 주는 정책이 필요하나 아직 관련 정책이 없다. 폐교된 학교를 대신하여 육지 근처에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으나 섬으로 돌아오는 배 시간이 한정되어 방과 후 활동 및 교육기회를 잃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되었다. 더불어 섬어촌은 문화·여가 시설 및 프로그램이 거의 없어 여성과 고령인의 경우 여가활동 없이 자택 또는 경로당에 모여 생활하는 것이 전부인 상황으로 이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많은 주민이 제기하였다.

지역의 문제로는 제주도에 다문화가정이 늘어가고 외국인 여성의 유입이 일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언어소통, 한글, 한국문화 이해, 정보화 등의 교육이 부족하여 이들을 위한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향후 최근 많은 어촌이 직면한 문제이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들은 주로 영·유아를 키우고 있어 관련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하는데 의사소통의 문제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모국의 가족과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싶으나 인터넷 활용에 어려움이 있어 정보화 교육과 지원이 매우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남지역에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놀이터, 키즈카페 등)과 다양한 문화·여가·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시설지원보다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문화·여가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원이 더 중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3) 정주여건 부문

섬 지역에서 가장 많은 문제점을 제기한 부문이 정주여건 부문이며 이는 지역주민들이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체감되는 생활 여건 요소들이 많고, 이것은 삶의 질 하락과 연결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우선 가장 많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점은 섬 내 생활서비스 시설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이다. 중소기업의 섬이라도 섬 내 필수품을 구입할 수 있는 마트가 없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위해 택배 이용 시 배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나 추가 비용이 발생하여 주민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그 외에 행정사무, 금융서비스, 미용 등의 필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않아 육지로 가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 있으며, 대형가전제품의 AS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아 냉장고 또는 에어컨 고장 시 매우 불편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러한 기초생활 서비스가 보장되지 않아 육지에서 개인 업무를 봐야 함에도 섬 내 대중교통 부족, 해상교통의 일일 생활권 미확보로 인해 육지에서 2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한 섬 주민의 비용 부담과 시간 소요에 대한 불만이 지속되고 있다. 다음으로 섬 지역 쓰레기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예산 부족의 문제로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는 상황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섬 지역에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해상 쓰레기, 섬 주민 생활 쓰레기, 관광객 쓰레기 등으로 인해 섬 지역의 경관,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일부 섬의 경우 최대 한 달 이상 수거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주거환경 부분에서는 섬 지역 주택의 노후화가 지속되어 개선이 필요하지만, 육지보다 주택 수리에 대한 비용 부담으로 인해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인구가 유출되면서 발생하는 빈집은 관리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경관을 훼손시켜 주민에게 불안감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역적 문제점으로는 제주도는 하수처리시설이 없어 생활침출수가 해양으로 유출되는 문제와, 해녀에 대한 지원 부족 문제를 제기하였다. 제주도는 특히 관광객이 많은 지역으로 이로 인한 쓰레기 침출수가 다량 발생하는 데 반해 이를 처리하기 위한 하수처리시설이 없어 해양오염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해녀에 대한 지원은 고령화로 인한 건강관리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조업시간 조절 및 소득 보장에 대한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전남지역은 관광객 증가에 따른 해상교통의 문제(관광객 중심의 도선운영, 모도-자도 교통체계), 섬 지역의 치안 불안 등의 문제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섬 지역의 식수 부족 문제의 의견도 제시되었다. 그 외 전북지역 일부 섬에서 자연재해에 대한 불안, 경남지역에서는 통신 시설 인프라 부족에 대한 의견도 제시하였다.

4) 경제활동 부문

경제활동 부문에서 섬어촌 주민의 현장문제는 어업 외 소득과 관련된 사항으로, 소득 다각화를 위한 어촌 관광, 신규 마을사업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신규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주민들의 역량 부족, 사업 추진 기반 취약, 주민 간 갈등 등과 같은 요소들은 어촌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주요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령인들을 위한 일자리 부족 문제도 나타났는데, 그 예로 각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은 섬 지역 제한적으로 운영되어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리고 섬 지역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어업 숙련도가 낮고 거주환경이 열악하여 이를 고용하는 어업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도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문제로는 인천지역은 서해안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 문제와 수산물을 다루는 시설들의 노후화 문제를 제기하였다. 충남지역에서는 관광객들의 불법 해루질로 인한 마을 어장의 피해 증가와 다양한 관광시설물을 해안 근처에 건축하면서 발생하는 오염 및 주변 마을 건물의 피해 증가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전남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거주 시설 노후화뿐만 아니라 거주 시설의 부족 문제를 제기하였다. 기존에는 고용주의 거주 공간 또는 간이 건물에서 외국인노동자가 생활하였으나 최근 외국인 노동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거주 시설로는 수용의 한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본 장에서는 어업인의 복지실태조사 및 섬어촌 현장실태조사를 통해서 어촌 현장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복지서비스의 여건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주요 부문별 쟁점을 검토하였다. 어촌·어업인의 복지실태조사 결과를 보건 복지, 교육문화, 정주환경, 경제활동 부문별 요약 및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건복지 분야에서 어촌은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의료환경 제공에 한계가 발생하여, 어촌의 환경적 불리성을 보완할 수 있는 전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어촌 내에서도 입지유형별 의료 격차가 발생하는데 섬어촌의 경우 접근성 문제로 인해 응급 이송체계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한계는 섬어촌 닥터 헬기장 조성, 거점 어업인 특성화 병원 등 제도적 개선을 통해 완화할 수 있다. 또한, 사회안전망 제도 가운데 직접적인 복지 서비스와 간접적인 서비스(교육, 평생교육 등) 간 어업인 만족도의 차이가 발생한 점은 현장 및 실무 중심의 교육·훈련으로 내실화하는 과정이 필요성을 의미한다.

둘째, 교육문화 분야에서 어업인들은 시간적 여유 부족, 비용 부담 등 개인적 제약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서 평생교육 및 여가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제도 발굴과 적용이 필요하다. 어촌의 물리적 접근성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비대면 장비 구축, 프로그램의 다양화 지원사업 등을 발굴하는 등, 지원방식의 새로운 접근을 통해 어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어촌에 다문화가정이 증가함에 따른 외국인 여성에 대한 지원 취약의 문제는 아직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대한 장기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셋째, 정주여건 부문에서는 어촌 환경문제와 거주환경 개선을 통한 지속 가능한 생활 여건의 마련이 중요하다. 우선 행정서비스, 금융서비스, 생필품 구매 등의 필수 생활서비스 지원 확대를 통한 기초생활 여건 보장이 절실하며, 거주환경의 지속적인 개선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거주환경 확대도 필요하다. 예로, 노후주택으로 인한 난방비 상승은 어가 부담과 정주여건의 불편함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며, 이는 농촌 분야에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또한, 어촌의 쓰레기 매립 및 소각처리는 향후 해양오염과 기후변화와 연계되는 중대한 문제로, 어업과 어촌의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의 확대가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섬어촌의 해상교통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절실하다. 일일생활권 확보가 되지 않아 제대로 된 생활·복지서비스가 보장되지 않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주민의 불만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정책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최근 준공영제를 통한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선사의 경영악화를 해결해주지 못하고 있어 세밀한 정책설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정주환경의 포용성 측면에서 외지인에 대한 수용태세 개선의 필요성도 도출되었다. 이주 노동자 등 외지인에 대한 일부 어업인의 부정적인 견해는 신규 유입인구 정착의 어려움과 연결되며, 인식 개선 교육을 통해서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응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 경제활동 부문에서는 어업 종사업종별 소득구조의 편차가 발생하고, 상당수의 업종이 어려운 경영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령어업인, 여성 어업인 등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연계로 안정적인 소득 보전을 위한 제도적 검토가 필요함을 나타낸다. 이처럼 부문별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세부과제를 마련하고, 어업인의 복지 서비스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표 3-10〉 복지실태조사 요약 및 시사점

구분	요약	시사점
보건 복지	• 어촌의 의료 질, 진료과목 등 격차 지속 - 연령별·성별 등에 따른 의료서비스 제공 미흡 • 어촌의 입지유형별 의료 격차 발생 - 섬어촌의 공공의료기관 보건 의료서비스 만족도 (2.92점)의 전체 평균 하회 - 입지별 응급실 이동시간 격차 발생 • 직접적인 재정지원과 간접적인 복지서비스(방문 서비스, 교육 등) 간 만족도 차이 발생 - 어업 안전확보를 위한 지원 방안 미흡 - 고령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건강관리, 방문서비스 등) 미흡	• 전반적인 의료환경(질, 서비스 등) 개선 필요 • 섬어촌의 지형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전달체계 마련 필요 - 응급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별도 대책 필요 • 사회안전망, 소득·복지서비스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한 격차 해소 - 어업인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등 복지증진 제도에 대한 내실화 필요 - 어업 관련 복지서비스 공급 필요 - 고령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체계 구축
교육 문화	• 지역 맞춤형 제도 개편을 통한 학습 여건 개선 필요(섬어촌 여건 고려 필요) • 교육 및 여가 분야의 개인적 여건 한계 - 시간적 여유 부족, 비용 부담 등 제약 발생 • 다문화가정, 외국인여성을 위한 맞춤형 정책 미흡	• 평생교육 및 여가 부담 완화를 위한 새로운 형태의 제도 발굴 및 적용 • 비대면 장비 구축 등 어촌의 물리적 제약 완화 및 삶의 질 향상 보장 • 다문화가정을 위한 언어, 문화, 정보화 교육서비스 개발 및 제공
정주 환경	• 노후주택의 난방비 상승으로 여가 부담 - 과반수(56.8%)의 어업인이 월평균 난방 지출 비용 20만 원 이상 발생 • 어촌 쓰레기(폐어구, 관광객 쓰레기, 해양 쓰레기 등) 매립 및 소각처리 문제 • 이주 노동자 등 외지인에 대한 일부 부정적 견해 발생 • 어촌 관광객으로 인한 다양한 피해 발생 - 관광객 쓰레기, 해상교통이용, 치안 불안 등에 대한 대책 미흡	• 노후주택 개선 등 중·장기적 거주환경 개선을 통한 에너지 절약 및 어촌 주거환경 문제 개선 •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의 어촌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환경보호 기반 구축 확대 • 이주 노동자 및 외부 유입인구 대한 인식 개선 - 인식 개선 교육 등으로 배타성 완화 • 어촌 관광인프라 개선 및 관리 방안 마련 - 정기적 쓰레기 수거, 관광지 여객선운행 확대, CCTV 설치 확대 등
경제 활동	• 어업 종사자 업종별·특성별 소득 편차 발생 - 고령·여성 어업인, 외국인 노동자 간 차이 및 어선·양식·갯벌·나잠어업 간 차이 •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지원 부족	• 소득 보전을 위한 제도적 검토 - 고령어업인, 여성어업인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 지원 등 • 주거지원, 어업교육(주요 언어별) 등 지원 추진

자료: 저자 작성

04

국내외 복지서비스 사례

제1절 국내 사례

1. 전북 완주, 이랑 아동발달통합지원센터

1) 사업배경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에 있는 ‘이랑 아동발달통합지원센터’는 지역 내 장애 재활이 필요한 기관 및 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시도로 시작되었으며, 사회서비스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농어촌지역에서 장애 재활치료 및 교육이 필요한 아동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도와주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같은 뜻을 가진 세 명의 청년이 3년의 준비 기간¹⁹⁾을 거쳐 2014년도에 조합을 설립하였다. 처음에는 완주군청과 읍·면사무소를 찾아가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을 추천받아 무료로 치료 수업을 시작하였으며, 추후 완주군 창업보육센터의 지원을 받아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였다.

19) 서산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시설에서 경험 축적함

〈그림 4-1〉 이랑협동조합



자료: 완주군 블로그(검색일: 2022.11.11.)

2) 문제점 및 해결 방안

대부분 농어촌지역은 넓은 지역에 비해 적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서비스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장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관련 시설도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 역량을 바탕으로 민간 주도의 노력을 통해 해결 방안을 찾아낸 사례가 이랑협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다.

2014년 설립된 이랑협동조합은 지역사회에 장애 재활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완주군의 다양한 지역 연결망을 활용하여 조직을 운영·확대해 왔다. 관련 자격증 취득과 경험을 쌓는 3년 동안 사업 추진을 위해 2013년 완주군 창업보육센터의 지원을 받아 소셜벤처경영대회 및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참여하였고, 설립 2년 만에 예비사회적(2015년) 기업과 사회적기업 인증(2016년)을 받게 된다. 이는 완주군의 행정과, 지역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기존 협동조합 간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를 통한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협동조합의 청년 설립자들은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주도할 구심 조직

을 통해 장애 특화 재활사업, 장애인식 개선사업, 사회적 농업, 돌봄 체계 구축 등 다방면의 사업 및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동을 위한 단순 재활치료 및 지원이 아닌 지역사회의 네트워크 안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양방향 관계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재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주민의 인식 개선 활동을 통한 통합적 지원을 포함한다. 이러한 장애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현장의 수요에 맞춘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 등의 노력은 민간 주도의 복지 서비스 공급을 추진하는 자생적인 모델로서 가능성을 보여 준다.

3) 사업성과

이랑협동조합의 주 수입원은 학생들의 재활치료비이며 장애가 있는 학생은 월 20만 원, 장애가 없는 학생은 월 16만 원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한 수익은 대부분 인건비로 사용된다. 이랑 아동발달통합지원센터는 학생이 더 늘어나면 개인소득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관련 선생님을 더 채용하여 농어촌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현재는 11명의 직원이 16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을 치료하는 조직으로 성장하였다.

이후 이랑협동조합은 키울협동조합이라는 새로운 공동체의 설립에 영향을 미쳤는데, 키울협동조합은 개인 단위에서 발전하여 가족 단위의 지원을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하는 데 기여하는 목적이 있다. 특히, 가족 단위의 활동은 사회적 농업을 통해 텃밭 농산물을 판매하는 행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돌봄교실, 방과 후 센터 등 일상의 돌봄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처럼 공동체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기저에는 완주군의 사회연결망과 지역 주민의 참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2. 경기 부천시, 스마트 경로당

1) 사업배경

경기도 부천시의 ‘부천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은 건강한 지역사회 구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2013년 발기인 모임 이후 조합원, 돌봄 종사자, 노인 일자리 참여자 등의 자발적 참여와 협동으로 의료복지 시스템 구축 및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부천시의 스마트 경로당 사업은 협동조합의 설립이념과 사회적 가치를 엿볼 수 있는 사례이다. 스마트 경로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부천시가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운영하는 사업으로, 해당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배경에는 단순한 재정지원을 넘어선 협동조합 등 민·관의 네트워크가 있다.

〈그림 4-2〉 스마트 경로당



자료: 경기매일(2021.12.27.)(검색일: 2022.12.14.)(좌); 부천뉴매거진(2022.07.22.)(검색일: 2022.12.14.)(우)

2) 문제점 및 해결 방안

스마트 경로당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노인의 여가·복지 서비스 중단을 해소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2020년 외부 환경적인 요인으로 경로당이

라는 거점을 이용할 수 없게 되자, 복지서비스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방편으로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하여 공간적 한계를 해소한 것이다.

부천시는 스마트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보건소, 대한노인회 부천시지회, 노인복지관, 부천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등 다양한 민·관 협업을 통해서 운영모델을 구축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화상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여가 복지 프로그램, 보건소와 연계한 건강관리, 실내 스마트팜을 통한 원예치료 제공 등 노인을 위한 건강 돌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참여기관은 민간기관별 성격에 따라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예를 들어, 부천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은 경로당이라는 거점을 중심으로 주치의 건강상담, 온라인 건강강좌 등 스마트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이다.

3) 사업성과

부천시는 스마트 경로당을 통해서 비대면 간담회 개최, 타 부서 협업 프로그램 진행 등 자체적인 추진 목표의 달성뿐만 아니라 사업대상자인 노인들의 만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실제로 해당 사업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 스마트 경로당에 대한 높은 만족도(90%) 등 다방면의 성과가 달성된 것이다. 이는 공간적 한계를 극복한 노인여가공간의 마련을 통해서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복지서비스 정책의 기초에 부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특히, 스마트 경로당의 주요 대상층인 노인은 친숙한 공간을 통해서 디지털 기술에 대한 경계심을 비교적 완화하면서 정보 격차 해소까지 복지의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3. 경남 거창, 하성 단노을 생활문화센터

1) 사업배경

경남 거창군 웅양면 오산마을은 지속적인 인구 및 학생 수 감소로 1999년 9월에 하성초등학교가 폐교되었던 지역이다. 지역은 지속적으로 침체되었고 하성초등학교는 관리가 되지 않아 흉물이 되어 사람들의 발길도 끊어져 약 15년간 방치되어 있었다. 하지만 어린 시절 하성초등학교를 졸업한 마을주민들이 흉물스러워진 학교의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자 고민하게 되었고, 고령화된 마을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한글교습, 시 짓기, 노래교실 등을 여는 공간으로 이용하기 시작하였다. 오산마을은 주요 농작물인 사과와 포도 농사가 끝나는 10월 이후 농한기가 시작되어 다른 농촌보다 농한기가 길어 이 기간 동안 다양한 문화 활동에 대한 욕구가 많았다. 그래서 하성초등학교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으며, 노래교실 활동을 통해 전국 합창대회에 나가기도 했다. 이는 마을의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었다.

〈그림 4-3〉 단노을 생활문화센터



자료: 농민신문(2018.6.13.)(검색일: 2022.11.15.)

2) 문제점 및 해결 방안

오산마을은 농한기가 길다는 지역특성으로 인해 주민들의 문화 활동에 대한 수요가 많은 지역이었으나, 어떻게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킬지에 대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모교인 하성초등학교를 살펴보자는 주민들은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시도했다. 고령인 마을주민들이 어렸을 때 다니던 학교로 다시 돌아가 한글, 시 짓기, 노래 등을 배우면서 여가 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아졌으며, 이는 다양한 문화 활동에 대한 새로운 수요를 재생산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수요는 다양한 세대와 구성원으로 확대되어 하성초등학교를 통해 마을을 활성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주민의 인식 변화와 적극성은 정부의 문화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학교를 리모델링²⁰⁾하면서 지역의 생활문화센터로 탈바꿈하였으며, 이러한 변화는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짜고 활동하는 공간으로 변신하였다. 현재 학교 내에 작은 영화관, 책방, 도서관, 청년 공간 등을 조성하고 여덟 개의 문화 및 예술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며, 매년 마을축제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단노을 생활문화센터는 주민 간 소통과 세대 간 교류의 공간으로 마을의 단합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3) 사업성과

다양한 세대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단노을 생활문화센터는 다양한 프로그램 및 조직 활동으로 공동체 교류가 활성화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주민을 돌아보고 살펴보는 활동으로 확대되고 있다. 마을주민들의

20)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의 예산 6.5억 원을 지원받아 강당(60평), 북카페, 학교정비 등 리모델링을 통해 하성 단노을 생활문화센터로 변화시켰다.

자치조직을 바탕으로 건강관리, 다문화가정지원, 공동보육, 마을축제 계획 등 문화활동뿐만 아니라 마을의 복지서비스에도 함께 참여하면서 마을의 어려움을 지역주민의 통합을 통해 해결하고 있으며, 나아가 지역의 침체 및 세대 간 소외를 극복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마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마을의 자체적 문화 및 예술공간에서 벗어나 마을 외부 관광객들에게도 마을의 공동체 프로그램과 주민의 전시 등을 개방하여 마을의 경험과 결과물을 공유하고 홍보하고 있다. 이처럼 하성 단노을 문화센터는 생활문화 공유의 가치를 확대고 확산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지자체는 이러한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상호 노력하고 있다.

4. 충남 태안, 만수동 어촌계

1) 사업배경

충남 태안군 안면도 남단에 위치한 ‘만수동 어촌계’는 주민 125명(21년 기준)이 사는 마을로 노동생산성 저하, 세대 간 갈등 등 여느 어촌이 직면한

〈그림 4-4〉 만수동 어촌계



자료: 한국농어민신문(2020.12.30.)(검색일: 2022.12.01.)

문제를 겪게 된다. 이 마을은 선대부터 일궈온 마을양식장이 무분별한 바지락 채취로 자원 고갈이 발생되고,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주민 간 갈등이 나타나게 된다. 특히, 마을양식장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패류 채취 시 크기별 선별과정이 중요하지만, 수익을 얻기 위한 단순 생산량 확보에 치중하면서 오히려 상품성이 저하되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

2) 문제점 및 해결 방안

다수의 어촌은 인구구조 변화, 공동화 등 고질적으로 직면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사회안전망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촌 공동체 중심의 자생적인 복지사업으로 추진한 사례가 마을연금제도이다.

2016년 본격적으로 마을연금제도가 시행된 배경에는 앞선 세대 간 갈등 과정이 존재한다. 마을 내 한정된 자원과 이를 채취하는 세대별 작업량의 차이로 고령층의 불만이 높아지면서 양식장 수익의 일부를 마을연금 형태로 적립하자는 의견이 나오게 된다. 2014년 이후 새로운 어촌계장이 부임하면서 부모 세대가 마을 내 양식장 조성에 기여한 공로와 최소한의 노동이 어려운 노령화된 어촌계원에 대한 지역사회의 환원을 강조한 것이다. 초기 마을연금제도가 논의되고 정착하는 과정에서 수익성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해당 연금제도를 넓은 의미의 보편적 복지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면서 실마리를 찾았다. 일부 수혜자에 대한 지원이 아닌 현재의 젊은 세대도 향후 복지의 수혜자가 될 수 있음을 합의한 것이다.

3) 사업성과

마을 내 바지락 양식장은 공동양식장과 마을양식장으로 구분된다. 공동양식장은 어촌계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며, 어촌계원과 준계원이 이곳에서

바지락을 채취하여 개인소득을 올리고 있다. 마을양식장은 어촌계원이 바지락 채취로 얻은 수익금의 30%를 기금으로 적립하여 마을연금을 지급하는 구조이다. 대상자는 마을 내 80세 이상의 고령인, 장기 입원자, 장애인 등 상대적으로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로, 이들은 연간 300만 원의 마을연금을 지급받고 있다.

마을연금제도의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어촌계는 마을연금의 시범 과정을 통해서 제도의 불확실성을 보완 및 검증하게 된다. 특히, 태안군과 수협의 협조를 통해서 새로운 수출 판로가 마련되면서 마을 내 소득이 증가할 수 있었고, 이러한 성공에 기반하여 2016년부터 해당 제도를 시행하기에 이른다. 특히 주민 개개인의 소득안전망을 확보했다는 의의가 있으며, 자발적인 복지지원책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게 된다. 또한, 세대 간 갈등 해소, 어촌계의 가입조건 완화에 따른 귀어인 증가, 마을 홍보 등의 부수적인 효과도 얻고 있다. 이처럼 마을 공동 자산 시설을 통해 넓은 의미의 보편적 복지를 실현한 기저에는 마을공동체의 노력과 합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제2절 국외 사례

1. 유럽, 스마트 빌리지

1) 사업배경

유럽은 농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정책적 접근을 시도하였으며 이는 유럽연합이라는 거대한 국가 간 연계를 통해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유럽은 IT를 활용한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모든 사람이 향유할 수 있는 정보사회 구축을 위하여 통합(e-Inclusion)정책 영역, 공공서비스 개선(better public services) 영역, 삶의 질(quality of life) 개선 영역의 정책을 2005년부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²¹⁾

이러한 방향성을 바탕으로 유럽연합(EU)은 ‘농촌지역의 더 나은 삶(a better life in rural areas)’을 비전으로 도농 간 정보 격차를 줄이고, 마을을 디지털로 연결하는 정보기술(IT)을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스마트 빌리지(smart village)라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의 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ICT와 지식을 활용하여 지역의 생활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이 가지는 제약을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더불어 유럽농촌개발네트워크(ENRD)는 스마트 빌리지 사업에 정책담당자, 지역주민, 분야별 전문가, 비정부기구(NGO) 등과 연계·협력하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장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고, 농촌 주민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의 적용을 통해 공공 및 민간 서비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1) The Science Times(2008.09.11.)(검색일: 2022.11.22.)

2) 문제점 및 해결 방안

기존의 농업 분야에 한정된 스마트 기술인 ‘스마트 팜(smart farm)’이 생산성 향상에 포커스를 맞춘 사업이라고 한다면, 스마트 빌리지 사업은 생활 전반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지역 종합적 삶의 질 향상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스마트 빌리지 사례로 농촌지역인 영국 콘월(Cornwall)은 지역의 디지털화를 통해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농촌이 직면한 지역 접근성 제약으로 인한 소외와 고령화로 생긴 낮은 생산성 등을 해결하기 위해 콘월시는 공공과 민간 분야의 관계자, 농촌 공동체 자선단체(CRCC), 지역대학 등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디지털화 교육과 건강 개선 계획 등을 수립 및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림 4-5〉 영국 스마트 복지서비스



자료: ENRD(검색일: 2022.11.22.)

3) 사업성과

스마트 빌리지 정책은 지역의 낮은 접근성과 인구밀도에 따른 문제점을 디지털 기술과 혁신을 통해 극복하고, 농촌지역의 필수 생활·복지서비스가 보편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고 있다. 콘월지역의 펜딘(Pendeen)은 2015년부터 공동체 센터를 디지털 허브로 전환하고 지역주민

에게 디지털 프로그램을 발굴·제공하기 시작하였으며, 2019년부터는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디지털 기기 제공, IT 교육, 가상현실 및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교육 등의 사업을 발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생활·복지서비스의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도록 하였다. 디지털 기술 훈련과 간호 로봇 등을 활용한 복지서비스의 혁신은 콘월지역 내 교육·문화 기회의 형평성을 보장하고, 경제 및 사회적 고립, 의료시설의 접근성 제약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림 4-6〉 지역 스마트화 전달을 위한 세 가지 방향성의 연계



자료: ENRD(검색일: 2022.11.22.)

2. 영국, 금융서비스 지원사업

1) 사업배경

IT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전 세계는 카드 또는 스마트폰을 사용한 간편 결제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현금의 사용이 줄어들고 있는 시점에 영국 역시 현금 없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존에 있던 은행지점들이 지속적으로 폐쇄되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ATM기를 주요 거

점마다 설치하였지만 ATM기의 사용빈도가 줄어들어 설치된 ATM기도 철거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²²⁾ 하지만 이러한 사회변화 적응에 한계가 있는 고령인, 빈곤층, 농어촌지역의 주민들은 여전히 현금의 사용 비중이 높으며, 농어촌지역에서 주요 생활서비스인 금융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져 지역 생활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2) 문제점 및 해결 방안

ATM 기기 수의 감소는 영국 내에서도 큰 문제로 대두되었다. 영국 인구 중 약 2,500만 명은 현금을 통한 거래가 여전히 필요한 것으로 보고되었고,²³⁾ 최근 영국의 현금사용 비중은 코로나로 인해 감소세로 접어들었으나 여전히 지불수단의 15%는 현금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되었다.²⁴⁾ 특히 이 문제는 농어촌지역에서 문제로 부각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의 ATM 네트워크 운영사인 LINK는 2018년 1월부터 농어촌지역의 현금이용 편의성을 위해 ATM 보급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은행 및 ATM이 없는 지역이 LINK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무료 ATM을 설치하였다.

ATM의 운영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운영수익자 수익 보호를 위해 교환수수료를 4년간 5%씩 인하하였고, 영국 재무부는 농어촌지역의 ATM 폐쇄를 막기 위한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 프로그램을 강화하였다. 낙후 및 농어촌지역의 ATM의 보조금을 세 배 인상하고, 1km 반경 이내에 ATM이 설치되지 않은 기기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을 통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이동 거리를 고려한 신축적 ATM 설치와 현금 접근성 위원회의 구성으로 지속적인 현금 접근성 확보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22) 영국은 2019년 1월에서 2020년 9월 사이 전국의 ATM기가 62,967개에서 55,674로 7,283개가 줄어들었다(Dojo(검색일: 2022.11.24.) 참조)

23) Access to Cash Review(2019), p.24.

24) House of Commons Library(2022), p.9.

3) 사업성과

2023년 기준 LINK는 전국에 39,500개의 무료 ATM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이를 위해 매년 1,500만 파운드를 투자하고 있다. LINK는 현금 사용편의성 향상을 위해 추가적으로 무료 LINK 현금 액세스 앱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앱은 비영리 조직을 통해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주민은 이 앱을 통해 가장 가까운 ATM 위치를 검색할 수 있다. 더불어 최근에는 우체국, 주요 은행 및 건축조합과의 합의²⁵⁾를 통해 노령층 및 소상공인들의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을 확장하고 있으며, 영국 재무부도 ‘Community Access to Cash Initiative’를 통해 다양한 파일럿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그림 4-7〉 농어촌 금융서비스 지원사업



자료 : Mirror(2021.6.25.)(검색일: 2022.12.14.)(좌); The Yorkshirepost(2021.9.21.)(검색일: 2022.12.14.)(우)

25) 2021년 영국 전역의 현금에 대한 접근성 강화 및 보장을 위해 Access to Cash Action Group(CAG, 우체국, 주요 소매은행, 건축조합 등으로 구성)의 기간 관 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무료 ATM 보급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3. 일본, 지역포괄케어

1) 사업배경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인구 고령화 문제를 겪기 시작한 나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노인들의 의료 및 돌봄 서비스는 현재 농어촌지역이 직면하고 있는 복지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노인들의 복지정책은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이다.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은 2005년 개호보험법을 통해 도입되었으며 노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으로, 이를 통해 지역마다 지역포괄지원센터를 건립하였다. 일본의 기초 지자체 단위인 시정촌은 스스로 개호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직영 또는 위탁으로 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지역포괄지원센터는 지역 내 주민이 365일 24시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2014년 기준으로 전국에 4,557개가 설치되었으며 지사(출장소)까지 포함한다면 7,000개소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센터에는 간호사, 사회복지사, 케어 매니저 등을 배치하여 주민의 건강과 생활유지를 위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²⁶⁾

〈그림 4-8〉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



자료: 의료·복지뉴스(2018.05.15.)〈검색일: 2022.12. 05.)

26) 임정미(2018),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 지역포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국제사회보장리뷰 재정리

2) 문제점 및 해결 방안

일본은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1인 노인가구, 중증장애노인 등 다양한 유형의 고령인 돌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의료·돌봄 서비스를 위해서는 지역 단위의 복지서비스 구축이 필요했다. 이러한 시각에서 고령자의 기존 생활을 유지하면서 주거환경과 식사 같은 기초생활 지원부터 대화나 돌봄 등의 정서지원, 재활·간호·예방과 같은 의료지원까지 제공하는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이 등장하게 되었다.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고령인에 대한 돌봄이 시설에서 거주공간으로 이동되었다는 점이다. 노인 대부분은 집에서 생활하는 것을 선호하지만 가족들의 부담으로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통해 가정 돌봄 서비스를 선택하고 주거·의료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지역포괄케어센터는 노인 SOS 연락망을 구축하여 치매 노인이 길거리에서 배회할 경우, 지역주민들이 센터에 보호를 요청하면 돌봄과 보호를 연동하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3) 사업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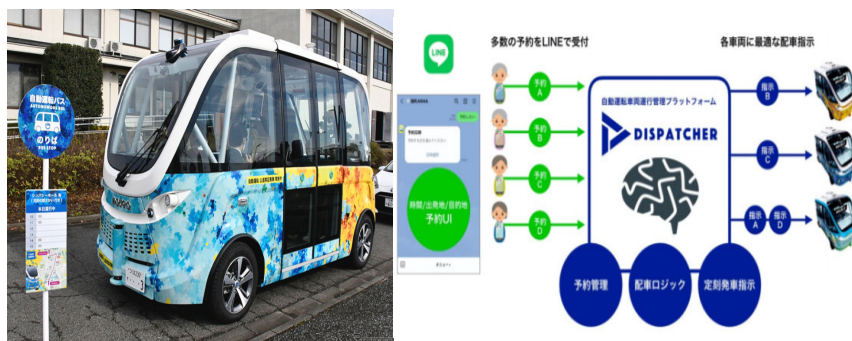
의료와 복지 등의 서비스가 종합적으로 제공되는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통해 지역의 노인 의료비가 평균 이하로 감소하는 성과가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고령화로 발생하는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노출된 노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소외된 지역에 병원과 노인 시설이 운영되면서 지역 일자리 증대, 환자와 가족들의 유입을 통한 소비 증가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개선되어 지역의 지속가능성도 확보되는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

4. 일본, 이바라키현 사카이마치 자율주행버스

1) 사업배경

일본 이바라키현 서남부에 위치한 사카이마치는 인구 약 2만 4천 명의 마을이며 인구 고령화가 진행된 대표적인 농촌 마을이다. 이 지역은 주변의 기차역(후루카와역, 동물공원역)이 자동차로 30분 거리에 있어 자동차가 지역주민의 주요 교통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지역 내 대중교통 버스가 있으나 배차 시간 등의 문제로 인한 이용 제약으로 자동차를 이용해야 하며, 이로 인해 고령으로 인해 운전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를 반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안전상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따라서 지역 내 교통약자를 위한 대응 방안이 절실하였다.

〈그림 4-9〉 일본 이바라키현 자율주행버스



자료 : Response, (2021.8.3.)(검색일 : 2023.2.3.)

2) 문제점 및 해결 방안

지역 내 교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대중교통버스 노선 및 운영시간 확대 등의 방안이 있었으나, 문제는 버스 확대를 위해 운전기사의 고용 증가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농촌지역은 버스면허를 보유한 운전기사를 고용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결국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무인 자율주행버스 아이디어가 제시되었고, 2020년 마을 의회에서 자율주행버스 도입을 위한 예산이 통과되어 그해 11월부터 시범사업이 시작되었다. 무인차량 시스템 구축에는 소프트뱅크 자회사인 BOLDLY가 착수하고, 운행관리, 유지보수 업체도 선정하였다. 자율주행버스에는 승객의 안전을 위해 운전기사 대신 버스안 내원이 탑승하여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고, 마을주민과 고령인의 안전한 이용을 책임지고 있다.

3) 사업성과

사업 초기 두 개의 정류장(총거리 5km)을 하루 8회 왕복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약 1년 후인 2021년도 하반기에는 16개 정류장(총거리 20km)을 하루 24회 운행으로 확장되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스마트폰 앱(LINE)을 통한 예약으로 이용하는 수요응답형 시스템도 활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2021년 11월 기준 누적 인원 약 5,300명, 운행 거리는 약 1만 4,525km에 달하였다. 향후 자율주행버스를 마을 전체로 확대해 총 26개 정류장을 운영하는 것이 목표이다.

〈그림 4-10〉 이바라키현 자율주행버스 노선 확대



자료: Response(2021.8.3.)(검색일: 2023.2.3.)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본 장에서는 국내외 농어촌지역의 복지서비스 정책의 특징과 시사점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어촌의 복지서비스 개선을 위한 방향성을 검토하였다.

첫째, 사회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민간의 역할에 주목하여 자생적인 공동체를 발굴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최근 농어촌지역 복지서비스의 공백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과 서비스 접근성 향상 등 실효적 서비스 제공 대책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그러나 농어촌지역은 높은 면적 대비 낮은 인구밀도 등 지역적 한계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체계 마련이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하향적인 접근방식이 아닌 지역공동체 주도의 사업으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촉진하게 된다. 예를 들어, 전북 완주의 이랑협동조합과 충남 태안의 만수동 어촌계는 자생적으로 공동체의 역할을 작동하고, 다양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소외된 복지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보여 준다.

둘째, 최소한의 사회보장 서비스의 유지로 취약계층에 대한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급격한 사회변화 및 기술발전에 적응하기 어려운 고령인 등을 위해 교육을 통한 디지털 기술에 대한 경계심 완화,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접근성 제공을 추진하여 효과적으로 제도 변화에 적응하도록 유도한다. 이는 국내외에서 시행되는 부천의 스마트 경로당, 영국의 금융서비스 지원사업(LINK) 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강화하여 포용적 복지시스템을 구축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의

기술 여건과 구심점이 되는 조직의 작동으로 공공과 민간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하는 제도적 지원을 마련하고 있다. 가령, EU의 유럽농촌개발네트워크, 일본의 지역포괄지원센터 등은 비대면 서비스 제공으로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문화, 의료 등 기회의 형평성을 제고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농어촌지역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05

어업인 복지서비스 개선 방안

제1절 어업인 복지서비스 정책과제 발굴

1. 어업인 복지서비스 정책과제 도출 방향

부문별 정책사업의 과제 도출은 현장의 수용성과 수요에 맞도록 발굴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발굴된 정책과제는 부처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정책과제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각 정책과제의 현장실태, 주민 수요 및 추진 여건(법적 근거, 타 부처 연계 등) 등이 다각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정책사업의 추진 방향성과 고려기준이 명확해야 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정책과제 발굴에 앞서 정책의 방향성과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과제 도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1) 현장의 수요 및 수용성 반영

정책과제는 현장의 수요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이는 일부 수요가 아닌 지역별·입지유형별로 공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정책

적 수요를 의미한다. 어촌 공통의 수요로 일반화할 수 있는 현장 의견을 분석하고 정책적 방향성을 설정한 뒤, 그 수요에 맞도록 현장에 다시 적용하도록 확장성이 있는 정책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일부 지역에 한정된 지역적 문제에 기반을 둔 정책과제는 다른 지역의 수용성 약화 및 복지서비스의 불균형을 초래해 어촌 주민의 불만을 가중시킬 수 있다.

2) 정책사업의 시급성

어촌 및 어업인의 복지서비스 개선 방안은 현장의 시급성도 반영되어야 한다. 매우 열악한 어촌의 복지환경에서는 다양한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이 필요하며,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지역별·입지유형별·세부대상별로 고려할 경우 더욱 세부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해진다. 따라서 발굴된 정책과제는 다시 현장의 문제점, 주민의 요구, 정책적 성과 달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강한 시급성 요구되는 과제 중심으로 발굴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추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는 어촌 주민들의 복지서비스 만족도 및 정책적 성과를 제고시킬 수 있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이다.

3)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 발굴

어촌 현장의 실태조사를 통해 정리된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현재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복지서비스가 무엇인지 파악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 발굴이 필요하다. 어촌의 복지 사각지대는 의료·복지·문화·레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어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각 부처의 정책사업 중 어촌지역에 제공되고 있지 않은 분야와 서비스를 발굴하고 이를 해양수산부 정책사업으로 추진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어촌지역의 물리적·공간적 접근성의 제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복지 사각지대 발생은 국민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사회적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4) 정책대상의 세분화

어촌지역의 복지정책은 입지유형 또는 정책대상 특성에 따라 세부 방향성과 계획이 상이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며, 이를 고려한 정책 발굴을 추진해야 한다. 청년, 여성, 다문화가정, 고령인 등에 따라 어촌 복지실태가 다르며 이에 따른 복지서비스 수요도 다르게 나타난다. 하나의 정책과제 일지라도 대상에 따라 그 내용이 다르고 세부적인 지원 방안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고려하여 과제 발굴이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발생되고 있는 어촌 복지 사각지대 발생의 원인 중 하나가 정책대상 세분화에 따른 세밀한 정책설계 미흡에 기인하고 있으며, 이는 어촌 현장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해양수산부의 정책사업 발굴 및 추진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5) 부처별 정책연계 강화

어촌의 복지정책 발굴과 추진은 해양수산부 단독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도 있으나, 기존 부처별 추진정책에 따라 어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연계·확장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어촌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복지서비스 수요를 충족하고 소외되고 있는 섬 지역 등의 어촌 지역 복지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협업하여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추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연계는 정책과제의 개선 및 발굴, 부처 간 협의를 통한 계획수립 등으로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만큼 정책 로드맵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사업 추진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2. 주요 부문별 대응과제 도출

본 연구에서 검토한 부처별 정책사업 현황, 국내외 사례, 복지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주요 부문별 대응과제를 도출하고, 기존 정책의 개선과 신규 추진사업으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또한, 과제 발굴은 앞서 논의한 정책과제 발굴의 방향성을 바탕으로 중점 분야를 설정하고 세부과제를 발굴하였다.

1) 보건·복지 부문 정책과제

보건 부문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분야는 의료 분야로 의료서비스의 질과 응급의료서비스에 대한 문제점이 공통적으로 지적되었다. 이는 섬 지역에서 더욱 시급한 사항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개선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나 관계 부처와의 연계 미흡, 관련 법률의 제약으로 인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의료서비스 질과 관련된 현장의 문제점으로는 의료진의 수준(공공보건의료서비스), 필수 진료과목 서비스 한계(내과, 산부인과 등),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예방접종(영·유아, 고령인 등)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응급의료서비스와 관련된 문제점은 응급상황 발생 시 처치 미흡, 골든타임 미확보, 해상 응급수송수단 부족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복지 분야에서 영·유아 및 고령인의 보육·돌봄의 문제점에 대한 시급성이 제기되었다. 영·유아 보육에서 어린이집의 부재로 인한 보육지원의 문제점, 보육을 위한 다양한 지원의 한계(육아 물품)가, 고령인을 위한 돌봄 지원체계 미흡(사회복지사 방문, 사회성 회복 등)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육에 대한 지원은 어촌지역의 여성에 대한 지원과 연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중요 분야와 세부요인들을 바탕으로 정책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5-1〉 보건·복지 부문 정책과제 도출

구분		문제점	정책과제 도출 및 내용
의료	의료 서비스 질	• 의료진의 수준 • 필수 진료과목 부재 • 정기적인 건강검진 • 주민 예방접종의 어려움	• (개선) 어업안전보건센터 기능 확대 및 지원 - 어업안전보건센터 지정 확대(전국 시도) - 정기적인 방문검진(질병, 건강관리), 예방접종 추진 • (신규) 원격 의료서비스 제공 - 보건소, 지역병원과 연계한 원격의료서비스 제공 - 기초 건강검진 관리
	응급 의료 서비스	• 응급상황 발생 시 처치 미흡 • 골든타임 미확보 • 해상응급수송수단 부재	• (신규) 응급선 건조 및 운영 추진 - 응급선을 섬에 배치하여 상황 발생 시 육지로 수송 - 소규모 어선(10톤 미만)을 활용하여 운영 추진
보육·돌봄	영·유아 보육 지원	• 보육시설 부족(어린이집) • 보육용품·장비 지원 부족	• (신규) 마을공동체 보육시설 운영지원 - 마을 내 보육 시설지원 및 공동체 자체 운영을 통한 보육 여건 개선 • (신규) 찾아가는 놀이터 지원사업(책, 장난감 등) - 영·유아에게 필요한 책, 장난감 등을 직접 방문하여 임대
	고령인 돌봄 지원	• 고령인 생활관리 지원 미흡 (사회복지사 방문 제약) • 사회성 회복지원 (외로움, 우울 등)	• (개선) 사회복지사 양성 및 지원 확대 - 고령인 돌봄을 위한 사회복지사 양성 및 현장방문 지원 확대

자료: 저자 작성

2) 교육·문화 부문 정책과제

교육·문화 부문에서 가장 큰 개선사항으로 판단되는 부분은 어촌자녀의 교육 여건 개선에 대한 부분으로 판단된다. 어업, 귀어·귀촌을 위한 교육 등은 부처 차원에서 점차 확대되고 있는 반면, 어촌지역 자녀의 교육 여건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어촌의 초등학교 폐교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학교 방과 후 활동, 교육 프로그램의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 특히, 섬어촌의 폐교로 인해 육지로 가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해상교통, 교육환경 등이 열악하여 육지로 이주해야 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다음으로 정책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문화·여가 부분이며, 어촌은 최소한의 여가활동을 통해 삶의 질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업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세대부터 고령인까지 관련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전혀 지원되지 않고 있어 어촌 주민들의 문화·여가활동이 거의 없어 TV 시청이나 마을주민들 간 친목도모 수준의 활동만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문화·여가 부분은 정책대상에 따라 다양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해 보이며 이에 따른 정책과제를 발굴하였다.

어촌지역 자녀의 교육 부분과 문화·여가 전반에 대한 과제를 도출하였고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5-2〉 교육·문화 부문 정책과제 도출

구분		문제점	정책과제 도출 및 내용
어촌 자녀 교육	학교 교육	• 어촌지역의 학교 폐교 지속 • 방과 후 활동 및 교육 프로그램 열악	• (신규) 폐교활용 교육지원센터 설립 - 원격 교육시설 및 프로그램 제공 - 방과 후 활동을 위한 체육·교육 프로그램 지원
	육지 진학 지원	• 섬어촌의 해상교통 문제로 인한 통학의 어려움 및 안전문제 발생	• (신규) 기항지 섬 주민 안전센터 설립 - 기상악화 시 체류할 수 있는 편의시설 설립 - 학생지원을 위한 도서관, 영상교육실 등 제공 • (신규) 육지진학자녀 기숙사 설립 - 육지 학교(중·고등학교) 인근 기숙사 설립 지원
문화 · 여가	청년 · 여성	• 청년세대 여가시설 및 프로그램 부족 - 문화(영화, 공연 등) 및 레저스포츠(요가 등) 참여기회 부족 • 가족 중심 문화·여가 공간 부족	• (신규) 어촌 작은 문화체험관 설립 - 유희부지 또는 건물을 활용하여 문화·여가활동이 가능한 시설 건축 - 프로그램은 운영·관리 기관에서 개발 및 적용 (세대별, 가족별 프로그램 개발) - 다문화가정을 위한 프로그램,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지역별 동포 네트워크 구축
	다문화 가정	• 외국인주민의 한국문화 체험 기회 부족 • 같은 국가 출신 구성원끼리의 교류 부족	
	고령인	• 고령인 문화·여가 시설 및 프로그램 부족 • 건강관리를 위한 레저 프로그램 부족	• (신규) 어촌형 스마트 경로당 시스템 구축 - 온라인 시스템 구축을 통해 건강관리, 여가활동, 스포츠 활동까지 다양한 문화·여가 체험기회 확보

자료: 저자 작성

3) 정주여건 부문 정책과제

정주여건 부문에서 어촌이 해결해야 할 중요 부분으로 생활서비스 개선, 주거 여건 개선, 해양 쓰레기 처리, 해상교통 개선으로 판단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과제를 발굴하였다.

어촌의 생활서비스 공급 부족 문제는 어촌의 인구 감소와 함께 심화되고 있으며, 주민들은 생활서비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중심으로 이동해야 함에 따라 많은 비용과 시간을 소모하고 있다. 최소한의 생활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생필품 구매, 행정사무, 금융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필요 시 비용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어촌의 거주환경은 지속해서 악화되고 있고 주택이 노후화되어 개선이 필요하나, 소득이 낮은 고령인은 노후주택을 수리의 비용 부담으로 인해 제때 주택수리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냉난방 문제 발생과 건강 문제까지 연결되어 삶의 질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노후 주택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거주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어촌 주민의 안정적인 거주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세 번째로, 해상교통에 대한 제약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여객선의 운항횟수 부족으로 일일생활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기상악화 요인으로 인한 문제도 있으나 여객선사의 수익으로 인한 문제로 인해 발생되고 있다. 더욱이 여객선이 모도에는 운항되나 자도에는 운항되지 않아 개인어선을 통해서 모도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안정적인 섬 주민의 해상교통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어촌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문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어촌은 주민들의 생활 쓰레기, 관광객으로 인한 관광객 쓰레기, 어업활동 과정 및 외해에서 유입되는 해양 쓰레기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처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어업인의 어업활동에 제약을 주고, 환경오염, 경관훼손 등의 문제점을 일으킨다. 특히 섬어촌의 경우 적시에 처리되지 않은 쓰레기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처리되지 않은 쓰레기를 소각 및 해양 폐기를 통해 환경적 문제점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앞서 논의된 네 가지 중점 부분을 고려하여 정책과제를 도출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표 5-3>과 같다.

<표 5-3> 정주여건 부문 정책과제 도출

구분		문제점	정책과제 도출 및 내용
기초 생활 지원	생활 서비스	• 기초생활 서비스 부족 (생필품구매, 행정·금융서비스 등)	• (신규) 무인 편의점 설치 - 무인으로 생필품 판매할 수 있는 시설 설치 - ATM 설치로 금융서비스 해소 - 무인 행정서비스 기기 설치로 주요 행정서류발급 지원
정주 환경	주거 환경 개선	• 노후주택 증가로 인한 문제 발생 (냉난방 취약) • 난방 비용부담으로 보일러 가동 제약 발생	• (신규) 어촌 주민 주택 개선 및 거주 지원사업 - 취약계층(저소득, 한부모가정 등)에 대한 주택 개선 비용 일부 지급 - 난방비에 대한 일부 비용지원
	해양 쓰레기 처리	• 쓰레기의 처리미흡으로 소각, 폐기 등의 환경문제 발생 • 악취, 경관 등의 문제 발생 및 자녀교육에 악영향 발생	• (신규) 쓰레기 수거선 건조 및 지원(섬어촌) - 소규모 쓰레기 수거선(10톤 미만)을 건조하여 정기적으로 쓰레기 수거 지원 - 분리수거가 가능한 수거선박 건조
교통 문제	해상 교통	• 선사의 수익성 문제로 인한 일일 생활권 미확보 • 모도-자도 해상교통 연계 부족으로 어려움 발생	• (개선) 해상교통 완전공영제 추진 -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한 선사별 차등지원 방안 마련 • (신규) 모도-자도 해상버스 도입 - 소규모 여선을 활용하여 지역공동체에서 정기적으로 운영 가능하도록 지원

자료: 저자 작성

4) 경제활동 부문 정책과제 도출

어촌지역의 경제활동 부문의 문제점은 어업 외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점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에 따른 역량 강화, 주민갈등 등의 문제로 성과에 제약이 발생하는 점이다. 특히,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고령인에 대한 일자리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업의 경우, 최근 외국인 노동자가 증가함에 따라 노동자의 주거지원에 어업인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추가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어업 관련 교육도 매우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관련 과제는 어촌의 일자리 지원과 외국인 근로자 지원에 대한 과제를 도출하였다.

〈표 5-4〉 경제활동 부문 정책과제 도출

구분		문제점	정책과제 도출 및 내용
일자리 지원	마을 사업 지원	• 마을사업 활성화 제약 발생 - 사업 추진 시 주민갈등 발생 - 주민 역량한계 등으로 지속가능성 미흡	(개선) 어촌신활력 사업의 리빙랩 추진 - 주민 간 갈등해소 및 합의를 통한 사업 추진 - 전문가 참여로 인한 사업의 전문성 확보 - 역량 강화를 통한 마을 중심의 지속가능성 확보
	연령별 일자리 지원	• 고령인 일자리 부족 • 청년·여성을 위한 일자리 부족	• (개선) 청년어업인 지원 대상 및 범위 확대 - 만 45세까지 지원 대상 확대 - 어업 관련 산업으로 지원범위 확대 • (개선) 어촌 공공일자리 확대 - 해안정비, 쓰레기 청소 등 공공일자리 확대
외국인 근로자 지원	거주 시설 지원	• 외국인 노동자 거주시설 부족 및 노후화 문제 발생 - 외국인 노동자의 어촌이탈 요인으로 발전	• (개선) 유형별 외국인선원 기숙사 건립 - 지역별 외국인 노동자 규모에 따른 외국인 선원 기숙사 건축 지원(빈집, 유희시설 활용 등)
	어업 교육 확대	• 외국인선원의 언어장벽, 어업교육 미흡으로 사고 발생 위험 증가	• (신규) 외국인종사자 종사어업 교육지원 및 강사 육성 - 종사어업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주요 언어별 교육자료(영상, 책자 등) 및 주요 국가별 강사 육성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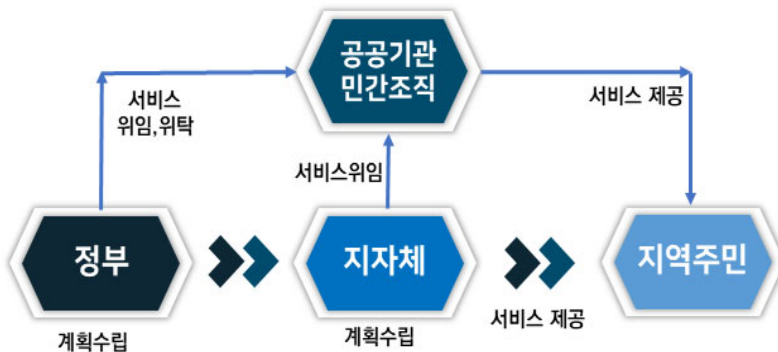
제2절 어업인 복지서비스 추진기반 마련

1. 복지서비스 거버넌스 개편

1) 기존 복지서비스 거버넌스

현재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복지정책은 하향식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중앙집중식 복지시스템과 전달체계는 재정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수급자의 만족도도 떨어지는 비효율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 최근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사 융합 전달체계 구축을 시도하고 있다.²⁷⁾ 이는 하향식 전달체계를 보완하고 지역사회 수요에 맞는 상향식 복지서비스 시스템 구축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소규모 어촌의 복지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은 열악한 상황이다.

〈그림 5-1〉 중앙 중심의 하향식 복지서비스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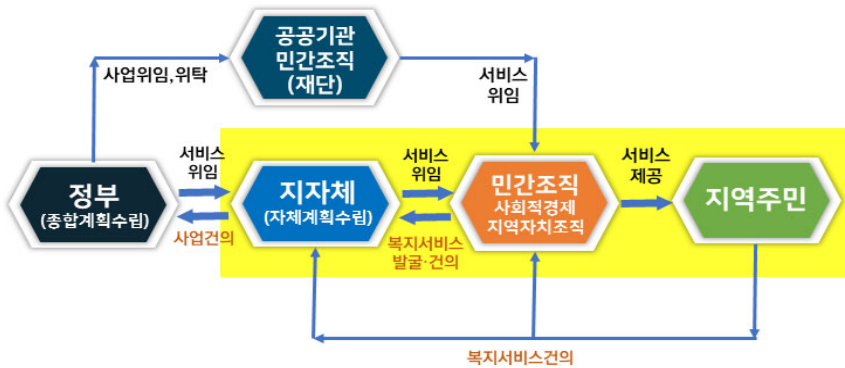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27) 보령내일신문(2022.8.24.)(검색일: 2023.2.18.)

2) 복지서비스 추진 거버넌스 개편 방안

중앙 중심의 하향식 복지서비스 추진체계 아래에서는 지역적 특성과 대상을 반영한 정책 추진에 한계가 발생하여 정책지역 또는 대상별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기존의 추진체계 개편을 통해 어촌에 맞는 세밀하고 현장 중심의 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그림 5-2〉 지역 중심의 상향식 복지서비스 추진체계



자료: 저자 작성

복지서비스 추진체계 개편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복지정책의 발굴 및 계획수립, 복지서비스의 운영·관리가 모두 지역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복지서비스 운영 주체인 민간조직과 지자체에서 복지서비스 과제를 발굴하고,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정부 부처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군 단위에서 필요한 사업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체는 지역의 민간조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현장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개선 부분을 검토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자체 또는 관련 기관에 이를 건의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즉, 지역의 민간조직은 현장과 가장 밀착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추적 역할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에 복지서비스를 위임·위탁했던 공공기관 또는 민간조직(재단)의 역할은 다소 축소될 것으로 판단된다.

2. (가칭) 어촌·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 제정

농어업인의 삶의 질 전반을 다루고 이와 관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법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있으며, 관련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농어촌지역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기본계획은 농촌과 어촌이 분류되어 있지 않고 농어촌으로 통합되어 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어 어촌·어업인의 특성을 반영한 계획수립에 한계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정책적 소외현상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농촌진흥청이 추진하고 있는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는 농촌 중심의 실태조사로 어업인의 복지실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었지만, 여전히 이에 대한 대응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어촌과 어업인의 특성을 반영한 삶의 질 향상 관련 사업의 체계적인 수립과 추진이 부재하기 때문이며, 이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계획수립과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 제38조에 어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한 조항이 있으나 수산업·어촌발전 기본계획에 삶의 질 관련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이를 별도로 법제화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어촌의 지역소멸위험이 다른 농촌, 산촌 등 다른 유형보다 그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삶의 질 법체계 아래에서 다른 분야와 동일한 방식으로 삶의 질 여건 개선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 농어업·농어촌 분야를 통합한 법률에 근거해 정책계획이 수립되어 적극적으로 어촌·어업인을 위한 정책 대응을 하지 못하였던 한계를 벗어나 해양수산부 법률에 근거한 삶의 질 향상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기존의 관련 법들과 연계함으로써 주도적인 정책계획 수립과 사업 발굴·추진으로 방향성을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칭 어촌·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법률상에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조항을 포함하여 체계적인 어촌 복지실태 조사와 이를 바탕으로 한 사업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삶의 질 위원회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그동안 미흡하였던 어업인 복지서비스를 개선하고 열악한 어촌의 환경과 어업인의 삶의 질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 5-5〉 어촌·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 제정(안)

조항	세부내용
법률명	어촌·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특별법
대상지역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근거한 어촌
공간위계	읍·면 전 지역 및 동 지역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관련 조항(안)	(어촌·어업인 복지실태조사) ① 정부는 어업인의 삶의 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어업인등의 복지실태 2. 어업인등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현황 3. 어업인의 소득 및 작업환경 현황 4. 어촌의 교육 여건 5. 어촌의 교통·통신·환경·기초생활 여건 6. 어촌의 문화·여가 여건 7. 그 밖에 어업인등의 복지증진과 어촌의 지역개발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어촌·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토대로 어촌·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 각 호를 포함하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자료: 저자 작성

3. 복지서비스 공급조직 지원 확대

지역 중심의 상향식 복지서비스 추진체계에서 지역 내 민간조직의 역할 수행 주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역의 민간조직 발굴 및 확대를 위해 2장에서 논의한 민간조직의 복지서비스 현황을 바탕으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1) 지역 중심 사회적 경제조직 지원 강화

사회적 경제조직은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한 조직으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기업 등이 있다.

각 조직의 형태에는 차이가 있으나 ① 경제적 효율성보다는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와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한 자율 경영을 통한 운영, ② 구성원 간 이익공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의 기여 등 사회적 가치를 우선 추구, ③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공동체를 구성하여 상호협력, ④ 사회문제 해결에 있어서 시장과 정부의 실패를 보완하는 제3의 영역으로 기능하는 공통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²⁸⁾

따라서 어촌지역의 복지서비스 개선을 위한 운영조직으로 사회적 경제조직의 활용은 소외되어 있는 어촌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정부가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사각지대 해소와 이에 따른 사회적 가치를 달성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적 경제조직 유형 중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은 이윤을 추구의 목적이 있어 주로 경제활동 부문과 교육문화 부문에

28)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검색일: 2023.2.9.)

사업 추진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복지, 정주여건 부분에 최근 사업 참여도 증가하고 있어 어업인 교육, 어촌 정주환경 개선, 주택 개선 등의 사업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 예로, 국내 사례의 ‘함께하는다이웃’은 수익보다는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립되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로, 지역사회 공익 창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어촌지역의 부족한 생활·보건·복지서비스 공급을 위해 사회적협동조합의 역할도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사회적협동조합은 이윤을 추구하지 않아 지역의 공공서비스 및 복지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최근 복지 수요의 증가로 인해 그 수가 지속하여 증가하고 있다. 최근 부천시에서 스마트 경로당을 운영하여 성공을 할 수 있었던 원인은 노인복지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관리를 담당한 부천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자체가 수행할 수 없는 전문적인 부분을 담당하여 지역주민들의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만족도를 크게 향상시키는 성과를 도출하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사회적 경제조직을 찾기가 쉽지 않다. 수도권, 광역도시에 전체 조직에 50% 가까이 분포하고 있으며 나머지 지역에 작은 규모로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어, 다양한 복지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조직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어촌의 복지서비스 여건 개선을 위해 어촌 지역 사회적 경제조직 설립과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담당 부처인 해양수산부에서도 귀어·귀촌 지원사업에 어촌지역 사회적 경제조직 창업자금 지원도 포함하여 젊은 세대의 유입을 촉진시키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또한, 어촌지역 복지서비스 지원조직에 대한 운영·관리 비용을 지자체 또는 해양수산부가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운영을 통한 복지서비스 공급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표 5-6〉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개선(안)

구분	일자리창출 지원	전문인력 지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주요 지원 내용	•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일부 • 지원한도 50명 • 근로자 지원 - (일반) 40~50% - (취약계층) 60~70% - 지역 자율사업 추가 지원, 최대 90%	• 월200/250만원 한도 (인증 2명, 예비 1명) * 자부담 연차별 10~50%	•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 지원한도 50명 * 인증기업만 해당	• 인증: 연 1억 원 • 예비: 연 5천만 원 * 자부담 10~30%
지원 기간	•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 약정	•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 약정	-	•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 약정
최대 지원 기간	• (예비)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 2년 지원 (인증) 인증 후 해당 사업의 지원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 3년 지원	• (예비)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 2년 지원 • (인증) 인증 후 해당 사업의 지원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 3년 지원	• (인증) 인증 후 해당 사업의 지원 개시일로부터 최대 4년 지원	• (예비)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 2년 지원 • (인증) 인증 후 해당 사업의 지원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 3년 지원



개선 방안	• 어촌지역 근로자 지원을 담당 부처, 지자체 추가지원을 통해 80%로 확대 • 최대지원 기간을 예비 3년, 인증 4년으로 확대	• 자부담 추가지원 (최대 30% 이내) - 부처, 지자체 연계 • 최대지원 기간을 예비 3년, 인증 4년으로 확대	-	• 자부담 추가지원 (최대 20% 이내) - 부처, 지자체 연계 • 최대지원 기간을 예비 3년, 인증 4년으로 확대
----------	--	--	---	--

자료: 고용노동부(2022), 2022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10p 재정지원 방안을 재구성

2) 지역공동체 조직 활용 방안

어촌지역의 복지서비스 실태와 수요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것은 어촌에 거주하는 주민과 공동체 조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현장에서 가장 빠르게 소통하며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어촌계, 어촌 마을기업 등의 공동체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공동체조직을 복지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조직으로 육성하고 활용할 수 있다면 지역의 복지 수요를 자체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마을 규모와 인구 분포를 고려하였을 때 하나의 어촌마을의 조직을 활용하는 것보다 여러 마을조직을 연계 및 규모화시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다. 또한, 고령화된 인구구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귀어·귀촌인 및 청년세대를 교육하여 복지서비스 분야 일 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면 어촌 인구 유입을 위한 방안으로도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남 거창의 단노을 생활문화센터의 사례는 이러한 지역조직을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로, 국가가 지원하고 마을 중심의 사업 발굴 및 역량을 강화하여 마을의 다양한 생활서비스, 문화·레저, 관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 대표적인 사례라 볼 수 있다.

어촌마을 공동체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위한 조직을 구성하고 다양한 역량과 전문 분야를 보유한 인력을 유입시켜 현장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발굴하고 적용해 어촌의 자생적인 복지서비스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조직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발전 및 육성한다면 서비스 대상인 주민과 공동체 조직이 하나로 연결된 통합적인 복지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1) 공간적·물리적 접근성 한계 극복

어촌의 공간적·물리적 접근성 한계는 어촌의 복지서비스 제공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며, 특히 섬어촌과 같이 접근성의 제약이 높은 지역은 복지서비스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복지 소외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기존의 복지서비스 공급체계에서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는 것은 시간적·금전적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정책적 효율성이 매우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최근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다양한 스마트 기술(ICTs, 빅데이터, 원격시스템 등)을 접목한 스마트 빌리지 개념이 도입되어 관련 인프라, 서비스 등이 각 부처에서 다방면으로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을 다양한 어촌 복지서비스 사업에 적용할 수 있다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스마트 경로당이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대표적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와 연계된 부처별 노인돌봄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를 확장하여 스마트 아동돌봄센터, 스마트 여가문화 등의 프로그램이 계속 발굴되고 있는 것을 볼 때, 다양한 연령·성별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복지·교육·문화·레저 등의 분야에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열악한 어촌지역 내외 대중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응답형 무인 교통시스템도 어촌지역의 접근성을 해결하는 중요한 기술로 인식되고 있으며, 사업 초기 우려로 제시되었던 안전성의 문제도 기술의 발전과 안전인력의 활용을 통해 해결해 나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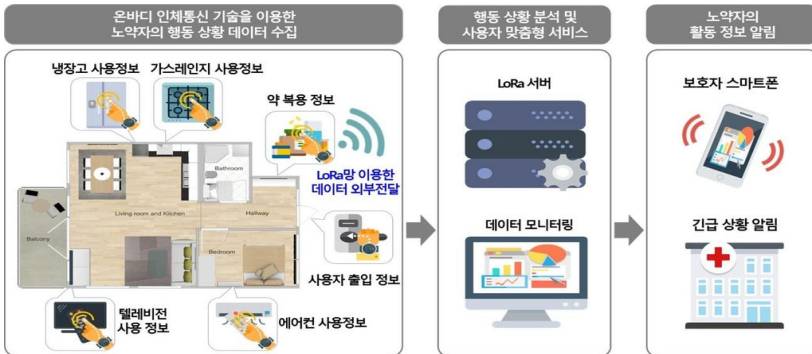
〈그림 5-3〉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전달체계 혁신 사례



〈국토교통부 고령자 스마트 돌봄서비스 개념도〉



〈스마트 돌봄센터 원격화상 강의(성남시)〉



〈용인시 노인원격돌봄 서비스〉

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1.11.4.)(검색일: 2023.2.20.); 옥성미디어 홍보동영상(검색일: 2023.2.20.); 연합뉴스(2020.6.23.)(검색일: 2023.2.20.)

2) 다양한 정책대상별 복지서비스 수요 충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방안은 다양한 정책 대상에게 관련 복지서비스를 폭넓게 적용·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각 부처는 복지정책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정책대상자를 공간별(어촌, 농촌, 산촌 등), 개인 특성별(연령, 성별, 직종별 등), 분야별(의료, 복지, 교육, 정주환경 등) 특성에 따라 세분화하고, 이에 따라 정책 프로그램이 설계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화된 정책서비스를 효율적·효과적으로 공급하는 방안은 스마트 기술 활용과 현장 접근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스마트 기술의 활용은 삶의 질 관련 주요 4대 부문에 모두 활용이 가능하며 범용성도 클 뿐만 아니라 비용적 측면에서도 기존의 다른 방안 대비 장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각 정부 부처에서 추진되고 있는 스마트 기술 활용사업의 통합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통해 정책적 효율성 및 성과를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림 5-4〉 정책대상 세분화에 따른 복지서비스 공급 방안



자료: 저자 작성

06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결론

국토 외곽지역에 위치하여 공간적·물리적 제약이 매우 많은 어촌은 1차 산업 중심의 어업 생산성 악화, 열악하고 위험한 노동환경, 어업인구 고령화, 정주여건 악화, 열악한 생활·복지 서비스, 청년세대 유출 등으로 지역의 쇠퇴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어촌이 국내에서 인구소멸위험이 매우 크게 나타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어촌지역의 인구소멸위험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속화되고 있는데, 2021년 수행된 연구²⁹⁾에 의하면 2045년에는 지역소멸위험지역이 전체 지역의 96.64%로, 지역소멸고위험지역³⁰⁾은 전체 지역의 87.02%로 예상되어 2018년에 수행된 연구³¹⁾의 지역소멸고위험지역 수준(81.2%)보다 수치가 높아 앞으로 어촌지역소멸 위기가 악화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어촌의 위기에 가장 중요한 요인 중 어촌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촌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다양한

29) 조정희 외, 앞의 책, p. 49.

30) 지역소멸위험지수 0.2 미만 지역을 의미함

31) 박상우 외(2018), 인구소멸 시대의 어촌사회 정책연구, p. 75.

생활 및 복지서비스와 정주여건 등이며, 이러한 요소들이 어촌 주민의 삶의 질 수준과 직결된다. 특히, 어업인 복지서비스의 한계로 인해 지속적인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함에도 이를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점은 지속해서 청년세대와 주민이 지역을 떠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어촌의 복지실태에 대한 조사·분석을 바탕으로 복지서비스의 개선과 사업추진체계 구축에 대한 시급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며,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어촌의 복지서비스 실태에 대한 정밀한 조사와 분석을 바탕으로 개선과제 도출 및 복지서비스 추진기반 구축을 위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주요 부처별 복지정책 동향, 국내외 사례, 어업인 복지실태조사, 섬 지역 현장실태조사를 통해 어촌의 복지정책 개선 방향과 주요 부문별 과제를 제시하였고, 향후 어촌의 지역적 특성과 다양한 정책대상에 맞는 복지정책 계획을 수립하고 전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 마련을 위한 방안도 제시하였다.

우선, 주요 부문별 정책과제를 발굴에 앞서 다섯 가지의 정책과제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에 맞는 과제를 도출하도록 하였다. 정책과제 방향성은 현장의 수요와 수용성을 고려하여 현장밀착형 정책과제를 발굴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시급성이 있는 현장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자 하였다. 또한, 최근 분야별 복지정책의 다양한 정책대상 세분화 및 사업 추진의 추세에 맞추어 어촌 분야도 정책대상을 세분화하고 정책대상에 맞는 과제를 발굴 및 적용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부처 간 연계가 미흡하여 발생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향으로 부처별 정책사업 연계 강화를 위한 사업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다섯 가지의 정책과제 도출 방향성을 바탕으로 주요 부문별 정책과제를 발굴하였다. 정책과제는 부문별 중점 분야 및 주요 이슈에 따라 과제를

발굴하였고, 기존 정책의 개선 또는 신규사업으로 분류하여 그 세부 내용을 정리하였다. 보건·복지 부문에서는 중점 분야를 의료와 보육·돌봄으로 나누어 과제를 도출하였으며 신규과제 네 개, 개선과제 두 개를 제시하였다. 교육·문화 부문은 어촌자녀교육과 문화·여가 부분을 중점 분야로 정하고, 교육 지원과제 및 정책대상별 문화·여가 과제 다섯 개를 발굴하였다. 정주여건 부문은 기초생활지원, 정주환경, 교통문제를 중점 분야로 선정하고 생활서비스, 주거환경 개선, 해양 쓰레기 처리, 해상교통의 세부이슈에 따른 네 가지 신규과제와 한 가지 개선과제를 제시하였으며, 경제활동 부문은 일자리지원과 외국인 근로자 지원에 대한 과제로 네 가지 개선과제와 한 가지 신규과제를 제안하였다.

〈표 6-1〉 부문별 정책과제 발굴

구분			정책과제
보건 복지	의료	의료서비스 질	• (개선) 어업안전보건센터 기능 확대 및 지원 • (신규) 원격 의료서비스 제공
		응급의료서비스	• (신규) 응급선 건조 및 운영 추진
	보육·돌봄	영·유아 보육지원	• (신규) 마을공동체 보육시설 운영지원 • (신규) 찾아가는 놀이터 지원사업(책, 장난감 등)
		고령인 돌봄지원	• (개선) 사회복지사 양성 및 지원 확대
교육 문화	어촌자녀교육	학교교육	• (신규) 폐교활용 교육지원센터 설립
		육지진학지원	• (신규) 기항지 섬 주민 안전센터 설립 • (신규) 육지진학자녀 기숙사 설립
	문화·여가	청년·여성·다문화	• (신규) 어촌 작은 문화체험관 설립
		고령인	• (신규) 어촌형 스마트 경로당 시스템 구축
정주 여건	기초생활지원	생활서비스	• (신규) 무인 편의점 설치
	정주환경	주거환경 개선	• (신규) 어촌 주민 주택 개선 및 거주 지원사업
		해양 쓰레기 처리	• (신규) 쓰레기 수거선 건조 및 지원(섬어촌)
	교통문제	해상교통	• (개선) 해상교통 완전공영제 추진 • (신규) 모도-자도 해상버스 도입
경제 활동	일자리 지원	마을사업지원	• (개선) 어촌신활력 사업의 리빙랩 추진
		연령별 일자리 지원	• (개선) 청년어업인 지원 대상 및 범위 확대 • (개선) 어촌 공공일자리 확대
	외국인근로자 지원	거주시설지원	• (개선) 입지유형별 외국인선원 기숙사 건립
		어업교육 확대	• (신규) 외국인종사자 종사어업 교육지원 및 강사 육성

자료: 저자 작성

다음으로 발굴된 과제가 안정적으로 사업화되어 추진하기 위한 어촌·어업인 복지서비스 추진기반 마련을 위한 네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장 중심의 복지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현재 중앙 중심의 하향식 복지정책 추진 체계에서 벗어나 지역 중심의 상향식 복지서비스 추진체계로 변화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거버넌스 개편 방안을 제시하였고, 이러한 거버넌스 아래에서 해양수산부가 주도하는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한 관련 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정책대상의 세분화와 다양한 복지정책과제에 따른 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지역 기반의 복지서비스 공급조직의 육성과 지원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어촌의 공간적·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론적인 방안으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방안도 마련하여 제시하였다.

제2절 정책제언

어업인의 복지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은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농촌 분야와는 다르게 이제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방향성 설정과 과제 발굴을 위한 논의의 출발점에 있으며, 이를 위해 선제적으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어촌형 복지서비스 사업추진체계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복지실태조사 및 섬어촌 현장실태조사 등을 통해 발굴된 과제들이 이러한 기반이 조성된 후에 추진된다면 현재 발생하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 없이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다양한 어촌 주민에게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앞에서 논의된 발굴과제와 복지서비스 추진기반 마련 방안을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정책적으로 고민하고 고려해야 할 사항을 추가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1) 어업인·어촌 복지실태 파악 및 통계 구축

어업인·어촌의 복지정책 발굴 및 개선을 위해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농어업 복지실태 또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조사보다 더 세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며, 주요 부문별 정량, 정성 데이터의 장기 시계열 통계 구축이 필요하다. 농진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는 농업 중심의 조사로 어촌·어업인의 복지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삶의 질 전문지원기관의 어업인 삶의 질 사업은 예산상의 한계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복지실태 미흡과 관련 통계 부족은, 어촌·어업인을 위한 정확한 과제 발굴로 연결되지 못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어업인의 복지실태를 파악하고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조사체계와 관련 통계 구축을 통해 어촌의 복지 개선을 위한 현장밀착형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자료들은 향후 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또는 해양수산부 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장기적인 로드맵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어촌의 복지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2) 해양수산부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정책 수립 및 추진

어촌·어업인의 복지서비스 수요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적이다. 관련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지사업도 정책대상과 내용이 다변화되고 범위의 확장 시도도 지속되고 있지만, 이는 사업의 중복 우려 또는 부처 간 협의의 어려움으로 인해 신규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사업의 추진 제약으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는 어업인과 어촌 주민의 불편과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어 우선 관계 부처인 해양수산부가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계획수립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필요시 관계 부처 협의를 추진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대상을 발굴하고 다양한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어촌보다 다양하게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어촌 역시 복지서비스의 확대를 위한 정책사업을 위해 적극적인 실태 파악, 연구 추진, 이를 바탕으로 하는 정책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이 필요하다.

따라서 5장에서 제시한 해양수산부 주도의 거버넌스 구축과 관련 법률 제정은 어촌 중심의 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중요한 전제조건이 될 것이다. 또한, 최근 범정부 차원에서 각종 규제로 인한 정책 추진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여 추진하고,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다양한 법률적 제약사항으로 인해 추진되지 못하는 정책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어 이를 활용한 적극적 행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3) 중앙과 지역의 소통 강화

어촌지역 현장밀착형 복지서비스 발굴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지자체, 어촌 주민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 어촌 주민이 현장에서 직접 체감하고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어촌특성을 반영한 지역별·입지유형별 실태 진단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어촌 현장의 정책 수요에 따른 과제를 발굴해야 한다. 따라서 어촌의 복지 수요를 파악하고 현장에 맞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지역 행정, 주민, 관련 기관과의 소통과 협력이 가장 중요하며, 정부는 지역의 주체들과 직접적인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을 통해 관련 이슈를 논의하고 이에 따른 정책 방향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복지정책을 상향식 추진기반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게 된다면 현장 및 지역 중심의 복지체계를 만들 수 있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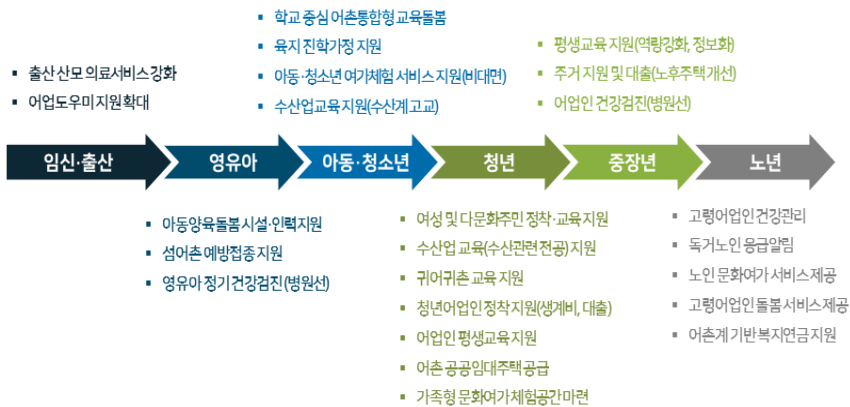
또한, 중앙정부와 지역의 소통 강화는 다양한 유형, 세대, 계층에 대한 차등적인 복지서비스 제공도 가능하게 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시킬 수 있고, 이를 통해 정부 지원사업의 효율성 및 지역주민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공동체 기반의 복지서비스 조직의 역할도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여 이러한 조직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크게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4) 생애주기별 복지체계 구축

어촌의 복지서비스 개선은 보건복지부나 농업이 추진중인 여성 생애주기별 사업추진체계를 바탕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어업인의 복지정책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은 일부 세대 또는 단편적인 대상의 정책 추진으로 해결될 수 없다. 보건복지부의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보장처럼, 어촌공간에서 전 생애에 걸쳐 발생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고 제도적 소외를 방지하도록 사업체계를 구축해야 안정적인 어촌생활 기반을 마련하고 새로운 인구의 유입을 이끄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어촌의 공간적·물리적 제약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생활기반 여건을 마련하는 의미에서도 복지서비스 체계가 보다 더 촘촘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범부처 차원의 생애주기별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출산부터 영·유아, 아동·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등으로 주요 생애주기별 중점 복지정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맞는 정책대상별 사업 추진을 통해 전 세대가 어촌공간의 생활에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림 6-1〉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개선과제(예시)



자료: 이상규 외, “어업인·어촌 복지서비스 개선 및 복지체계 구축 방안”, 102p, 2023

5) 단계별 복지정책사업 추진

앞서 발굴된 복지정책과제는 어촌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대상, 범위, 내용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련 과제들은 각각의 실태조사, 계획수립, 정책 추진 여건에 따른 우선순위, 예산 규모 등 실무적인 추진 경과 및 검토를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과제는 다양한 여건과 환경에 따라 사업의 추진 일정 및 계획에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맞추어 단계적인 추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해양수산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경우는 단기적으로 바로 추진이 가능하나,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거나 선제적으로 실태 파악을 통해 사업 타당성 및 규모를 고려해야 하는 경우는 중기적으로 추진하고, 사업의 전환을 통한 중·장기 개선이 필요하거나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여 시간이 오래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과제는 장기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발굴된 과제는 다양한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분류하고, 향후 추가로 고려되는 사업도 이러한 기준들을 고려하여 적정 단계 및 시점에 판단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이러한 관점으로 발굴과제의 단계별 추진계획을 도식화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 <그림 6-2>와 같다.

<그림 6-2> 단계별 개선과제 추진 방안



자료: 저자 작성

참고문헌

국내 문헌

- 강현주 외(2015), 경기도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확대방안 연구, 경기복지재단.
- 김기현 외(2013),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연구: 수요자 중심 전달체계 모형 개발을 중심으로, 국회예산정책처.
- 김정태(2012), 어촌지역의 농어촌서비스기준 실태와 이행실적 점검방식의 개선 방안, 농촌계획, 18(3), pp. 91-101.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2020),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 5개년 기본계획(2020~2024).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2018), 2018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 조사보고서.
- 박상우 외(2018), 인구소멸 시대의 어촌사회 정책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삶의 질 위원회(202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20년 추진실적 및 '21년 시행계획.
- 이병오 외(2013), 농촌지역 사회복지서비스의 수요와 전달체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승우·박상우(2010), 어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서비스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이태수·이미진(2012), 농촌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기초연구,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이호림 외(2021), 어촌형 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임정미(2018),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 지역포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국제사회보장리뷰.

고용노동부(2022), 2022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조미형·권인혜(2015), 농촌지역 사회복지서비스 기관의 다기능 복합화 추진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정희 외(2021), 어촌지역소멸 시대를 대비한 선제적 대응전략 연구,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한국재정정보원(2018), 국고보조금 이해하기 -제도, 사업, 시스템-, 한국재정정보원.

이상규 외(2022), 어촌어업인의 삶의 질 만족도 조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상규 외(2023), 어업인·어촌 복지서비스 개선 및 복지체계 구축 방안.

해양수산부(2022), 2022년 해양수산부 보조사업 세부지침서.

마스다 히로야(2015), 지방소멸, 김정환 역, 와이즈베리.

국외 문헌

EU Commission(2008),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IN RURAL AREAS.

House of Commons Library(2022), Statistics on access to cash, bank branches and ATMs.

Maria Jesus Rodriguez-Garcia, Clemente J. Navarro-Yanez, & Angel R. Zapata-Moya (2022), Local Welfare Systems and Health Inequalities: The Effects of Institutional Overlapping and Local Varia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9(23).

Mark Shucksmith, Polly Chapman, Gill Clark, & Stuart Black(1994), Social welfare in rural Europe, Journal of Rural Studies, 10(4), pp. 343-356.

Mark Shucksmith, Polly Chapman, Jayne Glass, & Jane Atterton(2021), Understanding financial hardship and vulnerability in rural areas, Rural Lives.

Strumpel, B.(1972), Economic behavior and economic welfare: Models and interdisciplinary approaches, Human behavior in economic affairs: Essays in honor of George Katona with concluding comments by George Katona, pp. 83-107.

인터넷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검색일: 2023.2.18.)
-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index/index.do>(검색일: 2023.2.10.)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1.11.4.),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로 맞춤형 주거복지 시작, 24시간 고령자 스마트 돌봄 시범사업 착수,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epage=2&id=95086160(검색일: 2023.2.20.).
- 경기매일(2021.12.27.), 부천시, 어른신들 환호 속에 스마트경로당 개시, <http://www.kgmaeil.net/news/articleView.html?idxno=283093>(검색일: 2022.12.14.)
- 농민신문(2020.2.2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에 거는 기대, <https://www.nongmin.com/article/20200220319861>(검색일: 2023.1.16.)
- 농민신문(2018.6.13.), [촌樂,거듭나다] 하성단노을생활문화센터, <https://www.nongmin.com/292434>(검색일: 2022.11.15.)
- 보령내일신문(2022.8.24.), 공·사 혼합 전달체계와 상,하향식 융복합 복지서비스 시스템, 수원 세모녀 사건 돌파구, <http://brnews.kr/news/view.html?section=156&category=206&item=&no=16742>(검색일: 2023.2.18.)
- 부천뉴매거진(2022.07.22.), 부천시의회 행복위, 소재울스마트경로당 방문, http://www.pucm.net/pucm/news.html?pageName=view&news_num=9976(검색일: 2022.12.14.)
- 연합뉴스(2020.6.23.), 용인시, 인공지능·사물인터넷으로 치매노인 돌본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623126500061>(검색일: 2023.2.20.)
- 완주군 블로그, <https://blog.naver.com/wanjugun/221124677358>(검색일: 2022.11.11.)
- 육성미디어 홍보동영상, 스마트 돌봄센터 원격화상강의, http://wooksungmedia.com/bbs/board.php?bo_table=movie&wr_id=26(검색일: 2023.2.20.)
- 의료·복지뉴스(2018.05.15.), 일본의 커뮤니티케어 추진과 사례, <http://www.mediwelfare.com/news/articleView.html?idxno=406>(검색일: 2022.12.05.)
- 한국농어민신문(2020.12.30.), 위드 코로나 시대, 다시 마을이다. 태안 만수동마을 어촌계,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1868>(검색일: 2022.12.01.)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econ/sumry.do?m_cd=E060; 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ente/concept.do?m_cd=E001; 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ente/company.do?m_cd=D003; https://www.coop.go.kr/home/state/guildEstablish.do?menu_no=2032&m_cd=D009(검색일: 2023.2.9.)

한경 경제용어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588010&cid=42107&categoryId=42107>(검색일: 2023.2.21.)

Access to Cash Review(2019). <https://www.accesstocash.org.uk/media/1087/final-report-final-web.pdf>(검색일: 2022.11.24.)

Dojo, <https://dojo.tech/blog/uk-cash-machine-declines>(검색일: 2022.11.24.)

Mirror(2021.6.25.), We fought the £1.75 ATM fee that left local families unable to afford food - and won, <https://www.mirror.co.uk/money/we-fought-175-atm-fee-24398796>(검색일: 2022.12.14.)

ENRD, https://enrd.ec.europa.eu/sites/default/files/enrd_publications/digital-strategies_case-study_uk_0.pdf(검색일: 2022.11.22.)

Response(2021.8.3.), 시카이마치의 자율은행버스 노선거리를 4배로 확충-LINE으로 온디맨드 서비스도 개시,(검색일 : 2023.2.3.)

The Science Times(2008.09.11.), 유럽, IT 통해 삶의 질 개선, <https://www.sciencetimes.co.kr/news/%EC%9C%A0%EB%9F%BD-it-%ED%86%B5%ED%95%B4-%EC%82%B6%EC%9D%98-%EC%A7%88-%EA%B0%9C%EC%84%A0/>(검색일: 2022.11.22.)

The Yorkshirepost(2021.9.21.), Cash is still really important: Doncaster village gets ‘vital’ new free-to-use ATM following Post Office closure, <https://www.yorkshirepost.co.uk/news/politics/cash-is-still-really-important-doncaster-village-gets-vital-new-free-to-use-atm-following-post-office-closure-3390720>(검색일: 2022.12.14.)

법령자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2022.12.2., 법률 제18527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022.12.8., 대통령령 제33023호).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2019.3.12., 법률 제15882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2023.4.19., 법률 제19012호).

협동조합 기본법(2021.1.5., 법률 제17818호).

사회적기업 육성법(2012.8.2., 법률 제11275호).

부 록

어업인 복지실태조사 설문지



ID

2022년 어업인 복지여건 실태조사

2022092003-0

안녕하십니까?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어업인 복지여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어촌에 거주하시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복지, 교육,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을 파악, 도시 및 농촌과의 비교를 통해 관련정책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응답하신 모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작성 목적 이외에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 수립을 위해 귀댁의 적극적인 협조와 정확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주신다면 우리나라 어업인 복지 향상을 위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이 조사는 해양수산부의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운영'의 일환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추진 중입니다.

* 삶의 질 향상 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여 정부 15개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범정부 조직입니다.

조사문의 (주)리서치앤리서치 엄승범 연구원 (02-3484-3076)

면접원 기본사항

본 면접 조사는 면접지침 사항 내용을 준수하여 이루어졌음을 확인 합니다

면접원 성명 : ID S/V 확인 검증원 확인 에디터확인

응답자 기본 사항

응답자 성명 연락처(유선) 연락처(핸드폰) 응답자 주소 () 시/군 () 읍/면 면접 일시 월 일 시

SQ1.	성별	1) 남성 2) 여성
SQ2.	연령	1) 19세 미만 조사 중단 2) 19~29세 3) 30~39세 4) 40~49세 5) 50~59세 6) 60세 이상
SQ3.	거주 지역	1) 부산 2) 인천 3) 울산 4) 경기 5) 강원 6) 충남 7) 전북 8) 전남 9) 경남 10) 경북 11) 제주 () 시/군/구 () 읍/면/동 () 행정리
SQ4.	도서(섬)지역 거주 여부	1)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거주 2) 육지와 연결된 섬 거주 3) 육지에 거주
SQ5.	종사 업종	1) 어선어업 2) 양식어업 3) 나잡어업 4) 갯벌어업(맨손어업) 5) 기타(↳) ※ 마을공동어업인 경우, 귀하께서 주로 참여하는 어업방식을 응답해 주십시오.
SQ6.	소속 여촌계	여촌계명 ()

PART A. 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

A01. 귀하는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서 다음의 각 부문에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매우 불만족하시면 0점, 매우 동의하시면 10점으로 하여 해당하는 번호에 V표 하여 주십시오.

부문별 만족도	매우 불만족 <----- 보통 -----> 매우 만족
1. (응급)의료서비스 이용 편의 등 보건의료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2. 건강, 소득, 생활, 보육 등 지원 복지서비스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3. 자녀 학교교육, 평생교육 등 교육 여건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4. 문화예술, 스포츠, 여행 등 문화여가 여건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5. 주택, 도로, 대중교통 등 기초생활기반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6. 자연재해, 사고, 범죄 등으로부터의 안전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7.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 등 환경경관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8. 지역사회 활동 참여, 교류 등 이웃과의 관계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9. 직업 기회, 소득, 물가 등 경제활동 여건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A02. 귀하는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의 전반적인 생활여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불만족	<----- 보통 ----->	만족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A03. 과거 5년 전과 비교하여 현재 귀하의 삶의 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좋아졌습니까? 아니면, 나빠졌습니까?

나빠졌다	<----- 보통이다 ----->	좋아졌다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A04. 귀하는 지금 얼마나 행복하다고 느끼십니까?

행복하지 않다	<----- 보통이다 ----->	행복하다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A04-1. 귀하의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 1) 가족 2) 건강 3) 경제적 안정 4) 일/직업
5) 문화 및 여가(취미)활동 6) 지역 생활환경 7) 대인관계(친구, 이웃, 지인 등) 8) 기타 (↳)

A05. 귀하는 어업인의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다음의 제도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신다면, 귀하 또는 귀댁의 가구원께서 이 사업을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구분	인지 여부	이용 경험	만족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1. 사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1) 잘 알고 있다(→)	1) 있다(→)	1)	2)	3)	4)	5)
	2) 들어본 적 있다(→)	2) 없다(↓)					
2. 사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1) 잘 알고 있다(→)	1) 있다(→)	1)	2)	3)	4)	5)
	2) 들어본 적 있다(→)	2) 없다(↓)					
3. 사업인 안전재해보상제도	1) 잘 알고 있다(→)	1) 있다(→)	1)	2)	3)	4)	5)
	2) 들어본 적 있다(→)	2) 없다(↓)					

A06. 귀하는 사업인의 **소득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다음의 제도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신다면, 귀하 또는 귀책의 가구원께서 이 사업을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구분	인지 여부	이용 경험	만족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1. 사업인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수산계 학교지원, 일자리창출 및 기술지원, 사업인 역량강화	1) 잘 알고 있다(→)	1) 있다(→)	1)	2)	3)	4)	5)
	2) 들어본 적 있다(→)	2) 없다(↓)					
2. 수산장비 임대사업: 수산장비 임대사업, 이동수리소 지원	1) 잘 알고 있다(→)	1) 있다(→)	1)	2)	3)	4)	5)
	2) 들어본 적 있다(→)	2) 없다(↓)					
3. 사업인 삶의 질 향상: 낙도지역 사업인 안전센터, 어업활동 지원, 어촌생활 돌봄 지원, 외국인어업근로자 복지회관	1) 잘 알고 있다(→)	1) 있다(→)	1)	2)	3)	4)	5)
	2) 들어본 적 있다(→)	2) 없다(↓)					

PART B. 보건의료 및 복지 관련 부문

B01. 귀책에 환자가 생길 경우,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은 어디입니까?

- 1) 보건진료소 2) 보건소(지소) 3) 보건의료원 4) 병(의)원
5) 한방병(의)원 6) 종합병원/대학병원 7) 기타(→)

B01-1. 지난 1년(2021.10.01.~2022.09.30.)을 기준으로 응답하신 의료기관을 이용한 월 평균 횟수는 얼마나 되십니까?
1) 월 1회 미만 2) 월 1~2회 3) 월 3~4회 4) 월 5회 이상

B01-2. 응답하신 의료기관으로 가는 데에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과 이동하는 데에 걸리는 편도 소요시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1)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2) 편도(한 방향) 소요시간	
1) 걸어서	2) 버스	3) 택시	4) 개인 차량	()	분
5) 기타 (→)					

※ 여러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고르고, 소요시간은 교통수단별 소요시간을 합산하여 작성

B02. 귀책에서는 지난 1년(2021.10.01.~2022.09.30.)간 지역의 보건진료소, 보건소(지소), 보건의료원 등 공공의료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 1) 있다 ☐ B02-1로 2) 없다 ☐ B03으로

B02-1. 공공의료시설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하십니까?

- 1) 매우 불만족 ☐ B02-2로 2) 불만족 ☐ B02-2로
3) 보통 4) 만족 5) 매우 만족

B02-2. 공공의료시설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해 불만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순위: () 2순위: ()

- 1) 시설·장비가 낙후되어서 2)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서 3) 전문성이 떨어져서
4) 비용이 부담되어서 5) 이용시간이 맞지 않아서 6) 위치가 좋지 않아서(멀다, 차편이 없다 등)
7) 불친절해서 8) 기타 (→)

B03. 귀댁에서는 지난 1년 동안 응급실을 이용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 1) 있음 ☐ B03-1로 2) 없음 ☐ B04로

B03-1. 응급실 이동시 이용한 교통수단과 이동하는 데에 걸린 편도 소요시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1)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2) 편도(한 방향) 소요시간
1) 구급차	2) 개인차량	3) 택시	4) 걸어서	() 분
5) 기타 (⇔)				

B04. 귀댁에 환자가 생길 경우, 그 환자의 질병치료 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2가지를 골라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 1) 치료비가 부담된다 (약값 포함) 2) 의뢰서비스의 질이 낮다 3) 적합한 의료기관을 찾기가 어렵다
4) 의료기관까지 이동이 어렵다 5) 환자를 돌볼 사람이 없다 6) 기타 (⇔)
7) 특별한 어려움이 없음

B05. 귀댁은 현재 어떤 보험에 가입하고 계십니까? 아래 보기 중에서 가입하고 있는 보험을 모두 골라 주십시오.

구분	가입	미가입	구분	가입	미가입
1. 국민건강보험	1)	2)	5. 어업인안전보험	1)	2)
2. 민영 의료보험	1)	2)	6.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1)	2)
3. 공적연금* (수급 포함)	1)	2)	7. 양식수산물재해보험	1)	2)
4. 개인연금* (수급 포함)	1)	2)			

* 공적연금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 개인연금 : 은행, 보험회사, 투신사, 증권사 등의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금융상품.

중상보험은 연금으로 전환이 가능한 금융상품으로서 개인연금의 하나로 파악할 수 있음.

B06. 다음에 대한 귀댁의 경제적 준비 정도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	(----- 보통이다 -----)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		
1. 갑작스러운 질병/사고/재해 등에 대한 준비	1)	2)	3)	4)	5)
2. 퇴직, 노후생활 등에 대한 준비	1)	2)	3)	4)	5)

B07. 귀댁에서는 지난 1년(2021.10.01.~2022.09.30.) 동안 다음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신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만족도를 함께 응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장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 2개와 그 내용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복지 서비스	이용 경험		만족도				
	없음	있음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1. 고용(취업) 지원 서비스 (직업훈련, 취업상담/알선 등)	1)	2) →	1)	2)	3)	4)	5)
2. 소득 지원 서비스 (생계비 지원, 생활자금 융자 등)	1)	2) →	1)	2)	3)	4)	5)
3. 주거 관련 서비스 (집수리, 임차료 지원, 공공/임대주택 지원 등)	1)	2) →	1)	2)	3)	4)	5)
4. 보건의료-건강관리 서비스 (방문요양/목욕/간호서비스, 노인돌보미 서비스, 상담 등)	1)	2) →	1)	2)	3)	4)	5)
5. 보육 및 교육 관련 서비스 (아이 돌봄 서비스, 농번기 주말 돌봄방, 교육비 지원 등)	1)	2) →	1)	2)	3)	4)	5)
6. 여가문화 향유 지원 서비스 (통합문화이용권, 문화예술 활동 지원 등)	1)	2) →	1)	2)	3)	4)	5)
7.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물품지원, 가정봉사서비스, 식사(반찬) 배달서비스, 교통수단 지원 등)	1)	2) →	1)	2)	3)	4)	5)
8. 기타 (⇔)	1)	2) →	1)	2)	3)	4)	5)

필요한 복지서비스 1순위	위 서비스 중 번호 :	구체적으로 :
필요한 복지서비스 2순위	위 서비스 중 번호 :	구체적으로 :

B08. 다음의 노인복지서비스 중 귀하 또는 귀댁의 어르신께서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2가지를 골라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 | | |
|------------------------------------|------------------------------|
| 1) 질병예방서비스(건강진단, 치매 조기검진 등) | 2) 질병치료서비스(방문건강관리, 만성질환관리 등) |
| 3) 방문 요양 및 간호 서비스 | 4) 주야간보호서비스 |
| 5) 가정·활동지원서비스(청소/세탁/식사준비/생필품 구매 등) | 6) 교통수단 지원(병원 동행 등) |
| 7) 노인 공동생활 서비스 | 8) 여가취미활동 서비스 |
| 9) 노인일자리 지원 | 10) 기타 (⇒) |
| 11) 필요한 서비스가 없음 | 12) 가구 내 만 65세 이상 가구원 없음 |

B09. 귀하 또는 귀댁의 장애가 있는 가구원께서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2가지를 골라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 | | | |
|-----------------|-----------------------|-------------------------|
| 1) 의료재활서비스 | 2) 재활보조기구/생활편의용품 지원 | 3) 가사지원서비스(간병인, 도우미 등) |
| 4) 이동편의지원서비스 | 5) 가족상담 및 심리재활서비스 | 6)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서비스 |
| 7) 장애자녀 학습지원서비스 | 8)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 9) 기타 (⇒) |
| 10) 필요한 서비스가 없음 | 11) 가구 내 장애 있는 가구원 없음 | |

PART C. 교육 및 문화 부문

C01. 귀댁의 자녀(손자녀)가 통학 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무엇이며, 편도 기준 통학시간은 얼마나 소요되십니까?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편도 소요시간
1) 걸어서	2) 통학버스	3) 학원버스	4) 버스	() 분
5) 개인차량	6) 자전거	7) 기타 (⇒)		

※ 여러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고르고, 소요시간은 교통수단별 소요시간을 합산

C02. 귀댁의 자녀(손자녀)는 학교 정규 수업과정을 마친 후 주로 어떻게 시간을 보냅니까?

- | | |
|--|---------------|
| 1) 학교 내 방과 후 프로그램(돌봄교실, 방과 후 학교 등) 참여 | |
| 2) 학교 외 공공기관 방과 후 프로그램(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등) 참여 | |
| 3) 사설학원 수강, 개인·그룹 과외 등 | 4) 집에서 가족과 보냄 |
| 5) 혼자 보냄 | 6) 기타 (⇒) |

C03. 귀하께서는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 중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1) 학교 시설 개선 | 2) 우수교사 확보 | 3) 지역 특성에 맞춘 교육 프로그램 개발 |
| 4)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강사) 지원 | 5) 양질의 학교 급식 지원 | 6) 기숙시설 확충 |
| 7) 통학버스 운영 | 8) 지역 소규모학교 유지 | 9) 기타 (⇒) |

C04. 귀하께서는 지난 1년(2021.10.01.~2022.09.30.) 동안 참여하신 평생교육이 있으십니까? 주로 참여하신 순서대로 2가지를 고른 뒤에 참여하신 교육의 만족도를 함께 응답해주시지요.

참여했던 교육	선택한 교육에 대한 만족도				
1순위 교육 ()	1) 매우 불만족	2) 불만족	3) 보통	4) 만족	5) 매우 만족
2순위 교육 ()	1) 매우 불만족	2) 불만족	3) 보통	4) 만족	5) 매우 만족

- | | |
|---|---------------------------------------|
| 1) 어촌생활 및 시민참여 관련 교육(어업기술교육, 마을리더/자치위원 교육, 인권 교육) | |
| 2) 정보화 및 직업능력교육(워드,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자격증 강좌, 취업/창업 준비과정 등) | |
| 3) 문해교육(한글교실, 한문교육 등) | 4) 인문교양교육(경제/경영, 역사, 철학, 외국어, 자녀교육 등) |
| 5) 문화예술교육(문화, 음악, 미술 강좌 등) | 6) 스포츠·건강교육(스포츠, 건강/의료 강좌 등) |
| 7) 기타 (⇒) | 8) 참여한 평생교육 없음 ☞ C04-2번으로 |

C04-1. [참여 교육이 있는 응답자만] 귀하께서는 지금까지 참여하신 평생교육 전반에 대해 어느 정도로 만족하십니까?

- | | | | | |
|-----------|--------|-------|-------|----------|
| 1) 매우 불만족 | 2) 불만족 | 3) 보통 | 4) 만족 | 5) 매우 만족 |
|-----------|--------|-------|-------|----------|

C04-2. [모든 응답자가 응답] 귀하께서는 참여하고 싶은 평생교육이 있으십니까? 순서대로 2가지를 응답해주시시오.

1순위: () 2순위: ()

- 1) 어촌생활 및 시민참여 관련 교육(어업기술교육, 마을리더/자치위원 교육, 인권 교육)
- 2) 정보화 및 직업능력교육(워드,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자격증 강좌, 취업/창업 준비과정 등)
- 3) 문해교육(한글교실, 한문교육 등)
- 4) 인문교양교육(경제/경영, 역사, 철학, 외국어, 자녀교육 등)
- 5) 문화예술교육(문화, 음악, 미술 강좌 등)
- 6) 스포츠-건강교육(스포츠, 건강/의료 강좌 등)
- 7) 기타 (⇒)

C05. 귀하께서 평생교육에 참여하고자 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2가지를 골라주시시오.

1순위: () 2순위: ()

- 1) 비용이 부담된다
- 2) 시간적 여유가 없다
- 3) 지역에 제공하는 시설(기관)이 없다
- 4) 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없다
- 5) 이동이 불편하다(교통 불편, 거리가 멀다 등)
- 6) 건강, 나이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다
- 7)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
- 8) 기타(⇒)
- 9) 해당없음(아려움이 없음, 사회교육을 받을 의사가 없음 등)

C06. 귀하께서는 여가시간에 주로 무엇을 하며 보내십니까? 순서대로 2가지를 응답한 뒤 여가 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함께 응답해주시시오.

주로 하는 여가활동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
1순위 여가활동 ()	1) 매우 불만족 2) 불만족 3) 보통 4) 만족 5) 매우 만족
2순위 여가활동 ()	1) 매우 불만족 2) 불만족 3) 보통 4) 만족 5) 매우 만족

- 1) 전시회 관람, 박물관 관람, 음악연주회 관람, 공연관람, 영화보기 등 문화예술 관람
- 2) 미술, 악기연주, 노래교실, 전통예술교실, 사진촬영, 춤/무용 등 문화예술활동
- 3) 경기장 방문관람, TV중계 시청 등 스포츠 관람
- 4) 게이트볼/축구/축구/탁구/헬스/등산 등 스포츠 활동
- 5) 문화유적지, 자연명승·풍경, 농촌체험, 지역축제 등 여행
- 6) 요리, 생활공예, 수집, 낚시, 바둑장기 등 취미활동
- 7) 친구·이웃과 교제, 가족친지방문, 봉사활동 등 사회활동
- 8) 산책, 낚잡, 목욕·사우나·찜질방, 음악감상 등 휴식
- 9) TV 및 라디오 시청
- 10) 독서, 신문/잡지 보기
- 11)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
- 12) 기타 (⇒)

C06-1. 귀하께서는 귀하의 전반적인 문화·여가생활에 대해 어느 정도로 만족하십니까?

- 1) 매우 불만족
- 2) 불만족
- 3) 보통
- 4) 만족
- 5) 매우 만족

C07. 귀하께서 앞으로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생긴다면 가장 하고 싶은 문화·여가활동은 무엇입니까? 다음 중에서 하고 싶은 순서대로 두 가지를 선택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1순위	번호 :	구체적으로 :
2순위	번호 :	구체적으로 :
1) 문화예술 관람 2) 문화예술 활동 3) 스포츠 관람 4) 스포츠 활동 5) 여행		
6) 취미활동 7) 사회활동 8) 휴식 9) 기타(⇒)		

C08. 귀하께서 문화·여가활동을 하고자 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 1) 비용이 부담된다
- 2) 시간적 여유가 없다
- 3) 지역에 적합한 시설(기관)이 없다
- 4) 원하는 프로그램이 없다
- 5) 이동이 불편하다(교통 불편, 거리가 멀다 등)
- 6) 건강, 나이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다
- 7)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
- 8) 기타(⇒)
- 9) 해당없음(아려움이 없음, 문화·여가활동 필요를 느끼지 않음 등)

PART D. 기초생활여건 부문

D01. 현재 거주하고 계신 주택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 1) 단독주택 ☐ D01-1로 2) 아파트 3) 연립/다세대주택 4) 기타 (⇒)

D01-1. [지붕의 종류] 주택의 지붕이 슬레이트 지붕입니까? 1) 아니오 2) 예

D02. 주택의 점유형태는 무엇입니까?

- 1) 자기 집 2) 전세 3) 월세(보증부 월세, 사글세) 4) 무상

D03. 귀책 주택의 난방 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순서대로 2가지를 골라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 1) 중앙난방 2) 지역난방 3) 도시가스 4) 기름보일러 5) 프로판가스(LPG)보일러
6) 전기보일러 7) 연탄보일러 8) 화목보일러 9) 재래식 아궁이 10) 기타 (⇒)

※ 1개인 경우 1순위만, 2개 이상인 경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1순위, 2순위 선택

D04. 1년 중 난방을 사용하는 기간은 언제이며, 그 기간의 월 평균 난방비는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1) 난방비 지출 기간	(2) 월 평균 난방비 지출 금액
() 월 ~ () 월	() 만원

※ 주거용 난방비를 기준으로 작성, 샤워/목욕이나 장마철 습기 제거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난방을 가동하는 경우 제외

D05. 현재 거주하고 계신 주택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하십니까?

구 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1. 주택 면적	1)	2)	3)	4)	5)
2. 주택 설비(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등)	1)	2)	3)	4)	5)
3. 주택 구조(공간/시설 배치, 동선 등)	1)	2)	3)	4)	5)
4. 주택 성능(단열, 냉·난방 효율 등)	1)	2)	3)	4)	5)
5. 주택 전반에 대한 만족도	1)	2)	3)	4)	5)

D06. 귀하께서는 거주하시는 주택의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면 가장 먼저 개보수해야 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1순위: () 2순위: ()

- 1) 도배, 페인트, 바닥, 창·문 교체 및 보수공사 2) 주방, 목욕탕, 화장실 보수공사
3) 보일러 교체 및 냉·난방, 단열 공사 4) 전기(누전), 누수공사
5) 상하수도 공사 6) 지붕·담장 교체 및 보수공사
7)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한 설비 개선 8) 대수선(방, 거실 등 화장, 구조나 외부 형태 변경 등)
9) 기타(⇒) 10) 주택의 개보수가 필요 없음

D07. 귀하께서 거주하고 계신 곳의 상수도 종류는 무엇입니까?

- 1) 광역/지방 상수도 2) 마을상수도(간이 상수도) 3) 자가상수도(지하수, 우물) 4) 해수담수화 5) 없음

D08. 귀하께서 거주하고 계신 곳의 하수도 종류는 무엇입니까?

- 1) 공공하수처리시설 2) 개인하수처리시설 3) 없음

D09. 귀댁에서는 다음의 쓰레기를 주로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구 분	분리배출	자체처리(투기, 매립, 소각)	기타
1. 생활쓰레기	1) 종량제봉투 사용	2)	3) (⇔)
2. 음식물쓰레기	1)	2)	3) (⇔)
3. 재활용품	1)	2)	3) (⇔)
4. 폐어구	1)	2)	3) (⇔)
5. 관광객 쓰레기	1)	2)	3) (⇔)
6. 해양 쓰레기	1)	2)	3) (⇔)

※ 음식물 쓰레기의 퇴비 활용은 '기타'에 표기

D10.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의 기초생활여건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구 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1. 상수도 수질	1)	2)	3)	4)	5)
2. 하수 처리	1)	2)	3)	4)	5)
3. 쓰레기 처리	1)	2)	3)	4)	5)
4. 대중교통 이용	1)	2)	3)	4)	5)
5. 생활서비스 이용(생필품 구입, 목욕탕, 미용시설 등)	1)	2)	3)	4)	5)
6. 정보통신여건(인터넷, 전화, TV, 라디오, 우편 등)	1)	2)	3)	4)	5)

D11. 귀하는 지금 살고 있는 마을(동네)이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마을은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1)	2)	3)	4)	5)
2. 우리 마을은 보행·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다	1)	2)	3)	4)	5)
3. 우리 마을은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하다	1)	2)	3)	4)	5)
4. 우리 마을은 환경오염으로부터 안전하다	1)	2)	3)	4)	5)

D12.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의 생활안전 개선을 위해 다음 중 가장 필요한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2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 1순위: () 2순위: ()
- | | |
|---------------------------------|--------------------------|
| 1) 도로안전시설(표지판, 횡단보도, 신호등 등) 늘리기 | 2) 가로등 설치 및 안전한 보행자길 갖추기 |
| 3) CCTV 설치 늘리기 | 4) 순찰(경찰, 주민봉사) 횡수 늘리기 |
| 5) 오래되고 낡은 건물, 시설 고치기 | 6) 빈집, 버려진 집, 방치된 빈터 관리 |
| 7) 기타 (→) | 8) 특별히 필요를 느끼지 않음 |

PART E. 지역 환경 및 공동체 부문

E01. 귀하는 지금 살고 있는 마을(동네)에서 개선해야 할 주된 환경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2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 1순위: () 2순위: ()
- | | | | | |
|----------|--------------|------------|-----------|-----------|
| 1) 대기 오염 | 2) 수질 오염(내륙) | 3) 해양 오염 | 4) 토양 오염 | 5) 소음, 진동 |
| 6) 쓰레기 | 7) 악취 | 8) 기타 (→) | 9) 특별히 없음 | |

E02. 다음의 어업·어촌의 가치 중 귀하께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2개만 골라 주십시오.

- 1순위: () 2순위: ()
- | | | |
|----------------|------------------|----------------|
| 1) 자연환경·경관의 보전 | 2) 수산자원관리 | 3) 관광·휴양 공간 제공 |
| 4) 어업 유산 보존·계승 | 5) 국토의 균형 발전 | 6) 식량의 안정적 공급 |
| 7) 해양영토 수호 | 8) 대기 중 이산화탄소 흡수 | 9) 기타(→) |

E03. 귀하께서는 가족이나 이웃과 얼마나 자주(일 외의 목적으로) 만나십니까?

구분	보기		
1. 가족, 친척(비동거)	1) 한 달에 1회 미만 4) 일주일에 1회	2) 한 달에 1회 5) 일주일에 2~3회	3) 한 달에 2~3회 6) 매일
2. 이웃, 친구, 직장동료	1) 한 달에 1회 미만 4) 일주일에 1회	2) 한 달에 1회 5) 일주일에 2~3회	3) 한 달에 2~3회 6) 매일

E04. 귀책 또는 귀하의 주변에는 귀어·귀촌인, 결혼 이민자, 이주 노동자가 살고 있습니까?

구분	우리 주변에 있음	없음	잘 모름
1. 귀어·귀촌·귀촌인(농어촌)	1)	2)	3)
2. 결혼 이민자	1)	2)	3)
3. 이주 노동자	1)	2)	3)

※ 귀어는 도시에서 어촌으로 이주하여 어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귀촌은 도시에서 전원생활 등을 목적으로 어촌으로 이주한 경우임
응답 가구가 귀어·귀촌 가구인 경우 '1) 우리 주변에 있음'을 선택함

E05. 귀하께서는 연고가 없는 외부인이 귀하의 이웃으로 함께 사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분	매우 부정적	다소 부정적	보통	다소 긍정적	매우 긍정적
1. 귀어·귀촌인(어촌)	1)	2)	3)	4)	5)
2. 결혼 이민자	1)	2)	3)	4)	5)
3. 이주 노동자	1)	2)	3)	4)	5)

E06. 귀하 또는 귀책에서는 주민들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마을 사업 및 관련 교육에 참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향후 참여하실 의사가 있습니까?

구 분	참여 경험 유무		향후 참여 의사	
	있음	없음	있음	없음
(1) 마을공동사업	1)	2)	1)	2)
(2) 마을공동사업 추진과 관련된 주민(역량)교육	1)	2)	1)	2)

※ 마을공동사업 : 일반농산어촌사업, 어촌뉴딜300사업(어촌어항재생사업), 도서종합개발사업, 어촌6차산업화,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등 마을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농촌개발사업

E07. 귀하께서는 마을공동사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을 공동 사업은	매우 부정적	다소 부정적	보통	다소 긍정적	매우 긍정적
1. 주민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된다	1)	2)	3)	4)	5)
2. 생활환경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바뀌는 데에 도움이 된다	1)	2)	3)	4)	5)
3. 주민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데에 도움이 된다	1)	2)	3)	4)	5)
4. 전반적으로 마을 발전에 도움이 된다	1)	2)	3)	4)	5)
5. 우리 가구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데에 도움이 된다	1)	2)	3)	4)	5)

E08. 귀하께서는 현재 거주하고 계신 지역의 전반적인 발전 정도를 (타 지역과 비교할 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1) 매우 낙후되어 있음 2) 낙후된 편임 3) 보통임
4) 발전된 편임 5) 매우 발전된 수준

PART F. 경제활동 부문

F01. 귀하 또는 귀댁에서는 다음의 사업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경험하신 사업에 대해서는 만족도를 표시 해주십시오. 그리고 향후(예도) 다음의 사업을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구분	경험유무	만족도					향후 활동 의사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1. 어가의 수산물 가공	1) 있다(→) 2) 없다(→)	1) — 2) —	2) — 3) —	3) — 4) —	4) — 5) —	5) — →	1) 있다 2) 없다
2. 수산물 직거래(유통/판매), 로컬푸드	1) 있다(→) 2) 없다(→)	1) — 2) —	2) — 3) —	3) — 4) —	4) — 5) —	5) — →	1) 있다 2) 없다
3. 어촌 체험관광	1) 있다(→) 2) 없다(→)	1) — 2) —	2) — 3) —	3) — 4) —	4) — 5) —	5) — →	1) 있다 2) 없다
4. 음식 판매 (어촌계·어가) 레스토랑, 맛집)	1) 있다(→) 2) 없다(→)	1) — 2) —	2) — 3) —	3) — 4) —	4) — 5) —	5) — →	1) 있다 2) 없다
5. 숙박 제공 (농어촌 민박 운영)	1) 있다(→) 2) 없다(→)	1) — 2) —	2) — 3) —	3) — 4) —	4) — 5) —	5) — →	1) 있다 2) 없다

F01-1. 귀하께서 위 사업을 하시면서, 또는 하고자 할 때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F01번 경험유무에서 한 개라도 '있음'을 선택한 경우)

- 1) 자금 부족 2) 기획력 및 기술력 부족 3) 경영관리 역량 부족 4) 시설/설비 부족
5) 행정·제도 복잡 6) 관련 규제에 의한 제약 7) 고객·판로 확보(홍보 및 마케팅) 8) 인력 부족
9) 참여자 간 갈등 10) 기타 (→)

F02. 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 중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할 영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지역 특화상품 개발 2) 어촌의 스마트화(스마트 빌리지) 3) 양식단지 조성
4) 기업(민자)의 수산업 투자/유치 5) 어촌관광 개발, 품질 제고 6) 수산물 유통/판매 활성화
7) 어촌 일자리 창출 등 고용 여건 개선 8) 기타(→)

F03. 2021년('21.1.1. ~ 12.31.) 소득을 기준으로 귀댁의 연간 가구소득은 얼마나 됩니까?

연간 가구소득	만원
---------	----

※ 연간 가구소득은 모든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연금, 자녀로부터의 용돈 등의 합계임

F03-1. 귀댁은 어업만을 하고 계십니까(전업), 혹은 어업 외 다른 일도 하고 계십니까?

- 1) 전업 ☒ F04로 2) 겸업 ☒ F03-2로

F03-2. 어업 외 종사하시는 일의 형태와 소득 구조는 어떠합니까?

(1) 어업 외 직종의 형태	1) 자영업	2) 임금근로(□상용 □임시 □일용)
(2) 소득 구조 : 1)+2)+3)의 합이 100%	1) 어업 소득 ()%	2) 어업 외 소득 ()%
	3) 기타 소득 ()%	

F04. 2021년('21.1.1. ~ 12.31.) 기준으로 귀댁의 연간 어업 관련 지출(경영비)은 얼마나 됩니까?

연간 어업관련 지출(경영비)	만원
-----------------	----

F05. 현재 귀댁의 어업 관련 경영 상황은 어떻습니까?

- 1) 매우 나쁜 편이다 2) 나쁜 편이다 3) 보통이다
4) 좋은 편이다 5) 매우 좋은 편이다

F06. 2021년(2021.1.1.~2021.12.31.)을 기준으로 귀댁의 생활비에서 가장 부담이 되는 항목은 무엇입니까? 부담이 큰 순서대로 2가지를 골라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 1) 식료품비 (주식류, 부식류, 외식비 등)
2) 보건의료비 (병원치료비, 약값, 의치, 보청기, 영양제, 보약비 등)
3) 광열수도비 (전기요금, 수도요금, 냉/난방연료비 등)
4) 교육비 (학비, 학원비, 과외비, 자녀용돈, 책값 등)
5) 교통/통신비 (대중교통비, 자동차 구입 및 수리비, 유류비, 전화/휴대폰/인터넷요금 등)
6) 기타(⇨)

PART G. 영유아 양육환경

G01. 귀댁에 만0세(2022년생) ~ 만5세(2016년생)의 미취학 자녀가 있습니까?

- 1) 있다 2) 없다 **응답자 특성으로 이동**

G02. 미취학 자녀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자녀부터 순서대로 기재해 주십시오.

구분	연령(만)	성별	기관 이용 현황	장애 여부
자녀1	1) 0세(생후 12개월 미만) 2) 만1세(12~24개월 미만) 3) 만2세(24~36개월 미만) 4) 만3세(36~48개월 미만) 5) 만4세(48~60개월 미만) 6) 만5세(60개월~취학 전)	1) 남 2) 여	1) 어린이집 2) 유치원 3) 기타 기관() 4) 기관 이용하지 않음	1) 장애 있음 2) 장애 없음
자녀2	1) 0세(생후 12개월 미만) 2) 만1세(12~24개월 미만) 3) 만2세(24~36개월 미만) 4) 만3세(36~48개월 미만) 5) 만4세(48~60개월 미만) 6) 만5세(60개월~취학 전)	1) 남 2) 여	1) 어린이집 2) 유치원 3) 기타 기관() 4) 기관 이용하지 않음	1) 장애 있음 2) 장애 없음
자녀3	1) 0세(생후 12개월 미만) 2) 만1세(12~24개월 미만) 3) 만2세(24~36개월 미만) 4) 만3세(36~48개월 미만) 5) 만4세(48~60개월 미만) 6) 만5세(60개월~취학 전)	1) 남 2) 여	1) 어린이집 2) 유치원 3) 기타 기관() 4) 기관 이용하지 않음	1) 장애 있음 2) 장애 없음

G03. 귀 댁에서 자녀를 주로 돌보는 사람(주 양육자)은 누구입니까?

- 1) 부 2) 모 3) 조부모 4) 기타 친인척 5) 친척 아닌 돌보미

※ 다음은 가구 내 영유아의 기관 이용 경험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댁의 첫째 자녀를 기준으로 다음 질문에 답해 주십시오.

G04. 현재 귀댁의 자녀는 어떤 기관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 1) 공립(병설)유치원 2) 사립유치원 3) 국공립어린이집 4) 법인 어린이집
5) 민간어린이집 6) 가정어린이집 7) 기타() 8) 이용 중인 기관 없음 **G05-4로**

G05-1. 자녀의 기관 등하원 방법 및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1시간 미만일 경우 시간에 0을 기입해 주세요)

구분	등원	하원	비고
등하원시 이용하는 교통수단	1) 기관 차량	1) 기관 차량	☐ G05-2로
	2) 도보 3) 자가 차량 4) 기타()	2) 도보 3) 자가 차량 4) 기타()	☐ G05-3로
평균 기관까지 이동 시간	() 시간 () 분	() 시간 () 분	
평균 등하원 시간	() 시 () 분	() 시 () 분	

G05-2. 자녀가 다니고 있는 기관의 통학차량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구분	불만족 <----- 보통 -----> 만족
1. 전반적 만족도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2. 이동 시간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3. 차량 안전성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G05-3. 자녀가 다니고 있는 기관의 등원 또는 하원 시 통학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기관이 통학차량을 운행하지 않음 2) 기관 통학차량이 우리 마을로는 오지 않아서
3) 통학차량 이용이 안전하지 않을 것 같아서 4) 통학차량은 너무 오래 타야하므로
5) 기타()

G05-4. 귀하의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는다면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아이가 너무 어려서 2) 어린이집, 유치원이 너무 멀어서
3) 집에 돌볼 사람이 있으므로 4) 집에서 돌보는 것이 아이에게 좋을 것 같아서
5) 영아학원 등 다른 기관에 보내고 싶어서 6) 보내고 싶으나 정원이 차서 자리가 없어서
7) 보내고 싶으나 보낼만한 곳이 없어서 8) 기타(⇒)

G06. (G04=1~7 기관이용 응답자만) 자녀가 이용하는 기관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신 점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 1) 원장 및 교사 2) 운영시간 3) 비용(교육·보육료 등) 4) 교육·보육 프로그램
5) 건강·영양(급식·간식 등) 6) 기관 학급 규모 7) 실내외 환경 8) 집과의 거리
9) 국공립 여부 10) 주변 평판 11) 차량운행 여부 12) 특별활동(방과후특성화활동)
13) 기타(⇒)

G07. (G04=1~7 기관이용 응답자만) 자녀가 다니는 기관(유치원, 어린이집 등)에서 가장 개선하여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 1) 원장 및 교사 2) 운영 시간 3) 비용(교육·보육료 등) 4) 교육·보육 프로그램
5) 건강·영양(급식·간식 등) 6) 실내외 환경 7) 차량 운행 여부 8) 특별활동(방과 후 특성화 활동)

G08. 다음은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영유아 양육지원 위한 기관들입니다. 각각에 대해, 귀하나 자녀가 **이용한 적이 있는지** 여부와, **이용하신 경우 만족하는 정도**를 응답해주시시오.

구분		이용 경험		이용 만족도				
		없음	있음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육아종합 지원센터	1. 장난감 도서관	1)	2) →	1)	2)	3)	4)	5)
	2. 도서 대여	1)	2) →	1)	2)	3)	4)	5)
	3. 시간제 보육	1)	2) →	1)	2)	3)	4)	5)
	4. 부모교육/ 체험 활동 및 참여 프로그램	1)	2) →	1)	2)	3)	4)	5)
건강가정 지원센터	5. 가족교육 및 가족·부모·자녀 상담	1)	2) →	1)	2)	3)	4)	5)
	6. 공동육아 나눔터	1)	2) →	1)	2)	3)	4)	5)
	7. 아이돌봄 서비스	1)	2) →	1)	2)	3)	4)	5)
	8.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	2) →	1)	2)	3)	4)	5)

- ※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역사회 내 어린이집 지원관리 및 보호자의 가정양육지원을 위한 육아지원서비스 제공(어린이집 지원, 가정양육 지원, 기타 양육 콘텐츠 제공 및 상담 제공)
 ※ 장난감 도서관: 영유아의 연령 및 발달에 적합한 장난감을 무료로 대여
 ※ 도서 대여: 영유아의 연령 및 발달에 도서를 무료로 대여
 ※ 시간제 보육: 긴급상황 발생시 일시적으로 보육을 제공하는 서비스
 ※ 부모교육: 영유아자녀 및 가정의 안정된 복지를 지원하고 건강한 양육기술을 습득을 위해 자녀권리존중, 아동학대 예방, 양육정보 등을 제공
 ※ 체험 활동 및 참여 프로그램: 아이 및 부모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과 가족 대상 행사
 ※ 건강가정지원센터: 여성가족부가 시행하는 가족정책의 주요 전달체계로서 다양한 가족지원 정책을 제언 및 실행하기 위한 기관(가족교육, 가족상담, 가족돌봄나눔, 다양한 가족지원, 가족역량강화지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아이돌봄지원사업 등)
 ※ 가족교육: 가족 내의 문제 예방 및 가족 관계향상, 의사소통방법, 역할지원 등 가족 구성원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생애주기별 교육
 ※ 가족·부모·자녀 상담: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부부상담, 부모-자녀 간 문제해결을 위한 부모자녀상담, 임신·출산·양육에 따른 갈등상담, 이혼전·후 갈등상담 등 생애주기에 따라 발생하는 가족 내 다양한 갈등과 문제에 대해 상담
 ※ 공동육아나눔터(육아플러스이): 부모 등 양육자들이 모여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를 함께 돌보는 활동을 통해 가족 기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하고 제공하는 사업
 ※ 아이돌봄서비스(아이돌보미):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사업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한국어 교육, 통역번역, 상담 및 사례관리, 결혼이민자 대상 사회 적응교육, 취업교육 지원, 가족교육)

G09. 영유아가 있는 가구의 육아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설문 문항	필요성 낮음	(----- 보통 -----)	필요성 높음
1. 어린이집·유치원 등 육아지원 인프라 확대 (예: 어린이집, 유치원,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등 확대)	0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2. 영유아 가구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확대 (예: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보육료·교육비 지원 등 확대)	0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3. 육아지원 서비스의 질 제고 (예: 육아지원 서비스 제공 인력, 프로그램의 질 향상)	0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4. 가정 양육 지원 확대 (예: 가정 양육 가구 이용 서비스 확충, 부모교육, 상담, 정보 제공 등 서비스)	0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5. 보육·교육, 육아지원 서비스의 다양화 (예: 시간제 보육, 아이돌보미 등)	0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6.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예: 유연근무제, 육아휴직제 등 확대)	0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7. 남성의 양육참여 지원 확대 (예: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 지원 확대, 직장의 근로문화 개선)	0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PART H. 분만의료 환경

H01. 귀댁에서는 최근 5년 내(2018~2022년 사이)에 출산을 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 1) 있다 2) 없다 ☐ 응답자 특성으로 이동

H02. 귀댁에서 분만한 산부인과 병원까지의 이동시간은 자택에서 얼마나 됩니까? ()분

H03. 귀하가 거주하시는 지역에서 분만의료 및 출산환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실 때,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0점~10점까지 점수를 매겨 주십시오.

※ '지역'은 살고 있는 '마을'을 중심으로 거주 '시·군'까지의 범위를 의미합니다.

부문	우리 지역에서는	그렇지 않다	<----- - ----->	보통	-----> 그렇다							
분 만 의 료	1.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 병원이 가깝고 이동하기 편리하다	0	1	2	3	4	5	6	7	8	9	10
	2. 분만의료 서비스 수준이 만족스럽다	0	1	2	3	4	5	6	7	8	9	10
	3. 우리 지역에 있거나 가장 가까운 산부인과 병원의 전문의 등 분만의료인력은 전문성과 서비스 수준이 만족스럽다	0	1	2	3	4	5	6	7	8	9	10
	4. 분만 이외의 일반적인 산부인과 진료 서비스 수준이 양호하다	0	1	2	3	4	5	6	7	8	9	10
	5. 임신, 분만 중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응급시설까지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다	0	1	2	3	4	5	6	7	8	9	10
	6. 전반적인 분만의료 여건은 만족스럽다	0	1	2	3	4	5	6	7	8	9	10
출 산 환 경	7. 분만 이후 산후조리원, 산후도우미 등 산후조리 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다	0	1	2	3	4	5	6	7	8	9	10
	8. 임신, 분만 지원 혜택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고 신청도 편리하다	0	1	2	3	4	5	6	7	8	9	10
	9. 출산 지원을 위한 교통수단 혹은 숙박시설 서비스를 잘 지원하고 있다	0	1	2	3	4	5	6	7	8	9	10
	10. 임신부와 영유아 건강 관리, 보육방법 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잘 제공한다	0	1	2	3	4	5	6	7	8	9	10
	11. 취약한 여건에 있는 임신부(고위험, 미혼,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에 대한 출산, 육아 관련 복지 혜택이 양호하다	0	1	2	3	4	5	6	7	8	9	10
	12. 우리 지역의 전반적인 출산환경은 만족스럽다	0	1	2	3	4	5	6	7	8	9	10

H04.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의 분만의료 및 출산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 정책 방향은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문	구분	그렇지 않다	<-----	보통	----->	그렇다						
분 만 의 료	1. 우리 지역 혹은 가까운 지역에 분만가능한 산부인과 병원 운영 유지 혹은 개설	0	1	2	3	4	5	6	7	8	9	10
	2. 분만산부인과에 마취과, 신생아 소아과 전문의와의 원활한 협진체계 구축	0	1	2	3	4	5	6	7	8	9	10
	3. 산부인과 전문의 등 분만 의료인력 확보	0	1	2	3	4	5	6	7	8	9	10
	4. 임신, 분만 중 응급상황에 원활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분만 관련 응급진료체계 구축	0	1	2	3	4	5	6	7	8	9	10
	5. 고령, 기저질환, 장애인 등 고위험 산모 혹은 고위험 신생아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체계 구축	0	1	2	3	4	5	6	7	8	9	10
출 산 환 경	1. 분만병원과 산후조리원과의 원활한 연계체계 구축	0	1	2	3	4	5	6	7	8	9	10
	2. 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 조성	0	1	2	3	4	5	6	7	8	9	10
	3. 지자체 차원에서 출산 지원을 위한 교통수단 혹은 교통비 지원, 숙박시설 지원 등 연계지원 확대	0	1	2	3	4	5	6	7	8	9	10
	4. 취약계층 산모에 대한 임신, 분만 혹은 출산 이후 육아·보육 등 복지 지원 확대	0	1	2	3	4	5	6	7	8	9	10

응답자 특성

DQ01. 귀택의 가구주는 누구십니까?

- 1) 본인 2) 배우자 3) 부모 4) 조부모 5) 기타()

※ 가구주란 법적 세대주 여부와 상관없이 가구의 중대사를 결정하거나 생계를 책임지는 등 그 가구의 실질적인 대표자를 말합니다.

DQ02. 귀하께서는 결혼하셨습니까?

- 1) 배우자 있음 **☞ DQ2-1로** 2) 배우자 없음(미혼, 사별 등)

DQ02-1. 귀하께서는 국제결혼을 하셨습니까? 국제결혼인 경우 배우자의 결혼 전 국적은 어디입니까?

- 1) 아니다 2) 그렇다(⇒ 배우자의 결혼 전 국적:)

DQ02-2. 귀하께서는 현재 배우자와 함께 동거 중입니까?

- 1) 동거 2) 비동거

DQ03. 귀하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1) 초등학교 졸업 이하 2) 중학교 졸업(중퇴 포함) 3) 고등학교 졸업(중퇴 포함)
4) 대학교 졸업(중퇴 포함) 5) 대학원 이상

DQ04. 귀하께서는 어업 이외의 다른 분야에 종사하고 계십니까?

- 1) 아니다. 어업만 전업 2) 그렇다. 다른 분야에도 종사 **☞ DQ4-1로**

DQ04-1. 어업 이외의 종사 분야 중 소득이 많은 순서대로 2가지 골라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 1) 농림업 2) 자영업 3) 사무 관리 4) 생산/기능/노무 5) 판매/영업
6) 서비스 7) 전문/기술직 8) 기타()

DQ05. 귀택은 지금 거주중인 곳에서 언제부터 살고 계십니까?

※ 실제 거주지 기준이며, 여성 응답자가 혼인 시 이주하여 계속 사는 경우는 가구주(남편)를 기준으로 작성함

- 1) () 년도부터 살고 있다
2) 현 거주지가 고향이지만 외지에 나갔다가 () 년도부터 살고 있다
3) 현 거주지가 고향이다 **☞ DQ06로**

DQ05-1. 지금 거주중인 곳 직전에 거주했던 곳은 어디입니까?

- 1) 현재 살고 있는 시/군 내 2) 다른 시/군의 농어촌(읍/면)
3) 중소도시(동) 4) 대도시(특별시, 광역시)

DQ06. 귀택은 향후 5년 안에 다른 곳으로 이주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 1) 있다 **☞ DQ06-1로** 2) 없다 **☞ DQ07로** 3) 잘 모르겠다 **☞ DQ07로**

DQ06-1. 어디로 이주할 생각이십니까?

- 1) 현재 살고 있는 시/군 내 2) 다른 시/군의 농어촌 읍 지역 3) 다른 시/군의 농어촌 면 지역
4) 중소도시(동) 5) 대도시(특별시, 광역시) 6) 기타 (해외파견, 이민 등)

DQ06-2. 다른 곳으로 이주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취업, 직장 이동, 창업 등 직업 관련 사유 2) 주택 구입, 계약 변동, 재개발 등 주택 관련 사유
3) 가구원의 분가/합가/출생, 사망 등 가족 관련 사유 4) 교통, 편의시설 등 생활환경 관련 사유
5) 이웃과의 관계 관련 사유(갈등·불화 등) 6) 자녀교육 때문에
7) 가정경제 상황의 변화로 8) 건강상의 이유로
9) 기타 (⇔)

DQ07. 귀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입니까? 혹은 가구원 중에 수급자가 있습니까?

- 1) 일반수급가구 2) 차상위계층 3) 해당없음

DQ08. 귀댁의 가구원 구성은 어떻게 되십니까?

관계	본인	조부모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손자녀	기타()
인원								

※ 세대구분만 하며, 응답자 본인을 기준으로 작성. (예: 응답자의 자녀1과 그 아들1 + 자녀2와 그 딸1 ⇨ 자녀 2명, 손자녀 2명)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본연구보고서 발간목록

Ⅰ 2022년

01	선박투자 가치평가 및 위험관리 모형 연구	박성화
02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 예약시스템 가격결정 모형 연구	서정용
03	연안재해 대응을 위한 그린인프라 구축방안 연구	정지호
04	탄소중립이 해양수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분석 연구	권장한
05	수산물 안전성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조현주
06	준해양사고 통보제도 개선방안 연구	박상원
07	MZ세대 소비트렌드를 반영한 해양관광 추진방안 연구	최일선
08	연근해 어종별 어획쿼터제도 도입방안 연구	심성현
09	행위자기반 해양공간계획 시뮬레이션 개발 연구	조성진
10	항만분야 탄소중립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안승현
11	탄소중립 시대 양식산업 대응전략 연구 - 육상 어류양식을 중심으로 -	마창모
12	수산식품산업의 탄소중립 대응방안 연구 - 가공업을 중심으로 -	김지연
13	해양환경보전정책 도입방안 연구	박수진
14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컨테이너 해운산업 대응방안 연구 - 디지털 플랫폼을 중심으로 -	최건우
15	항만분야 공공갈등 관리방안 연구	김세원
16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와 국제물류 분야 대응방안 연구 - 전기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	권보배
17	항만개발제도 개선방안 연구	이수영
18	클러스터 혁신을 통한 선박관리업 발전방안 연구	허성례
19	수입수산물 예방적 관리체계 도입방안 연구 - IUU 수산물을 중심으로 -	안지은
20	양식수산물 유통 빅데이터 구축방안 연구	이기영
21	글로벌 혁신성장을 위한 신남방·신북방 정책 연구 - 신남방 지역 ICT산업 가치사슬 변화에 따른 물류 공급사슬 대응방안	최나영환

2021년

01	시민참여형 해안돌봄 정책 도입방안 연구	정지호
02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가 선박 운항에 미치는 영향분석 연구	김보람
03	여성어업인 노동정책 방향 연구	홍혜수
04	순환경제 시스템을 활용한 어업폐기물의 자원화 방안 연구	고동훈
05	1conomy 시대, HMR 시장 확대에 따른 수산부문 대응전략 수립 연구	마창모
06	AIS 데이터 기반 해상교통 안전 평가모델 개발 연구	황선일
07	항만 에너지 관리시스템 도입을 위한 로드맵 구축 연구 - 부산항 신항 전기에너지 소비를 중심으로 -	김근섭
08	해양분야 리빙랩 활성화 방안 연구	좌미라
09	빅데이터의 연계·활용을 통한 선박의 배출량 산정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안용성
10	해양공간계획 집행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최희정
11	수산식품산업 푸드테크 환경분석 및 적용전략 연구	이상건
12	AIS데이터기반 해상물동량 추정 연구	황수진
13	항만부문 정책의사결정 지원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방안 연구	이기열
14	항만 컨테이너 물류 프로세스 디지털화 모형 연구	서정용
15	해양수산 분야 국제산업연관표 구축기반 연구	정수빈
16	해양수산 과학기술 정책평가모형 연구 - 해양수산 R&D를 중심으로 -	전형모
17	글로벌 경제위기와 해운산업 대응체계 연구	박성화
18	항만산업 경기진단체계 구축 연구 - 경기동행지수 개발을 중심으로 -	김성아
19	전국 무역항 부두 분류 체계 개선방안 연구	이수영
20	IMO 규제기반 해사산업의 글로벌 지속발전방안 연구 - 新해사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법제화 연구(5차년도) -	박한선
21	수소에너지 거점 구축을 위한 항만의 대응방안 연구	신수용

수시연구보고서 발간목록

Ⅰ 2022년

01	항만의 탄소중립 이행·관리 표준안 연구	안용성
02	매립지 소유권 분리 제도화의 이해관계 분석과 관리방안	윤성순
03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별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 에너지·곡물을 중심으로	조지성
04	대북제재 강화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북한 해양수산 이슈와 대응 방안	윤인주
05	남극환경보호의정서 제6부속서의 국내 이행을 위한 법제 정비방안 연구	박예나
06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해양생명자원법 정비 방안 연구	좌미라
07	우리나라 수산종자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조현주
08	2050 신해양강국 미래비전 수립 연구	김민수

Ⅰ 2021년

01	해양환경산업 육성 방안 연구	한기원
02	선원의 인권 및 근로여건 향상을 위한 선원근로감독관 제도 개선 방안 연구	허성례
03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지역 해양축제 활성화 연구	최일선
04	회복탄력성 개념을 적용한 항만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 연구	김성기
05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항만에서의 대응방안 연구	최상균
06	크루즈산업 COVID-19 방역체계 구축방안 연구	황진희
07	한국형 선주사의 최적 운영방안 연구	고병욱
08	어촌형 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연구	이호림
09	원양산업의 ESG 도입 기초 연구	윤미경
10	수상레저활동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홍장원
11	연안지역 자연성 회복을 위한 정책 방향_간척지·담수호 중심으로	정지호
12	스마트항만 구축에 따른 탄소저감 효과 연구 - 동력전환을 중심으로 -	김가현

일반연구보고서 발간목록

Ⅰ 2022년

01	건화물선 시장 비용분석을 통한 해운시장 위험관리지표체계 구축	류희영
02	해상운임 예측모형 고도화 연구(Ⅰ)	황수진
03	IMO 시장기반조치 도입이 국내 해운기업에 미치는 영향	김한나
04	연안지역발전지수(CoDI) 개발 연구	황재희
05	CGE 기반 국제통상환경 변화의 해양수산물 부문 파급효과 분석	임병호
06	글로벌 수산물 이머징 이슈 분석 모델 개발 연구	한기욱
07	양식 수산물 중장기 수급전망모형 구축 연구 - 굴을 중심으로 -	김철현
08	Network DEA를 이용한 물류기업 경쟁력 비교 분석 연구	황선일
09	해양수산물 사업체 성과 및 효율성 분석 연구	김주현
10	베이지안 방법을 이용한 양식 명계 단수 추정방안 연구	천성훈
11	수입수산물과 국산 간의 대체관계 분석 연구 - 활·신선냉장품을 중심으로 -	박혜진
12	국내 컨테이너 해운기업의 디지털 전환 활성화 방안 연구	전서연
13	비컨테이너 항만물동량 예측모형 고도화 방안 연구(Ⅰ) - 자동차, 석탄, 고철, 시멘트를 중심으로 -	최석우
14	해양수산물 분야 미래 리스크 발굴 및 파급효과 분석 연구(Ⅱ)	김찬호
15	항만개발사업의 정책효과 적용방안 연구	이종필
16	국가 해양전략 기본구상 연구	정현욱
17	선박대기시간 예측모형 개발을 위한 방법론 연구	조아현
18	안전항만 구축을 위한 비용 산정 및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	최상균

Ⅰ 2021년

01	해양수산 정책영향평가를 위한 기초 연구	김주현
02	해양교육의 사회·경제적 가치 평가 연구	이슬기
03	해양수산업 경기진단체계 기초연구 - 해운업을 중심으로 -	권장한
04	선박 기술진보를 고려한 탄소 배출량 추정 연구	최건우
05	서포트벡터머신(SVM) 기법을 활용한 해운시황 예측 연구	김병주
06	크루즈 여객 수요 전망 모형 구축 연구	안승현
07	디지털 공급사슬 물류정보통합 구축전략 연구(Ⅲ)	서정용
08	수출용 전복의 유통경로 분석 연구	이정필
09	인공지능기반 해상운임 예측 연구(3차년도)	황수진
10	인공신경망모형을 이용한 양식수산물 단수 전망에 관한 연구 - 김 양식을 중심으로 -	천성훈
11	해양수산분야 미래 리스크 발굴 및 파급효과 분석 연구	박광서

연구개발적립금연구 2022-02

어업인 복지실태조사 연구

인쇄 2023년 3월 29일

발행 2023년 3월 31일

발행인 김 종 덕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주소 49111 부산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연락처 051-797-4800 (FAX 051-797-4810)

등록 1984년 8월 6일 제313-1984-1호

조판·인쇄 디자인글꼴 (051-636-1210)

판매 및 보급: 정부간행물판매센터 Tel: 02-394-0337

정가 15,000원

